2023 경제전망 I

2023 Economic Outlook I

[지출 부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경제전망 Ⅰ

- 지출 부문 -

2023 경제전망 Ⅰ
- 지출 부문 -

총 괄 | 진 익 경제분석국장

기획 · 조정 | 이 상 은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직무대리
정 원 철 경제분석관
황 종 률 경제분석관

작 성 |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황 종 률 경제분석관
김 원 혁 경제분석관
박 선 우 경제분석관
이 진 희 경제분석관

지 원 | 정 은 희 행정실무원
방 지 원 자료분석연구원

「2023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02) 6788-3775 | macro@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 경제전망 Ⅰ

- 지출 부문 -

2023. 3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3. 2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최근 국내경제는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부정적 여파가 2023년에도 큰 부담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경제는 재개방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주변국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시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과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발간 이후 변화된 국내외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총 4권으로 구성된 「2023년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제 I 권에서는 국내경제를 소비와 투자, 수출입 등 지출 측면에서 분석·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1.5%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전망(2.1%)보다 상당폭 낮게 조정된 것입니다. 지출부문별로는 민간소비를 제외한 정부소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수출 등에서 예상보다 악화된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이전 전망보다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내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물가안정목표 2%를 웃돌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안정을 통해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보고서가 효율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NABO 2023년 지출 부문별 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4.1	3.0	2.2	2.6	1.2	1.8	1.5
민간소비	3.7	4.1	4.5	4.3	3.1	1.8	2.4
정부소비	5.6	5.2	3.0	4.1	3.6	3.0	3.3
건설투자	-1.6	-4.5	-2.6	-3.5	-2.4	0.3	-1.0
설비투자	9.0	-6.4	5.6	-0.5	0.7	-3.2	-1.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6	4.9	4.7	3.9	4.0	4.0
총수출	10.8	6.0	0.7	3.2	-0.5	5.7	2.7
총수입	10.1	3.5	4.0	3.7	3.2	5.0	4.2
경상수지(억달러)	852	249	50	298	-38	237	200
상품수출(통관)	25.7	15.6	-2.4	6.1	-10.2	1.0	-4.8
상품수입(통관)	31.5	26.4	12.4	18.9	-6.8	-5.2	-6.0
GDP디플레이터	2.5	2.2	0.3	1.2	2.4	1.9	2.2
소비자물가	2.5	4.6	5.6	5.1	4.1	3.0	3.5
명목 국내총생산(GDP)	6.7	5.2	2.5	3.8	3.7	3.7	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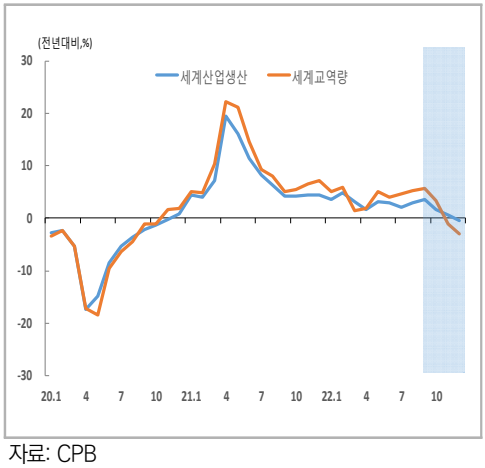
Ⅰ. 대내외 경제여건

1. 세계 경제여건

❑ 세계 경제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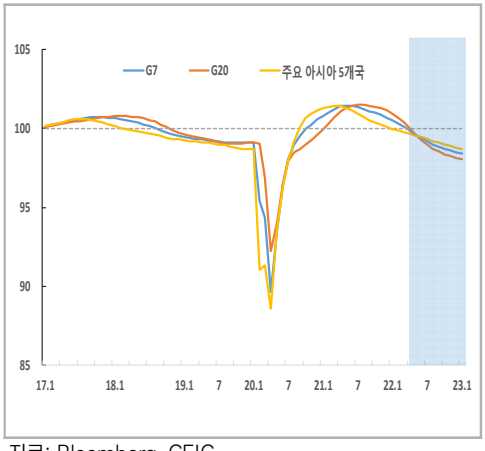
- ○ 주요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긴축기조 강화
- ○ 세계 산업생산과 세계교역량은 2022년 11월 이후 감소 전환
- ○ 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은 오름세가 진정

[세계 산업생산과 세계 교역량 추이]



자료: CPB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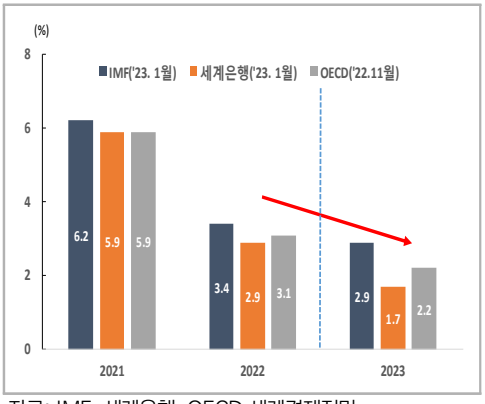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 2023년 세계 경제는 2022년에 이어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3%, 세계교역량은 2.0% 증가 예상되나, 세계 경기 둔화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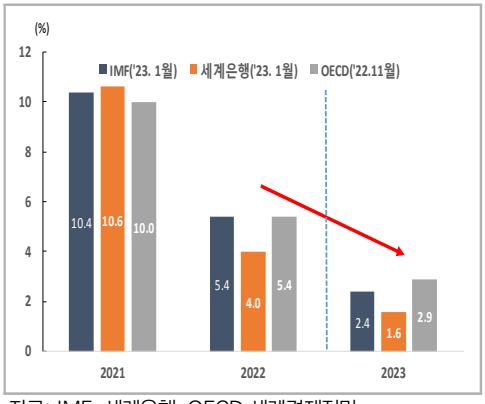
요 약

[국제기구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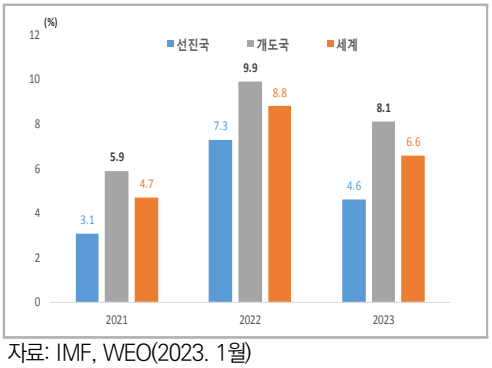
[국제기구의 세계 교역량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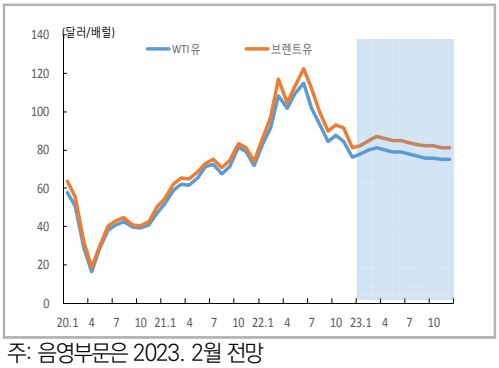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6%로 전제
- 국제유가는 배럴당 84달러, 곡물 등 기타원자재가격은 전년대비 7.2% 하락 예상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IMF, WEO(2023. 1월)

[국제유가 전망]



주: 음영부문은 2023. 2월 전망
자료: EIA

❑ 전망의 위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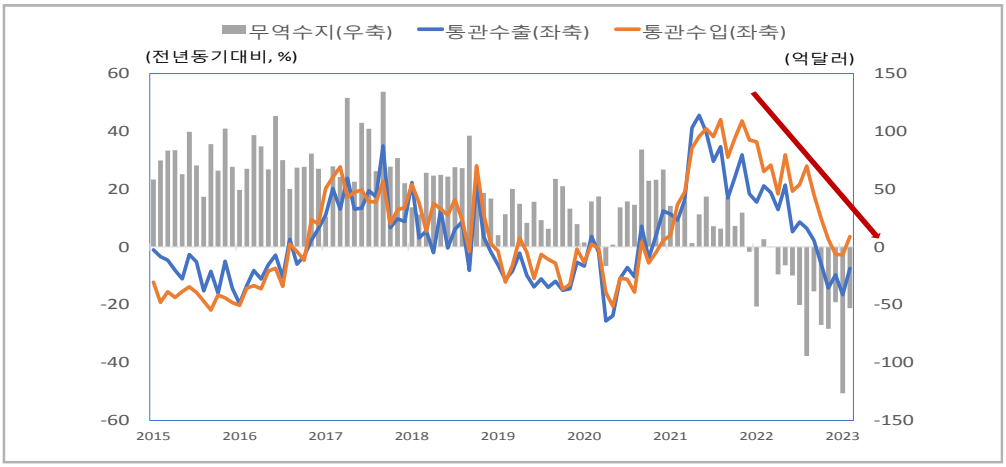
- (상방요인) 중국경제 재개방에 따른 성장세 회복과 긍정적 파급효과 확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진정 및 통화 긴축 종료 등
- (하방요인)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및 통화 긴축 기조 유지, 미 달러화 가치상승과 신흥국 물가 및 금융 불안 심화,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 격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2. 국내 경제여건

❑ 2022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하면서 성장세가 둔화

- ○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하반기 들어 수출부진, 교역조건 악화, 금리인상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성장세가 둔화
- ○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가파르게 하강
- ○ 서비스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경기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자료: 통계청

❑ 내수와 수출입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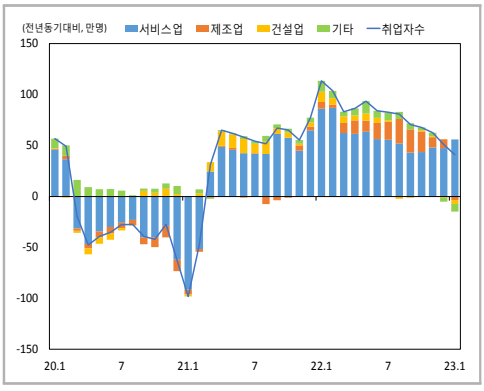
- ○ 소비지표는 2022년 하반기 중 하강 신호가 뚜렷하며 민간소비(국민계정)도 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
  - - 일상회복 등 일회성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향후 소비지표의 하강흐름이 가속화할 예상
- ○ 수출은 2022년 하반기 들어 부진이 심화하고 있으며 수입도 같은 기간중 증가율이 크게 하락
- ○ 무역수지는 2022년 중 47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도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폭이 크게 축소
  - - 서비스수지는 최근 컨테이너 운임이 낮은 수준인 데다 해외여행객도 빠르게 늘고 있어 적자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

요 약

❑ 고용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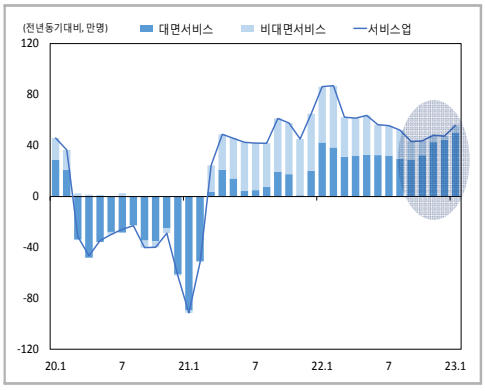
- ㅇ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2년 상반기 매월 60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40만 명 선으로 하락
- ㅇ 일상회복이 본격화된 4분기 이후로는 대면서비스업이 개선을 주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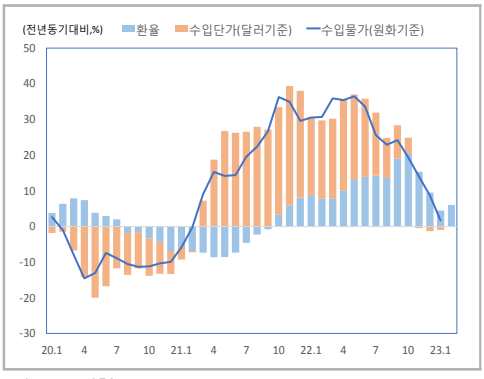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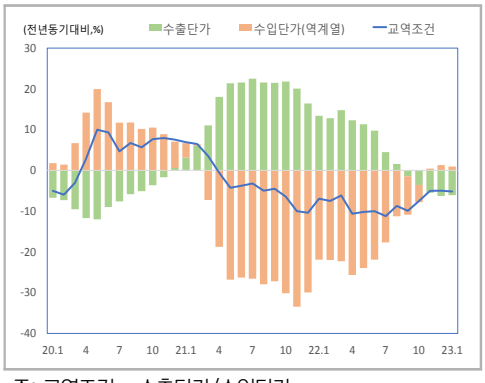
- ㅇ 그동안 물가를 부추기던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향안정되었으며 환율불안도 진정 기미
- ㅇ 다만 최근에는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교역조건 악화를 주도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자료: 통계청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주: 교역조건 = 수출단가/수입단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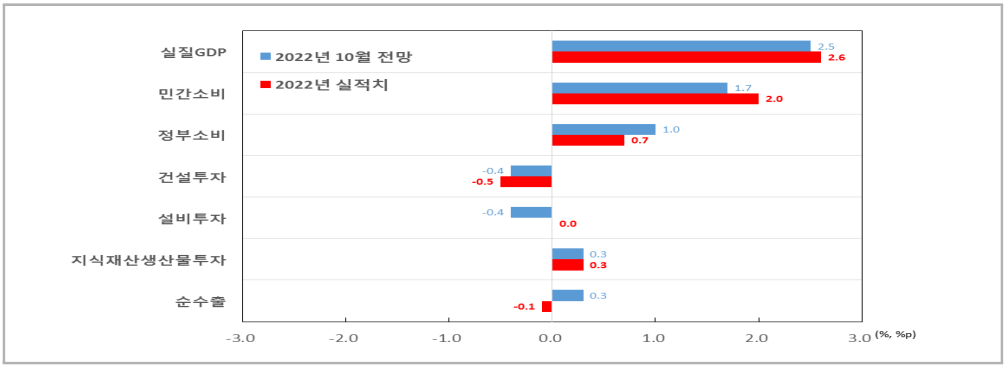
Ⅱ. 지출 부문별 전망

1. 2023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022년 실질GDP 실적치와 NABO전망치와의 차이는 -0.1%p

- ○ 민간소비,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망치보다 높은 실적치
- ○ 건설투자, 정부소비, 순수출(총수출-총수입)은 전망치보다 낮은 실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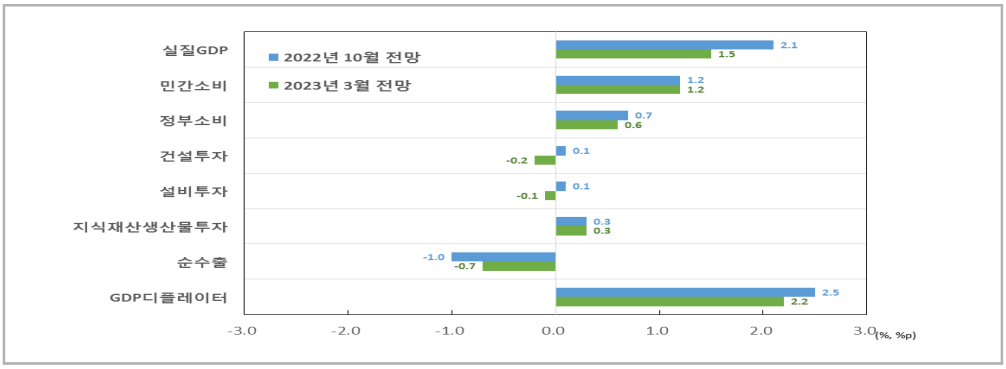
[2022년 전망과 실적치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비교]



❑ 2023년 전망은 2022년 10월 중기 전망 대비 0.6%p 하향 조정

- ○ 내수는 총지출 증가세 둔화, 예상보다 빠른 경기둔화 등을 반영하여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하향 조정
- ○ 대외거래는 세계경제여건, 주요 수출품목의 부진 등을 반영하여 총수출과 총수입 모두 하향 조정(순수출은 상향 조정)

[2023년 전망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비교]



2. 경제성장률

❑ 2023년 경제성장률은 1.5%로 낮아질 전망

- ○ 상반기에는 성장이 정체되겠으나,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재개방 및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이 반등할 예상
- ○ 민간소비는 본격적인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실질소득 정체로 2.4% 증가에 그칠 전망
- ○ 정부소비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3.3% 증가에 머물 전망
- ○ 건설투자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1.0% 감소할 예상
- ○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투자여건 악화로 1.3% 감소할 전망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4.0% 증가에 그칠 전망
- ○ 총수출은 2.7% 증가할 전망으로, 상반기 중 어려움을 겪겠으나 하반기에는 세계경기와 함께 개선될 예상
- ○ 총수입은 하반기 경기상황이 나아지면서 연간 4.2% 증가를 예상
- ○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6%p,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3%p

❑ 명목GDP 성장률은 2023년 3.7%로 전망

- ○ 실질GDP 성장률이 하락('22년 2.6% → '23년 1.5%)하겠으나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높아져('22년 1.2% → '23년 2.2%) 명목성장률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예상

3. 민간소비

❑ 2023년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증가세 둔화 전망

- ○ 2023년 민간소비는 전년(4.3%)보다 1.9%p 낮은 2.4% 증가할 전망
- ○ (상방요인) 본격적인 일상회복, 물가 상승세 둔화 등
- ○ (하방요인) 실질소득의 제한적 증가, 가계신용위험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

4. 정부소비

❑ 2023년 정부소비는 전년보다 증가세 둔화 예상

- ○ 2023년 정부소비는 전년대비 3.3%(상반기3.6%, 하반기 3.0%) 늘어 전년(4.1%)에 비해 0.8%p 증가세 둔화
  -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폭 축소(본예산 대비 ′22년 8.9%→’23년 5.2%),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오름세 지속(’22년 2.8%→’23년 2.7% 예상) 등에 기인
  - 다만 건강보험 급여비(사회보장현물수혜)의 팬데믹 이전 증가 추세 회복 등은 증가 요인으로 작용
- ○ (상방요인) 경기하강에 대응한 재정지출 증가 가능성, 건강보험급여비 증가 가속화, 의무지출 비중(본예산 기준 GDP대비 ’22년 49.9%→’23년 53.5%) 확대 등
- ○ (하방요인) 재정 건전화 기조 강화,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폭 확대 등

5. 건설투자

❑ 2023년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감소세가 완화될 전망

- ○ 2023년 건설투자는 전년(-3.5%)보다 2.5%p 높은 1.0% 감소할 전망
- ○ (상방요인) 3기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거래활성화 정책, 자재 가격 안정화 등
- ○ (하방요인) 자금조달 여건 악화, 미분양 확대,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투자 부진 등

6. 설비투자

❑ 2023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

- ○ 2023년 설비투자는 국내 경기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투자비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할 전망
  - (상방요인) 차세대 기술 관련 선제적 투자 수요, 반도체부문 설비투자 세제지원 혜택 등

- (하방요인)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위축, 반도체 업황 부진, 기준금리 인상 및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비용 상승 등

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023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대비 4.0% 증가할 전망

- 2023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4.7%)보다 0.7%p 낮은 4.0% 증가할 전망
- (상방요인) 반도체·전기차 등 신성장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IT 소프트웨어 투자, 컨텐츠 산업관련 투자 증가 등
- (하방요인) 제조업의 업황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

8. 대외거래

❑ 2023년 총수출은 전년대비 2.7%, 총수입은 4.2% 증가할 전망

- 2023년 총수출(국민계정)은 전년(3.2%)보다 0.5%p 낮은 2.7%, 총수입(국민계정)은 전년(3.7%)보다 0.5%p 높은 4.2% 증가할 전망
- (상방요인) IT경기 회복,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 개선 등
- (하방요인)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교역량 감소, 유가 등 국제 원자재 불안 지속,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 가격 하락 등

9. 소비자물가

❑ 2023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2023년 소비자물가는 국내 경기둔화, 국제원자재가격 안정화 등으로 전년대비 3.5% 상승할 전망
  - (상방요인)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
  - (하방요인) 국내 경기둔화, 국제원자재가격 안정화,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절 등

Ⅲ. 지출부문별 주요국 동향 및 전망

1. 경제성장률

❑ **2022년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에 주로 기인

❑ **2023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2022년 2.7%에서 2023년 1.2%로 큰 폭 낮아지겠으나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동기간 중 소폭 높아지는 데 그칠 전망
- 다만 중국은 경제 재개방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5.2% 성장할 전망

2. 소비

❑ **2022년 주요국 민간소비는 견조한 회복흐름을 나타냈음**

-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0.7~2.3%p 상회하였으며 대면 경제활동 정상화와 함께 서비스 소비가 활성화

❑ **2023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긴축적 통화정책과 높은 물가로 구매력이 제약되고 취업자 수 증가세와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등 고용여건도 악화

3. GDP 대비 총투자 비중

❑ **2023년 주요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2022년과 비슷할 전망**

- 주요국의 경우에는 동 비중을 21~25%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국은 45%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을 전망

4. 대외거래

❑ 세계 수출입(통관) 증가율은 2022년 하반기 들어 둔화

- ○ 수출은 상반기 18.8%에서 하반기 9.0%로, 수입은 19.6%에서 9.3%로 하락
- ○ 세계 수출입과 밀접한 우리나라 수출입도 하반기 들어 빠르게 하강

❑ 2023년 선진국은 수출입 증가세가 낮아지겠으나 신흥개도국은 높아질 전망

- ○ IMF는 선진국의 2023년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을 2.5%와 2.0%로 예상하여 2022년(4.2%, 6.0%)에 비해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 신흥개도국은 각각 2.4%, 2.9%로 전년(1.4%, 1.4%) 대비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5. 물가

❑ 소비자물가는 2021~2022년 기간 동안 크게 상승

- ○ 코로나19 관련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 미국 8.0%, 유로지역 9.2% 등에서 매우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

❑ 2023년에는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둔화될 전망
- ○ 다만 신흥개도국은 미 달러화 강세와 이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효과로 물가상승률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

차 례

[제Ⅰ부 대내외 경제여건]

제1장 세계 경제여건 ····· 3

제1절 최근 세계경제 동향 ····· 3
제2절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전망 ····· 6
제3절 국제원자재가격 ····· 9
제4절 전망의 리스크 요인 ····· 16

제2장 국내 경제여건 ····· 18

제1절 경제성장률 추이 ····· 18
제2절 내수와 수출입 여건 ····· 23
제3절 고용과 물가 여건 ····· 27

[제Ⅱ부 지출 부문별 전망]

제1장 2023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33
제2장 경제성장률 ····· 37
제3장 민간소비 ····· 41
제4장 정부소비 ····· 48
제5장 건설투자 ····· 56
제6장 설비투자 ····· 62
제7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67
제8장 대외거래 ····· 72
제9장 소비자물가 ····· 79

차 례

[제 Ⅲ 부 지출부문별 주요국 동향 및 전망]

제1장 경제성장률 ····· 87
제2장 소비 ····· 90
제3장 GDP 대비 총투자 비중 ····· 92
제4장 대외거래 ····· 94
제5장 물가 ····· 97

BOX 차례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 11

[BOX 2]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황 및 전망 ····· 12

[BOX 3] 최근 가계의 신용위험 확대 ····· 46

[BOX 4]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관련 주요이슈 ····· 77

표 차 례

[제Ⅰ부]

| 표 Ⅰ-1 | IMF와 세계은행의 2023년 세계경제 전망 비교 ····· 7

[제Ⅱ부]

| 표 Ⅱ-1 | 2022년 전망과 실적치의 부문별 비교 ····· 34
| 표 Ⅱ-2 | 2023년 전망의 부문별 비교 ····· 36
| 표 Ⅱ-3 | 2023년 국내 경제전망 ····· 39
| 표 Ⅱ-4 | 명목GDP 성장률 전망 ····· 39
| 표 Ⅱ-5 | 최근 국외소비 동향 ····· 43
| 표 Ⅱ-6 |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 49
| 표 Ⅱ-7 | 정부소비 전망 ····· 52
| 표 Ⅱ-8 | 2023년 총지출과 의무지출 전망 ····· 54
| 표 Ⅱ-9 | 2022년 건설투자 주요 지표 ····· 57
| 표 Ⅱ-10 | SOC 분야 재정규모 ····· 60
| 표 Ⅱ-11 | 설비투자 증감률 ····· 62
| 표 Ⅱ-12 | 2023년 설비투자 계획 전망 ····· 64
| 표 Ⅱ-13 |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 65
| 표 Ⅱ-14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방향 ····· 66
| 표 Ⅱ-15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 67
| 표 Ⅱ-16 | 국내 주요 OTT기업의 콘텐츠 투자 계획 ····· 69
| 표 Ⅱ-17 |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관련 세제지원 정책 ····· 71
| 표 Ⅱ-18 |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감률 전망(국민계정) ····· 73
| 표 Ⅱ-19 | 원유수입 추이 ····· 75
| 표 Ⅱ-20 | 소비자물가상승률 ····· 80
| 표 Ⅱ-21 | 2023년 공공요금 인상계획 ····· 82
| 표 Ⅱ-22 |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위한 경제정책방향 ····· 83

[제Ⅲ부]

| 표 Ⅲ-1 |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추이 ····· 92
| 표 Ⅲ-2 |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전망 ····· 93
| 표 Ⅲ-3 | 주요국 경상수지 추이 ····· 95
| 표 Ⅲ-4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97
| 표 Ⅲ-5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98

그 림 차 례

[제 I 부]

| 그림 Ⅰ-1 | 산업생산과 교역량 추이 ····· 3
| 그림 Ⅰ-2 | OECD 경기선행지수 ····· 3
| 그림 Ⅰ-3 | 세계 제조업·서비스업 PMI ····· 4
| 그림 Ⅰ-4 | 선진국과 개도국 제조업 PMI ····· 4
| 그림 Ⅰ-5 |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5
| 그림 Ⅰ-6 |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 5
| 그림 Ⅰ-7 |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변동 ····· 5
| 그림 Ⅰ-8 | 글로벌 금융 여건 지수 ····· 5
| 그림 Ⅰ-9 |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SCP) 추이 ····· 6
| 그림 Ⅰ-10 |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 6
| 그림 Ⅰ-11 | 국제기구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7
| 그림 Ⅰ-12 | 국제기구의 세계 교역량 전망 ····· 7
| 그림 Ⅰ-13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8
| 그림 Ⅰ-14 | 세계 교역량과 우리나라 통관수출 추이 ····· 8
| 그림 Ⅰ-15 | 국제유가 추이 ····· 9
| 그림 Ⅰ-16 | 기타 원자재가격 추이 ····· 9
| 그림 Ⅰ-17 | 국제유가 전망 ····· 10
| 그림 Ⅰ-18 | 전세계 석유 수급 전망 ····· 10
| 그림 Ⅰ-19 | OPEC 공급량과 생산능력 추이 및 전망 ····· 10
| 그림 Ⅰ-20 | 원유 소비 전망 ····· 10
| 그림 Ⅰ-21 | 중국 제조업·서비스업 PMI ····· 16
| 그림 Ⅰ-22 | 반도체 가격 추이 ····· 17
| 그림 Ⅰ-23 |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추이 ····· 17
| 그림 Ⅰ-24 | 실질 GDP 성장률 추이 ····· 18
| 그림 Ⅰ-25 |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 19
| 그림 Ⅰ-26 |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 19
| 그림 Ⅰ-27 | 명목GDP 성장률 추이 ····· 20
| 그림 Ⅰ-28 |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 20
| 그림 Ⅰ-29 |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 21
| 그림 Ⅰ-30 |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 21

| 그림 Ⅰ-31 |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 21
| 그림 Ⅰ-32 |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 21
| 그림 Ⅰ-33 |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22
| 그림 Ⅰ-34 | 제조업 재고순환선 ····· 22
| 그림 Ⅰ-35 | 소매판매액과 민간소비 ····· 23
| 그림 Ⅰ-36 | 도소매 서비스 생산과 민간소비 ····· 23
| 그림 Ⅰ-37 |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 24
| 그림 Ⅰ-38 |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 24
| 그림 Ⅰ-39 |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 24
| 그림 Ⅰ-40 |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 24
| 그림 Ⅰ-41 | 경상수지 추이 ····· 25
| 그림 Ⅰ-42 |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 25
| 그림 Ⅰ-43 |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추이 ····· 26
| 그림 Ⅰ-44 | 컨테이너 운임지수(BDI) 추이 ····· 26
| 그림 Ⅰ-45 | 출입국자수 추이 ····· 26
| 그림 Ⅰ-46 | 취업자 수 증감 ····· 27
| 그림 Ⅰ-47 |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감 ····· 27
| 그림 Ⅰ-48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 28
| 그림 Ⅰ-49 |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 28
| 그림 Ⅰ-50 |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 28

[제Ⅱ부]

| 그림 Ⅱ-1 | 2022년 전망과 실적치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비교 ····· 34
| 그림 Ⅱ-2 | 2023년 전망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비교 ····· 36
| 그림 Ⅱ-3 |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 38
| 그림 Ⅱ-4 | 내수디플레이터 추이 ····· 40
| 그림 Ⅱ-5 |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 40
| 그림 Ⅱ-6 |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 42
| 그림 Ⅱ-7 | 재화형태별 소비증가율 추이 ····· 43
| 그림 Ⅱ-8 | 서비스 소비증가율 추이 ····· 43
| 그림 Ⅱ-9 | 민간소비 전망 ····· 44

그 림 차 례

| 그림 Ⅱ-10 | 취업자 수 증감 및 임금상승률 ····· 45
| 그림 Ⅱ-11 | 가계소득·지출 및 이자 비용 ····· 45
| 그림 Ⅱ-12 | 실질정부소비의 분기별 추이 ····· 49
| 그림 Ⅱ-13 | 통합재정(중앙정부) 경상지출 ····· 50
| 그림 Ⅱ-14 |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추이 ····· 51
| 그림 Ⅱ-15 |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추이 ····· 52
| 그림 Ⅱ-16 | 재정지출 진도율 분기별 추이 ····· 53
| 그림 Ⅱ-17 | 실질정부소비 분기별 추이 ····· 53
| 그림 Ⅱ-18 | 2013~2022년 추경안의 세출 규모 ····· 55
| 그림 Ⅱ-19 |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 57
| 그림 Ⅱ-20 | 건설투자 증감률 전망 ····· 58
| 그림 Ⅱ-21 | 미분양 주택 추이 ····· 59
| 그림 Ⅱ-22 | 주택 착공 및 준공 추이 ····· 59
| 그림 Ⅱ-23 | 소상공인 부문별 실적 및 전망 ····· 59
| 그림 Ⅱ-24 |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 ····· 59
| 그림 Ⅱ-25 | 건설투자 관련 정책 ····· 61
| 그림 Ⅱ-26 | 공공기관 투자계획 목표 및 실적 ····· 61
| 그림 Ⅱ-27 | 설비투자 규모 추이 ····· 63
| 그림 Ⅱ-28 | 제조업 평균가동률 ····· 63
| 그림 Ⅱ-29 |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 63
| 그림 Ⅱ-30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65
| 그림 Ⅱ-31 | 반도체 시장 전망 ····· 65
| 그림 Ⅱ-32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추이 ····· 68
| 그림 Ⅱ-33 | 정보통신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8
| 그림 Ⅱ-34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 ····· 68
| 그림 Ⅱ-35 | 연구개발 전담부서 추이 ····· 69
| 그림 Ⅱ-36 | 컨텐츠 산업 연구개발인력 추이 ····· 69
| 그림 Ⅱ-37 | 정부 R&D 예산 규모 및 비중 추이 ····· 70
| 그림 Ⅱ-38 | 총수출입 추이 ····· 73
| 그림 Ⅱ-39 | 주요품목 통관수출 증가율 ····· 74
| 그림 Ⅱ-40 | 주요 수출지역별 통관수출 증가율 ····· 74
| 그림 Ⅱ-41 | 반도체 수출 금액, 물량, 단가 추이 ····· 74

| 그림 Ⅱ-42 | 반도체 수출 하강속도 비교 ····· 74
| 그림 Ⅱ-43 | 대미·중국 무역수지 추이 ····· 76
| 그림 Ⅱ-44 | 관광목적 입국자 수 및 비중 ····· 76
| 그림 Ⅱ-45 |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 ····· 76
| 그림 Ⅱ-46 |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 80
| 그림 Ⅱ-47 |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 80
| 그림 Ⅱ-48 | 한·미 금리차 추이 ····· 81
| 그림 Ⅱ-49 | 원/달러 환율 추이 ····· 81

[제Ⅲ부]

| 그림 Ⅲ-1 | 2022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 87
| 그림 Ⅲ-2 | 2023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IMF) ····· 88
| 그림 Ⅲ-3 | 2021~2023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IMF) ····· 89
| 그림 Ⅲ-4 | 주요국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 90
| 그림 Ⅲ-5 | 2022년 주요국 민간소비 및 GDP ····· 91
| 그림 Ⅲ-6 | 주요국 소매판매 추이 ····· 91
| 그림 Ⅲ-7 | 주요국 소비자심리 지수 ····· 91
| 그림 Ⅲ-8 | 국가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추이 ····· 92
| 그림 Ⅲ-9 | 국가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전망 ····· 93
| 그림 Ⅲ-10 | 세계 및 우리나라 수출 ····· 94
| 그림 Ⅲ-11 | 세계 및 우리나라 수입 ····· 94
| 그림 Ⅲ-12 | 주요국 통관수출증가율 ····· 95
| 그림 Ⅲ-13 | 주요국 통관수입증가율 ····· 95
| 그림 Ⅲ-14 | 2023년 주요국 수출전망 ····· 96
| 그림 Ⅲ-15 | 2023년 주요국 수입전망 ····· 96
| 그림 Ⅲ-16 | 국가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97
| 그림 Ⅲ-17 | 국가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98

2023 경제전망 Ⅰ

지출부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대내외 경제여건

제1장 세계 경제여건

제2장 국내 경제여건

제1장 세계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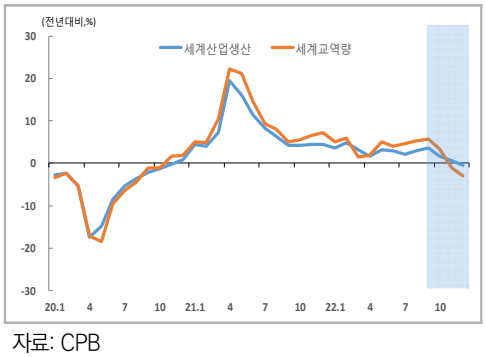
제1절 최근 세계경제 동향

- **세계 경제**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생산**과 **교역량**이 빠르게 둔화
- **주요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긴축기조 강화**
- **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은 오름세가 진정

세계 경제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었다. 세계 산업생산과 세계 교역량[1]은 2022년 9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각각 12월과 11월 전년동월 대비 감소 전환되었다. 두 지표가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2020년 11월과 12월 각각 증가 전환된 이후 24개월 만에 다시 감소 전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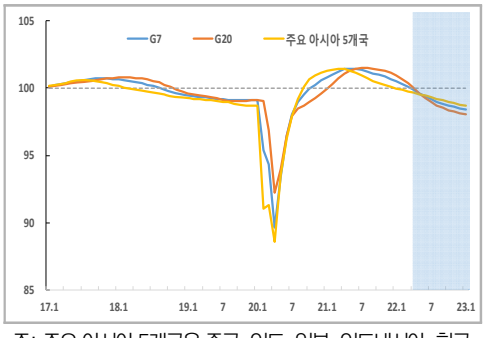
주요국의 경기상황을 예고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G20의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6월(101.5 포인트)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되었다. 2022년 4월 이후 장기추세 기준선(100) 밑으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 1월 현재 98.4로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G7과 주요 아시아 5개국의 경기선행지수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 그림 Ⅰ-1 | 산업생산과 교역량 추이



자료: CPB

| 그림 Ⅰ-2 |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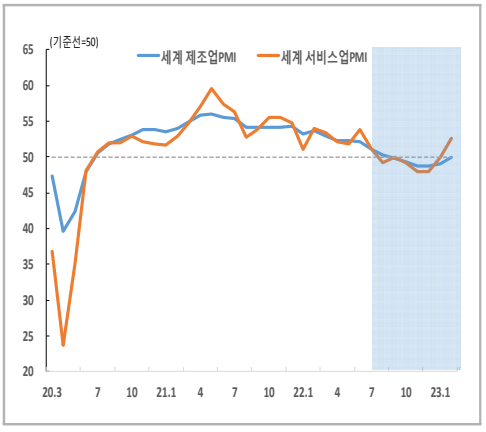


주: 주요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자료: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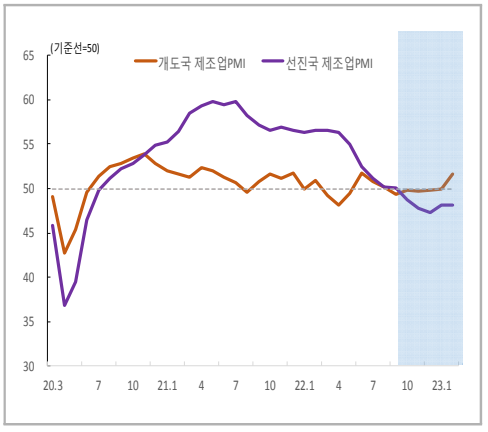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1) CPB(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 자료 기준

세계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 PMI)[2]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지난해 9월 이후 기준치 50을 밑돌았으나, 최근 들어 1월과 2월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중국경제 재개방의 영향으로 서비스와 자동차 등 내구재 상품 수요가 늘며 세계 서비스업 PMI와 개도국 제조업 PMI를 견인하였기 때문이다.

| 그림 Ⅰ-3 | 세계 제조업·서비스업 PMI



| 그림 Ⅰ-4 | 선진국과 개도국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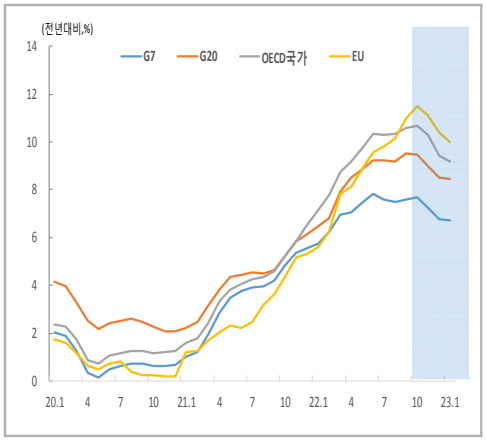


주: PMI 기준선 50 이상은 확장, 이하는 수축
자료: Bloomberg, CEIC

최근 세계 경제의 빠른 성장세 둔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의 통화긴축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중 세계 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가격 폭등, 수요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 운임·임금 등의 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였다. 금리 인상은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통해 세계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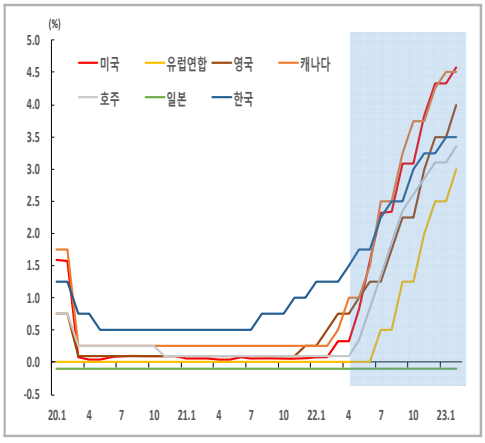
2) 구매자관리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확장을,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한다.

| 그림 I-5 |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OECD,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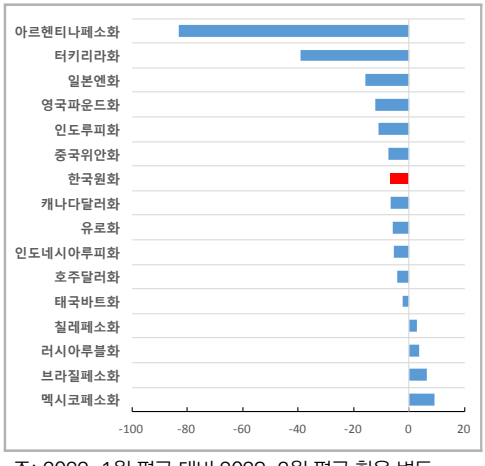
| 그림 I-6 |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자료: 각국 중앙은행, CEIC,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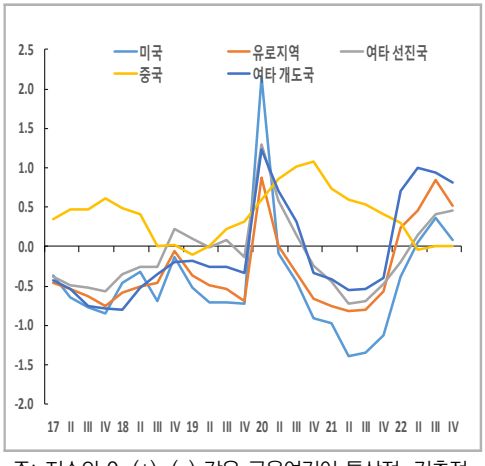
한편으론 미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나타나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매월 발표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실적치에 따라 미연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변동하며 환율, 주가 및 채권수익률 등의 금융변수가 요동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달러화 강세는 수입물가를 통해 각국의 국내물가로 전이되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 그림 I-7 |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변동



주: 2022. 1월 평균 대비 2023. 2월 평균 환율 변동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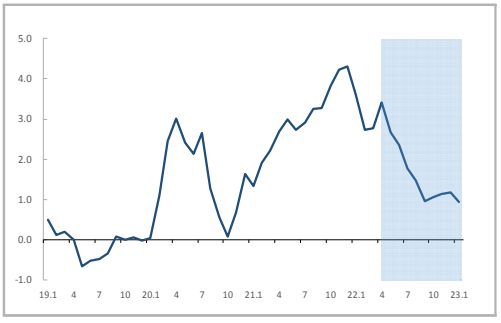
| 그림 I-8 | 글로벌 금융 여건 지수



주: 지수의 0, (+), (-) 값은 금융여건이 통상적, 긴축적, 완화적인 상황임을 나타냄(통상적 상황으로부터의 표준편차)
자료: IMF, WEO(2023. 1), [BOX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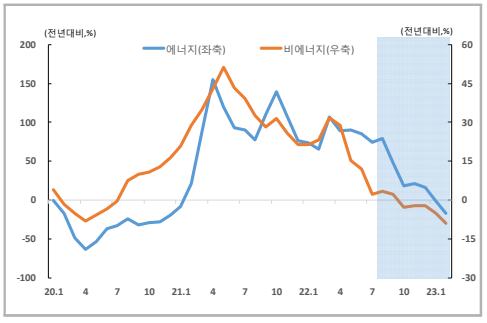
유가 및 원자재가격은 최근까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사라지며 오름세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팬데믹 상황 개선에 따른 공급망 애로 해소, 유럽의 온화한 겨울 날씨 등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경제 재개방에 따른 원자재 수입 증가 및 여행 수요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악화 여부 등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단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 그림 Ⅰ-9 |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SCP) 추이



주: 지수의 0, (+), (-) 값은 공급여건이 통상적, 빠듯한, 여유로운 상황임을 각각 나타냄(통상적 상황으로부터의 표준편차)
자료: 미 FRB New York,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 그림 Ⅰ-10 |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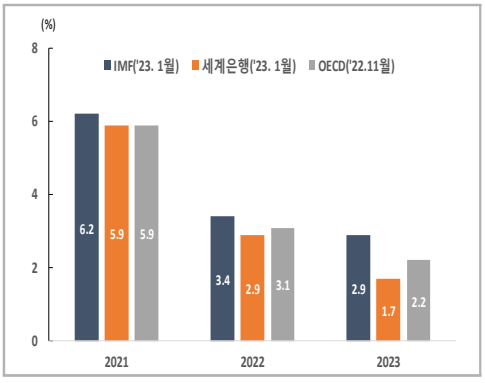
자료: Word Bank Commodity Price Data

제2절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전망

-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3%, **세계교역량**은 2.0% 증가 예상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6%로 전제
- 세계 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통화정책 방향**에 의해 좌우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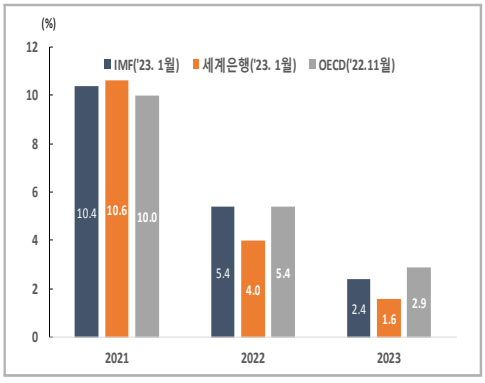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치는 세계경기 둔화폭을 보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이 2022년 3.4%에서 2023년 2.9%로 0.5%p 낮아질 것으로, 세계은행은 2.9%에서 1.7%로 1.2%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교역량도 IMF는 2022년 5.4%에서 2023년 2.4%로, 세계은행은 4.0%에서 1.6%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 그림 Ⅰ-11 | 국제기구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 그림 Ⅰ-12 | 국제기구의 세계 교역량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IMF와 세계은행의 2023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이견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보여 준다. IMF는 2023년 선진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경기가 위축(2022년 2.7%→ 2023년 1.2%)되지만, 개도국 경제는 중국의 경제 재개방에 따른 빠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2022년에 비해 소폭 확대(2022년 3.9%→2023년 4.0%)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세계은행은 IMF에 비해 선진국 경제의 경기 위축폭(2022년 2.5%→ 2023년 0.5%)이 가파르고, 중국 경제의 회복세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표 Ⅰ-1 | IMF와 세계은행의 2023년 세계경제 전망 비교

(단위: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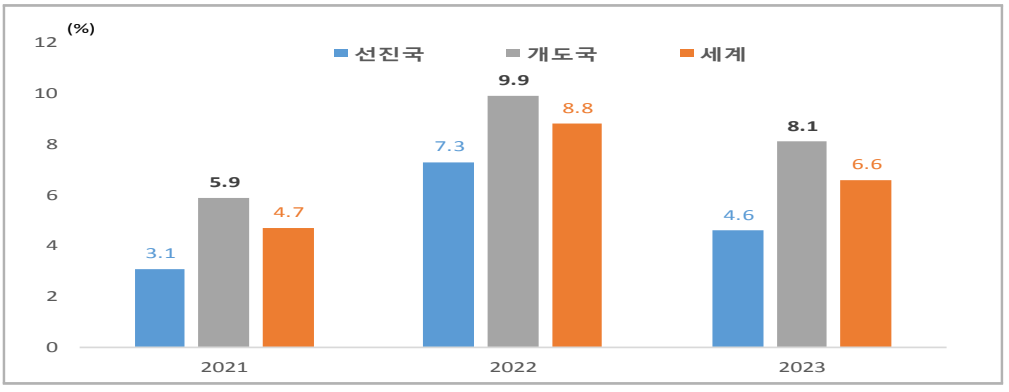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세계	선진국	개도국 (중국)	세계	선진국	개도국 (중국)
IMF	3.4	2.7	3.9 (3.0)	2.9	1.2	4.0 (5.2)
세계은행	2.9	2.5	3.4 (2.7)	1.7	0.5	3.4 (4.3)

자료: IMF,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2023.1월)

한편, 2022년 중 크게 확대되었던 물가상승 압력은 2023년에도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IMF는 2023년 1월 전망에서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년 8.8%에서 2023년 6.6%로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의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5.1%보다 1.5%p 상향 조정된 것이다. 선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3%에서 2023년 4.6%로, 개도국은 9.9%에서 8.1%로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 전망보다 선진국은 1.4%p(3.2%→4.6%), 개도국은 1.7%p(6.4%→8.1%) 높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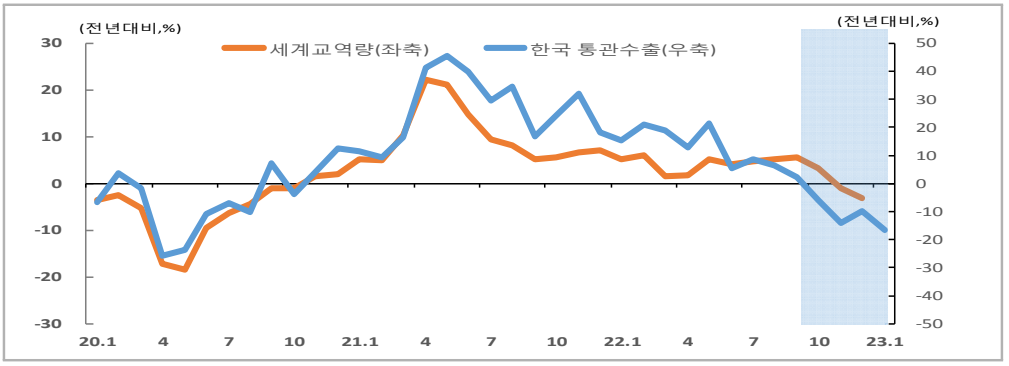
| 그림 Ⅰ-13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 1월)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직면한 정책적 도전이 될 것이며, 글로벌 금융시장 및 교역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긴축기조 강화에 따른 가파른 금리 상승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세계 교역량은 2022년 11월에 전년대비 -1.1%로 감소 전환되어 12월에는 -2.9%로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수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세계 교역량의 위축은 2023년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하방 위험이 될 것이다.

| 그림 Ⅰ-14 | 세계 교역량과 우리나라 통관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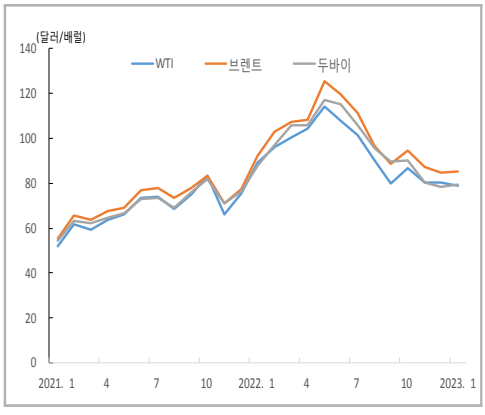
자료: 네덜란드 CPB, 한국무역협회DB

제3절 국제원자재가격

- **2023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84달러로 전제
- 곡물 등 **기타원자재가격**은 2023년 전년대비 7.2%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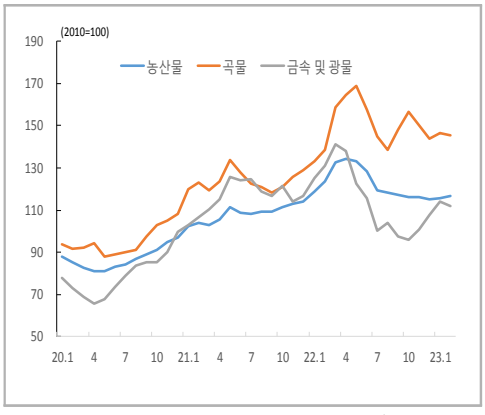
2023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84달러로 전제하였다. 2022년 5월 중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던 국제유가는 2022년 2/4분기 이후 내림세로 돌아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농산물, 금속 및 광물 등 기타원자재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며 최근에는 고점대비 10~30%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등락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 서유럽간 갈등 격화 등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유럽의 온화한 겨울 날씨로 인해 상승이 제한되면서 2022년 연초 수준 밑으로 하락하였다.[3)]

| 그림 I-15 |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 그림 I-16 | 기타 원자재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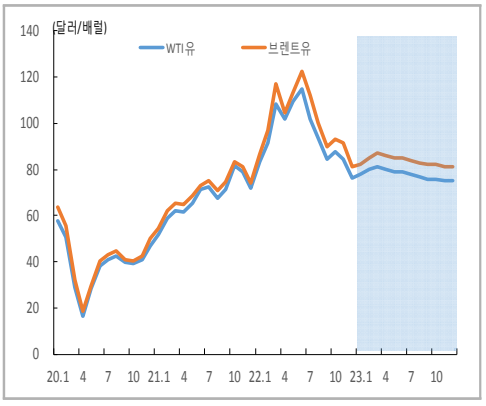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Pink Sheet" Data)

주요 국제유가 전망기관에서는 유가가 2023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IA(미 에너지 정보청, 2월 기준)는 2023년 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IMF와 World Bank(2023. 1월 전망 기준)는 2022년 대비 연평균 각각 16.2%, 1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2년 하반

3)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2022. 1월 백만 BTU 당 28.3 달러에서 8월 70.0 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2023년 2월 현재 16.5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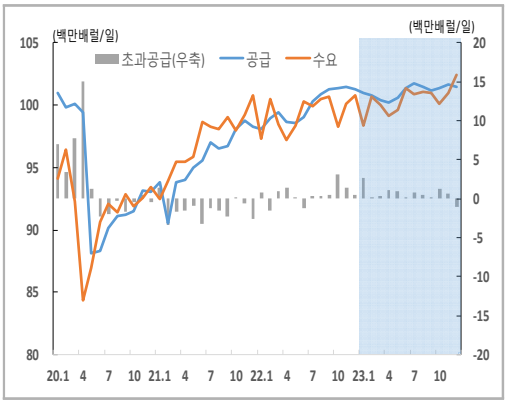
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안정적인 수급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유가상한제 등 서방의 제재 이후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 공급측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 그림 Ⅰ-17 | 국제유가 전망



주: 음영부문은 2023. 2월 전망
자료: 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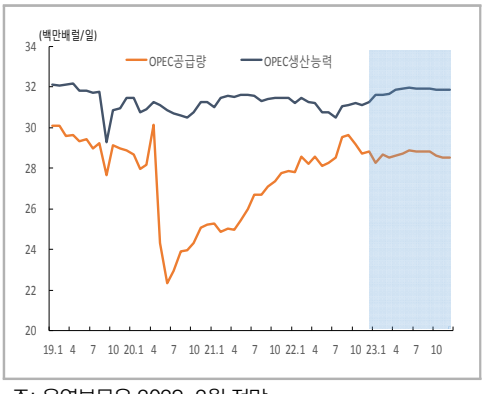
| 그림 Ⅰ-18 | 전세계 석유 수급 전망



주: 음영부문은 2023. 2월 전망
자료: 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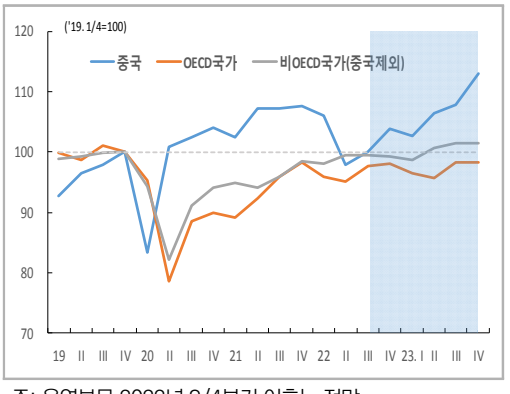
2023년에는 중국의 경제 재개방에 따른 수요회복,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 OPEC의 일별 생산량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가능성 등 원유 수급 측면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

| 그림 Ⅰ-19 | OPEC 공급량과 생산능력 추이 및 전망



주: 음영부문은 2023. 2월 전망
자료: EIA

| 그림 Ⅰ-20 | 원유 소비 전망



주: 음영부문 2022년 3/4분기 이후는 전망
자료: EIA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금번 2023년 경제전망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주요 전제치]

(단위: 전년대비 %, 원)

	2021	2022	2023
세계경제성장률	6.1	3.1	2.3
- IMF(2023.1)	6.2	3.4	2.9
- World Bank(2023.1)	5.9	2.9	1.7
- OECD(2022.11)	5.9	3.1	2.2
세계교역량 증가율	10.6	4.7	2.0
- IMF(2023.1)	10.4	5.4	2.4
- World Bank(2023.1)	10.6	4.0	1.6
- OECD(2022.11)	10.0	5.4	2.9
국제유가[1](달러/배럴)	69.4	97.8	84.0
- EIA(2023.2, 달러/배럴)	70.7	89.0	84.0
- 한국은행(2023.2, 달러/배럴)	69.0	97.0	84.0
- IMF(2023.1)	65.8	39.8	-16.2
- World Bank(2023.1)	63.2	42.0	-12.0
기타 원자재가격	32.9	10.6	-7.2
금리(국고채 3년물)[2]	1.4	3.2	3.3

주: 1) 두바이유 기준 (단, EIA는 브렌트유 기준)
2) 국고채수익률은 연중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EIA, IMF, OECD, World Bank

[BOX 2]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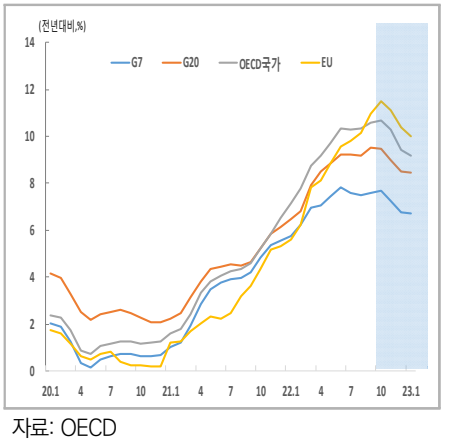
2023년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전년에 이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다. 2022년 상반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 긴축을 강화하였고,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요국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여부가 통화 긴축 지속 및 세계경기의 연착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023년 들어 연초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큰 어려움 없이 진정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지배했다. 주요국 주식가격은 2023년 말 이후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1월 중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최근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였던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팬데믹 이후 지속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압력이 크게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던 유가도 진정되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원유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유럽에서는 온화한 겨울 날씨로 인해 에너지가격 상승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주요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G7과 G20 국가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각각 2022년 6월과 10월 전년동월대비 7.9%, 9.5%를 정점으로 하락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자료: FRB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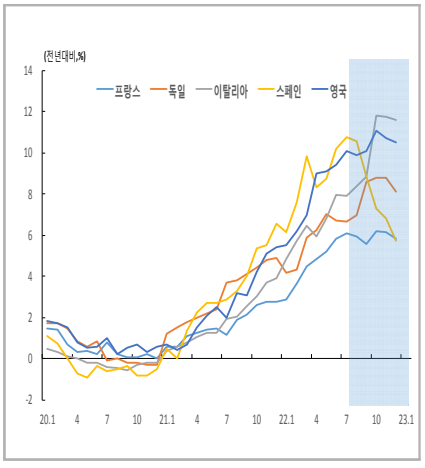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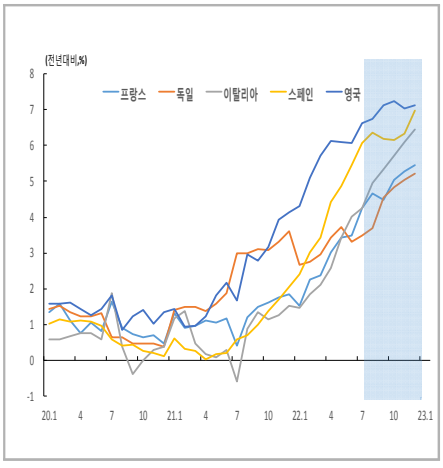
한편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작지 않다. 주요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하락하였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견실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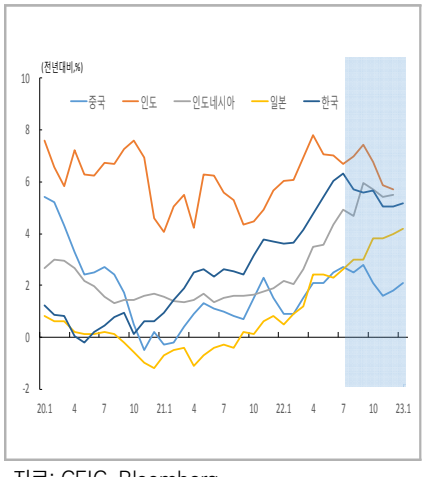
자료: CEIC, Bloomberg

유럽 주요국의 근원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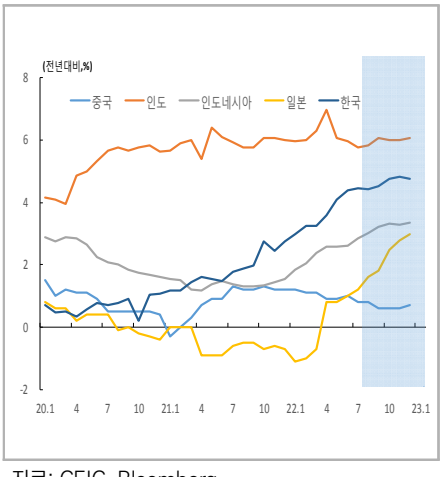
자료: CEIC, Bloomberg

아시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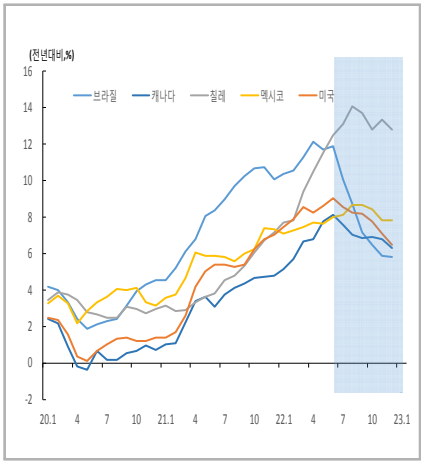
자료: CEIC, Bloomberg

아시아 주요국의 근원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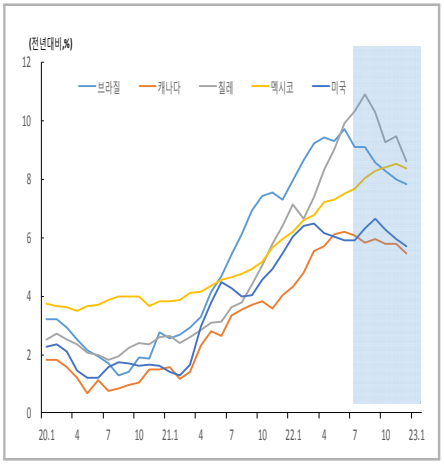
자료: CEIC, Bloomberg

미주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자료: CEIC,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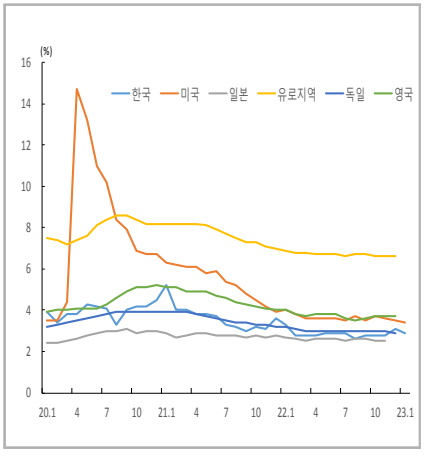
미주 주요국의 근원 소비자물가



자료: CEIC,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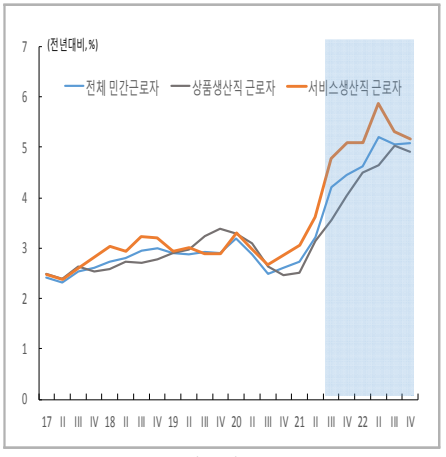
근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은 노동비용에 민감한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이다. 팬데믹 이후에도 견조한(tight) 고용시장 여건으로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고 주요국 임금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통화 당국의 2%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의 실업률



자료: CEIC, Bloomberg

미국의 업종별 임금상승률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BLS)

미국의 경우 팬데믹 이전 3년(2017~2019년) 동안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평균 2.8% 수준이었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최근 6분기 평균 5.2%를 기록하였다. 서비스가격의 높은 가격 경직성을 고려[4]할 때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향후 4분기 이상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중국의 경제 재개방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과 상품시장에 미칠 영향에 따라 다시 상승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대내외 상품, 여행서비스, 원자재 수입 수요 회복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요에서 세계 원유의 1/5, 정제된 구리, 니켈, 아연의 1/2, 철광석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그러지지 않고 지속될 경우 각국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제한되어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파른 경기둔화를 감내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보다 높은 것을 용인하는 가운데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다.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근 적정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5] 물론, 최적의 상황은 각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진정되는 것이다.

4)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2023년 경제 현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23, 1월)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과거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은 상품가격(0.809)보다 서비스가격(0.842)에서 높게 추정되었다.

5) 한국은행,「인플레이션타게팅의 변화 및 그 배경」, 2016.1. 2023년 1월 개최된 전미경제학회(AEA)에서는 미 연준이 물가안정목표 2%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4절 전망의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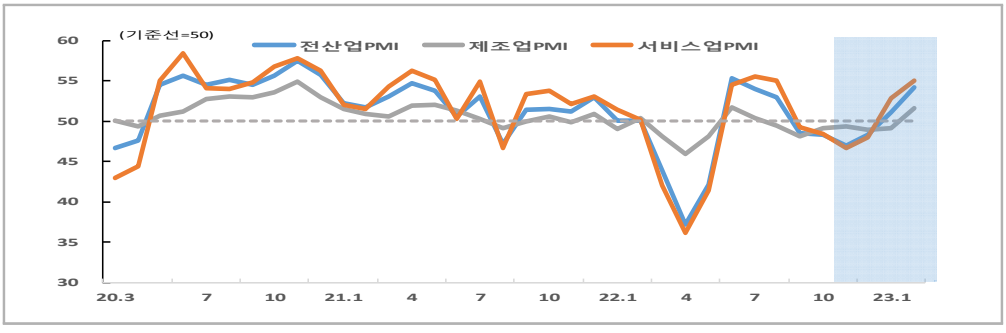
●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중국의 경제 재개방과 성장세 회복	•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및 통화 긴축 기조 유지
• 인플레이션 진정 및 통화 긴축 종료	• 미 달러화 가치상승과 신흥국 물가 및 금융 불안 심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 격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경제전망의 상방 요인으로는 중국의 경제재개에 따른 성장세 회복과 긍정적인 파급효과 확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진정 및 통화 긴축 종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제 재개방이 세계 경제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재개방이 단기적으로 팬데믹 사망자 급증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중국의 팬데믹 상황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6]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되며 자동차와 같은 상품 수요, 해외여행 등의 서비스 수요, 원유, 철강 등 국제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 주변국이 중국 경기회복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그림 Ⅰ-21 | 중국 제조업·서비스업 PMI



주: Caixin Composite, Manufacturing, Services PMI
자료: CEIC

6) 중국의 차이신(Caixin) 서비스업 PMI는 2월 55.0으로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제조업 PMI는 51.6으로 6개월만에 기준치(50)를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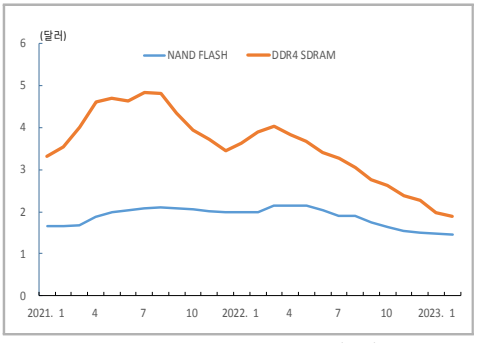
다음으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수급 여건이 개선되며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고, 상품가격이 빠르게 하락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는 통화 긴축 종료를 앞당기고 세계 경제의 연착륙(soft land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유럽의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는 상황도 국제 원자재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경제전망의 하방 요인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으로 인한 통화 긴축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물가 및 금융 불안 심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공급망 차질 재현 가능성 등이다. 우선, 선진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동조화될 경우 주요국 경제가 동시에 가파른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미연준의 통화 긴축이 미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신흥국의 환율 및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 불안은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및 거시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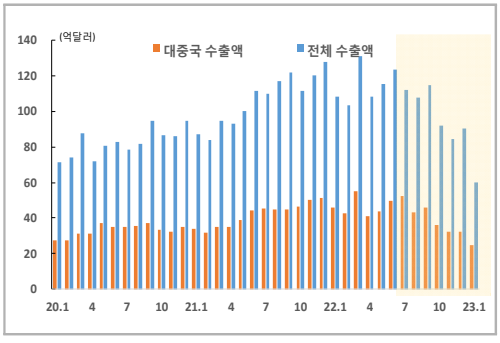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가 가속화되며 공급망 차질이 재현될 가능성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반도체와 과학법'을 2022년 8월 공표하였다.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등 관련국과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 그림 I-22 | 반도체 가격 추이



주: NAND FLASH와 DDR4는 각각 128Gb(TCL), 8Gb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통계

| 그림 I-23 |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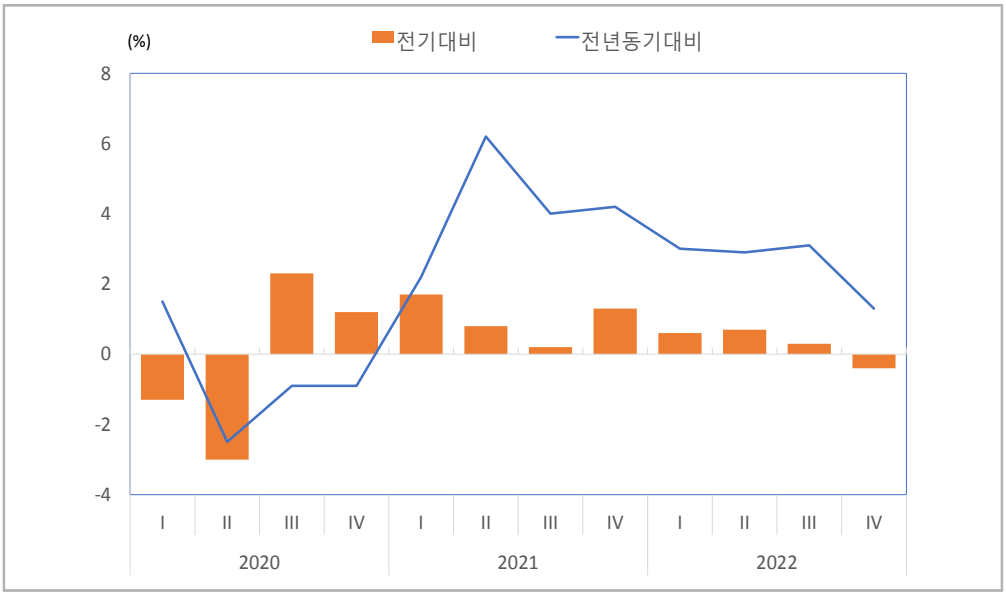
제2장 국내 경제여건

제1절 경제성장률 추이

- **2022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
- **경기**는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수출부진이 심화하면서 하강

국내경제는 2022년 중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하반기 들어 수출부진, 교역조건 악화, 금리인상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실질GDP 성장률은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3.0%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2.2%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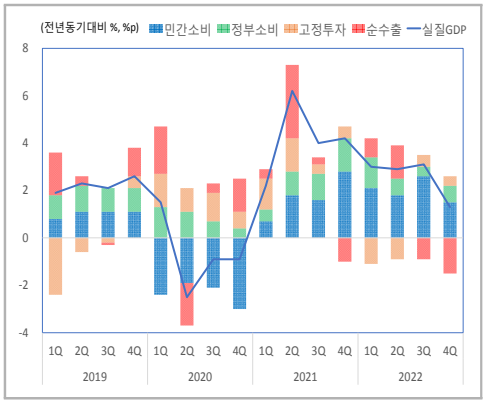
| 그림 Ⅰ-24 |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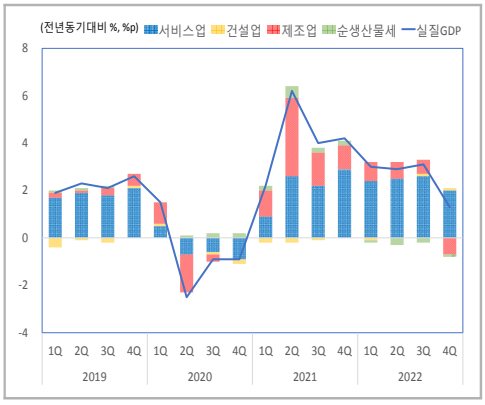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 그림 Ⅰ-25 |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Ⅰ-26 |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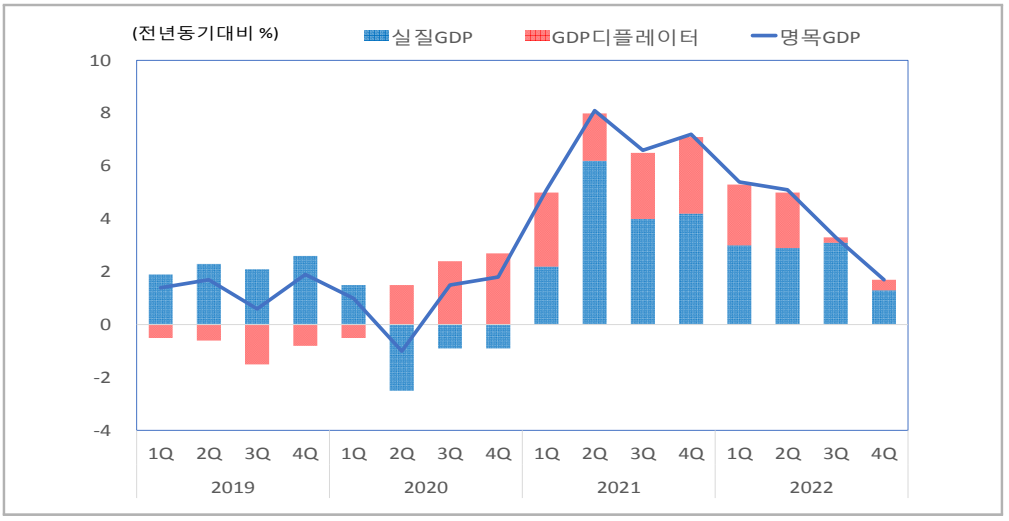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지출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코로나19로부터의 본격적인 일상회복, 고용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4.3% 성장하면서 연중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성장기여도 2.0%p). 정부소비는 건전재정기조가 강조되면서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21년 5.6% → '22년 4.1%). 총수출(GDP 물량 기준)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21년 10.8% → '22년 3.2%)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총고정자본 투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부진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연중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제조업은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특히 4분기에는 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2년 3.8%로 전년 6.7%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가 각각 1.5%p, 1.3%p만큼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 그림 Ⅰ-27 | 명목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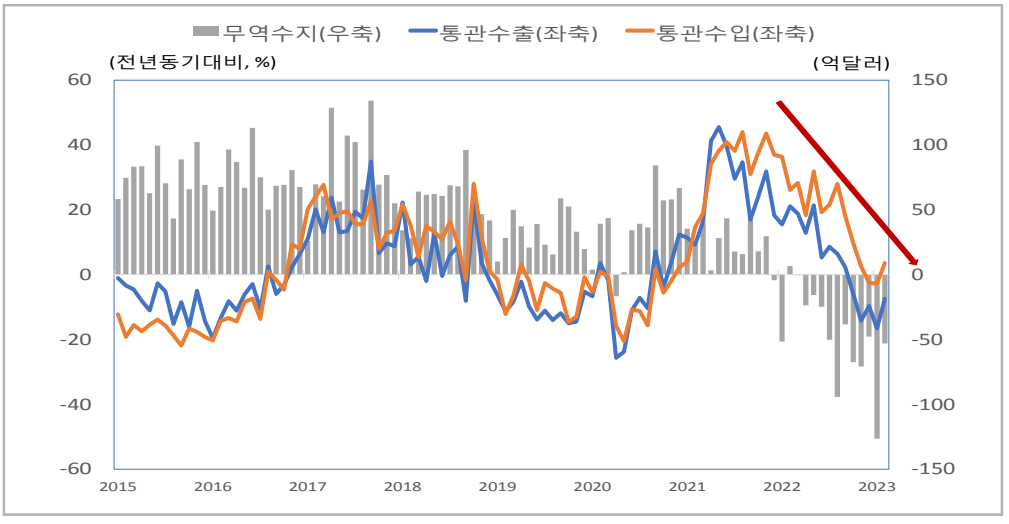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가. 경기국면 진단

국내경기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수출부진이 심화하면서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강이 가파르다. 다만, 서비스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경기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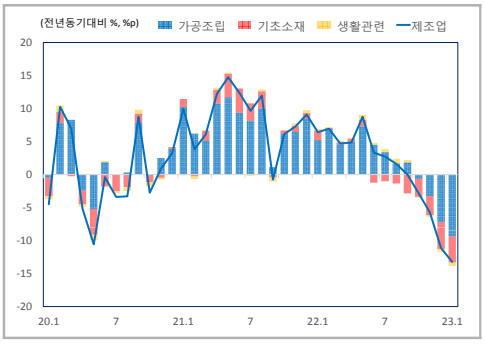
| 그림 Ⅰ-28 |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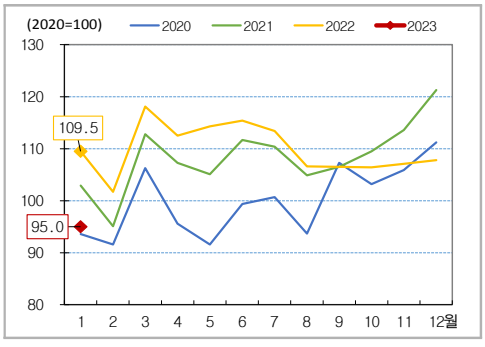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중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가공조립형 제조업[7]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연하다. 특히 4분기 이후로는 생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하강이 본격화하고 있다. 2023년 1월의 생산수준은 95.0으로 2022년 1월의 109.5를 크게 밑돈다.

| 그림 Ⅰ-29 |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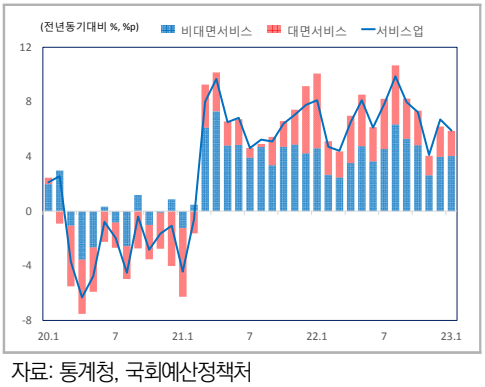
| 그림 Ⅰ-30 |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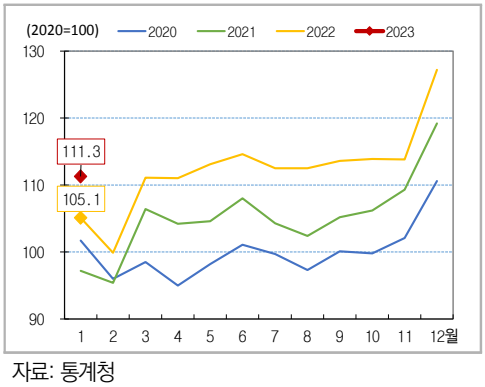
서비스업은 2022년 중 강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대면 서비스업[8]은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소폭 낮아졌으나 비대면 서비스업의 강한 확장세가 이를 보완하였다. 2023년 1월 서비스업 생산수준은 111.3으로 2022년의 105.1을 크게 웃돈다.

| 그림 Ⅰ-31 |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Ⅰ-32 |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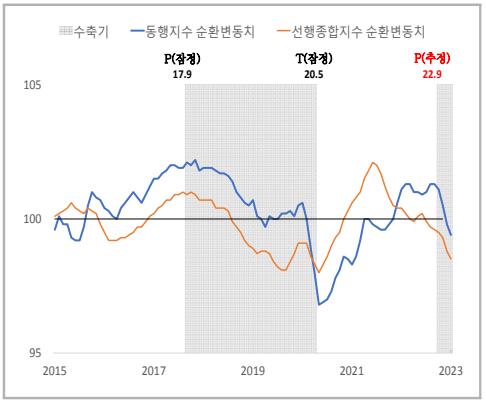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7) 제조업 생산지수를 산업형태별로 가공조립형(금속, 전자제품, 전기장비,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 기초소재형(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철강, 목재, 펄프 등 제조업), 생활관련형(음식료품, 의복, 가죽, 가구 등 제조업)으로 재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각각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5%, 31.2%, 11.3%이다.

8)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대면 비대면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여 파악하였다. 대면 서비스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비대면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사회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을 각각 포함한다.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7%, 67.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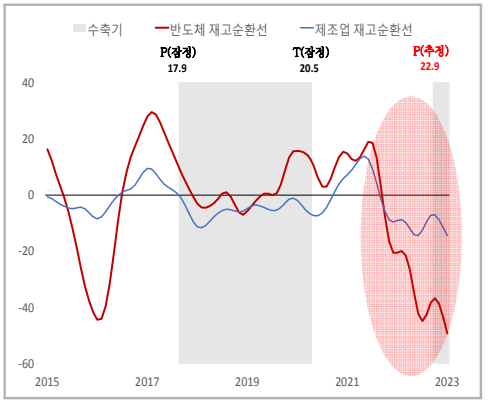
현재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9월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2021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다. 또 다른 경기예고지표인 제조업 재고순환선(출하증가율-재고증가율)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최근 급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경기가 2022년 3분기를 정점으로 수축국면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 바 있다[9].

| 그림 Ⅰ-33 |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2022년 9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추정 경기정점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Ⅰ-34 | 제조업 재고순환선



주: 1) 재고순환선 = 출하증가율 - 재고증가율 (X-12에 의한 추세순환 요인 추정치 기준)
2) 2022년 9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추정 경기정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자세한 내용은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23년 1월)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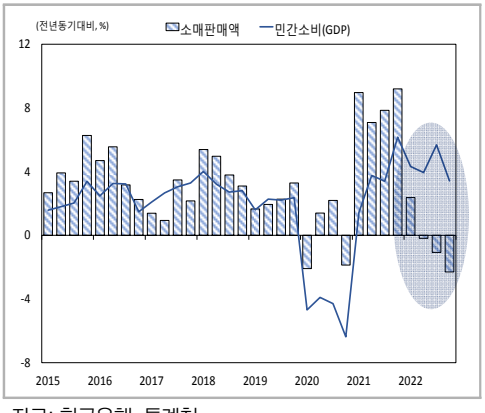
제2절 내수와 수출입 여건

- **내수**는 경기하강 신호가 뚜렷
- **수출**은 4분기 이후 부진이 심화
- **수입**은 4분기 이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짐
- **무역수지**는 478억 달러 적자, **상품수지**는 하반기 들어 적자 반전
-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 유지

가.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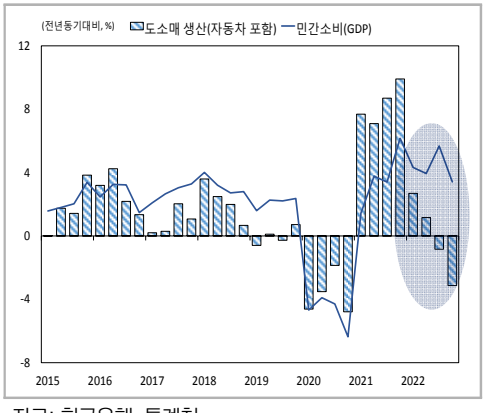
소비지표들은 2022년 들며 흐름이 약해져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되는 등 하강신호가 뚜렷해졌다.[10] 민간소비(국민계정)는 3분기까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4분기들어 증가세가 약화되었다. 이는 일상회복 등 일회성 요인의 영향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던 민간소비가 4분기 들어 금리인상, 부동산 거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11]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지표와 민간소비 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그림 Ⅰ-35 | 소매판매액과 민간소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그림 Ⅰ-36 | 도소매 서비스 생산과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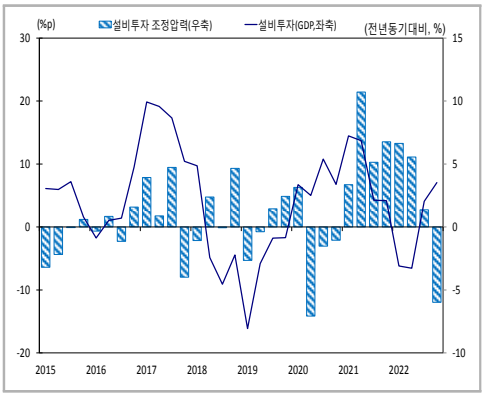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0) 월별 소매판매액 지수 등은 실질GDP 발표에 앞서 민간소비 추이를 보여주는 정보지표이다.
11) 민간소비(실질,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증감률은 4분기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3분기 1.7% → 4분기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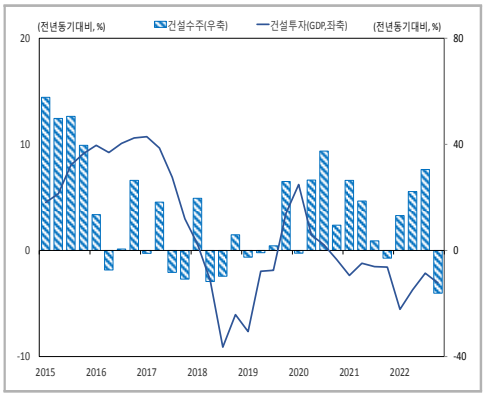
설비투자지수(설비투자 선행지표)는 2022년 하반 들어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건설수주액(건설투자 선행지표)도 4분기 들어 큰 폭 하락으로 전환하였다.

| 그림 Ⅰ-37 |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그림 Ⅰ-38 |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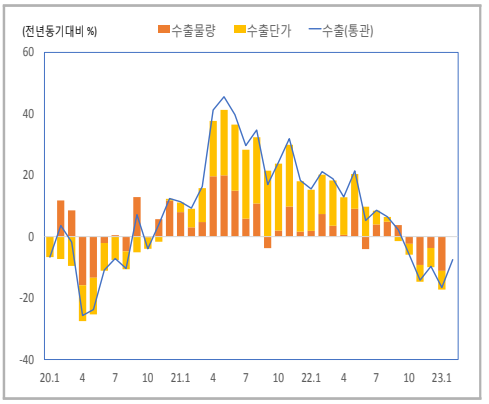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나. 수출입

수출(통관기준, 상품)은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2022년 들어 계속 낮아져 4분기에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소폭 플러스를 유지하던 수출물량(실질금액)도 4분기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단가도 반도체 등 가격 하락의 여파로 큰 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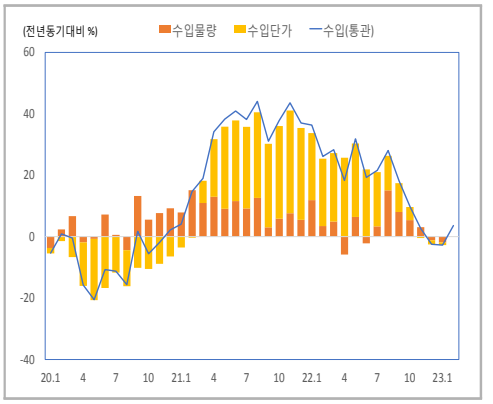
수입(통관기준, 상품)은 2022년 하반기 들어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수입물량(실질금액)과 수입단가 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 그림 Ⅰ-39 |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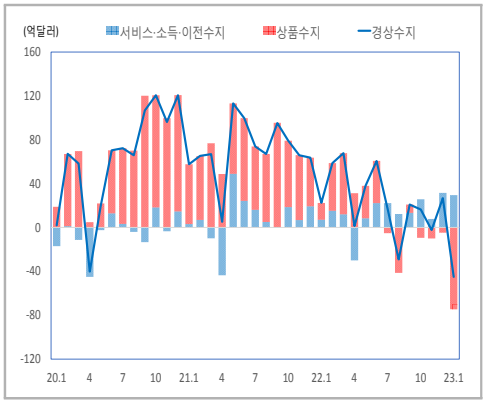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그림 Ⅰ-40 |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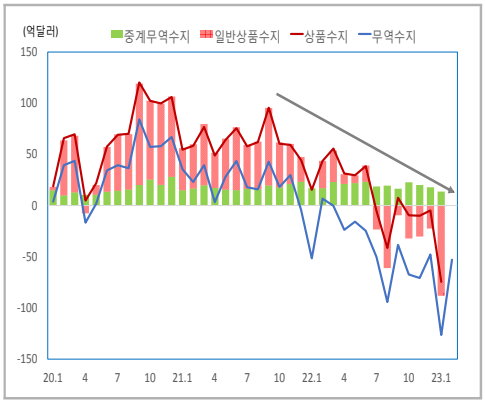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그림 Ⅰ-41 |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Ⅰ-42 |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주: 무역수지(수출입차)는 통관 기준, 상품수지, 일반상품수지, 중계무역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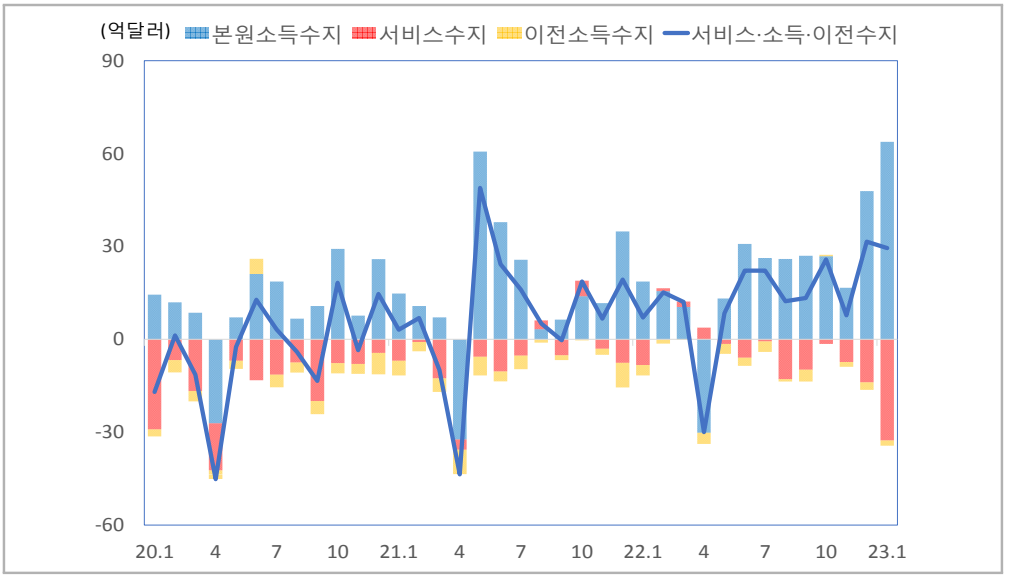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2022년 중 47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원자재수입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대중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12)]

경상수지(국제수지 기준)는 2022년 중 연간 2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상품수지(국제수지 기준)가 상반기 중 2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다가 하반기에 63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부문별로는 중계무역수지[13)]가 연중 흑자기조를 이어갔으나 하반기 중 일반상품수지에서 이를 넘어서는 적자가 발생했다.

서비스·소득·이전수지(국제수지 기준)는 2022년 중 1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본원소득수지가 22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데다 서비스수지도 운송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적자 폭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의 운송수지 흑자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크게 오른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여행수지는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객 수가 급감하면서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12) 자세한 내용은 "수출: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23.1월) 참조
13)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는 상품의 수출대금으로 우리나라 관세선을 거치지 않고 수출되어 무역수지에서는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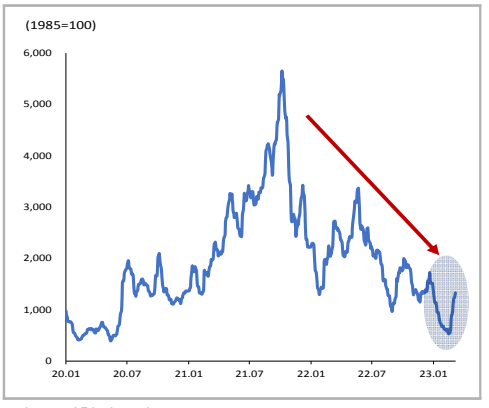
| 그림 Ⅰ-43 |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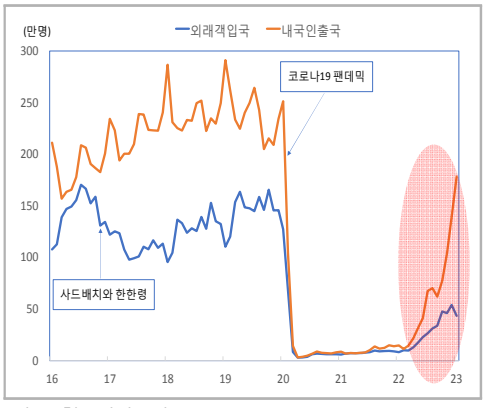
그러나 앞으로는 서비스 수지 적자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컨테이너 운임이 크게 낮아진 데다 해외여행객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운임은 최근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그림 Ⅰ-44 | 컨테이너 운임지수(BDI)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 그림 Ⅰ-45 | 출입국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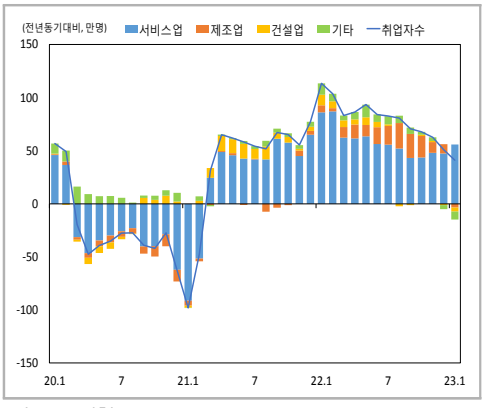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3절 고용과 물가 여건

- **고용**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
-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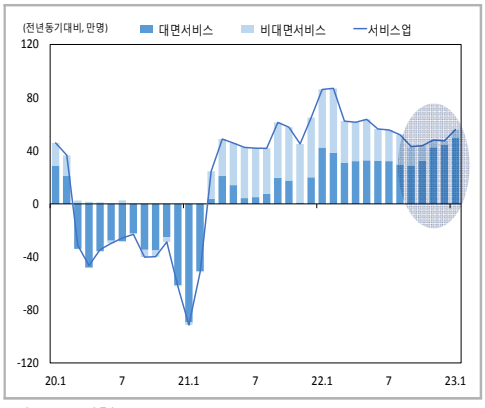
고용은 2022년 상반기 중 취업자 수가 매월 전년동기대비 80만 명씩 늘어나는 등 호조를 이어갔다. 다만 하반기 이후로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반기 매월 60만 명 선에서 하반기 40만 명 선으로 낮아졌다. 또한 일상회복이 본격화된 4분기 이후로는 대면서비스업이 고용상황 개선을 주도하였다. 제조업 등 서비스업 이외 업종에서는 하반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낮아지다가 최근 감소로 반전되었다.

| 그림 I-46 |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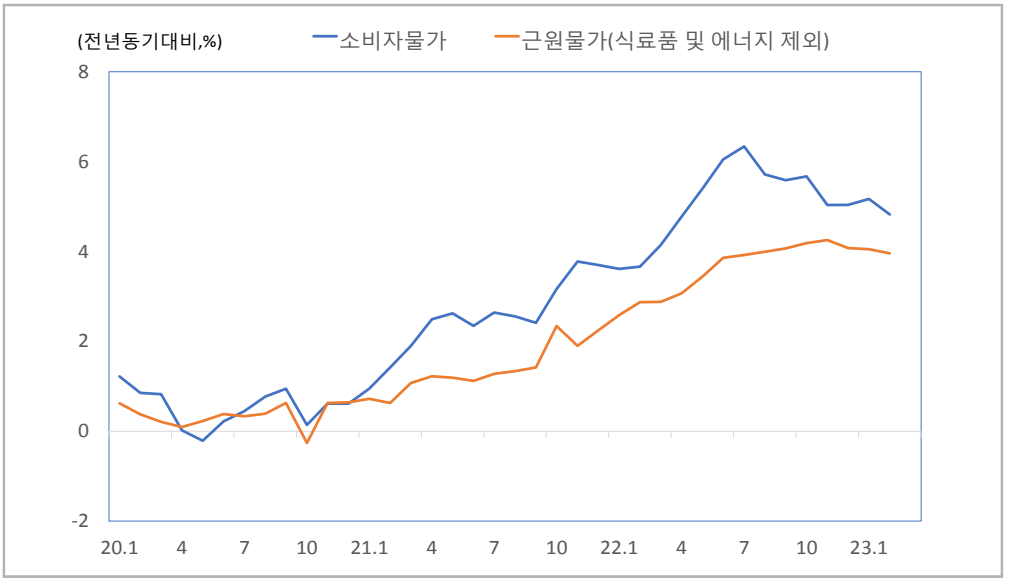
| 그림 I-47 |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물가는 2022년 중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 환율상승 등이 겹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중 각각 5.1%, 3.6%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1~2월에도 각각 5.0%, 4.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로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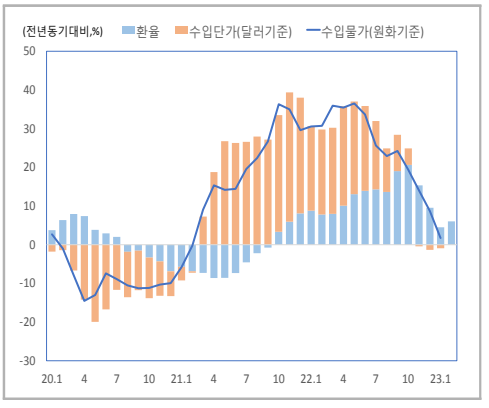
| 그림 Ⅰ-48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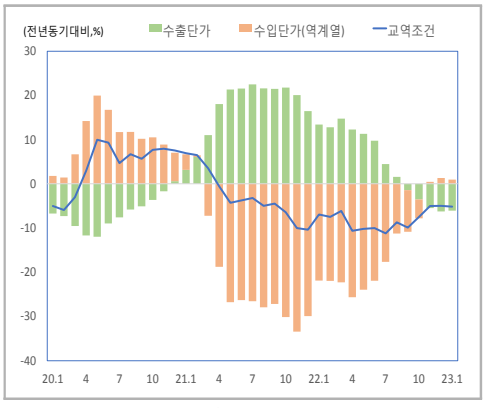
수입물가를 변동요인별로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까지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의 영향이 컸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환율의 영향이 확대되었다. 다만 최근에는 두 요인 모두 영향이 크게 줄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은 2021년 이후 악화일로이다. 2022년 상반기까지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으나 하반기 이후로는 반도체 가격 등 주력 수출품 가격 하락이 교역조건 악화를 주도하고 있다.

| 그림 Ⅰ-49 |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Ⅰ-50 |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주: 교역조건 = 수출단가/수입단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2023 경제전망 Ⅰ

지출부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Ⅱ

지출 부문별 전망

제1장 2023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경제성장률

제3장 민간소비

제4장 정부소비

제5장 건설투자

제6장 설비투자

제7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제8장 대외거래

제9장 소비자물가

제1장 2023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1절 2022년 전망 차이[14] 및 요인

2022년 실질GDP NABO전망치(2.5%)와 실적치(2.6%)와의 차이는 -0.1%p로 나타났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서 전망치보다 높은 실적치를 기록하였다. 전망치보다 낮은 실적치를 기록한 부문은 건설투자, 정부소비, 총수출·총수입이다.

부문별 전망차이의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2022년 민간소비 전망치(3.7%)와 실적치(4.3%) 간에는 -0.6%p의 전망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2022년 4/4분기에 해외 출입국 방역정책이 빠르게 정상화된 데다, 대면서비스 소비도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정부소비 전망치(5.3%)와 실적치(4.1%) 간에는 1.2%p의 전망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중 정부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계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등의 기타경상이전 등의 현금성 지출이 늘어나며 정부 총지출과 정부소비 간의 차이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또한 2017년 이후 자료를 통해 확인한 정부 재정집행의 상고하저(上高下底)의 행태를 전망에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2년 건설투자 전망치(-2.9%)와 실적치(-3.5%) 간에는 0.6%p의 전망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미분양이 크게 확대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설비투자 실적치(-0.5%)와 전망치(-4.9%) 간에는 4.4%p의 전망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지연된 투자가 2022년 하반기 중 시차를 두고 집행된 것이 전망치에는 반영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2022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치(4.3%)와 실적치(4.7%) 간에는 -0.4%p 전망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2022년 중 고금리,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수요가 예상보다 더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22년 총수출과 총수입의 전망치(4.6%, 4.2%)와 실적치(3.2%, 3.7%) 간에는 각각 1.4%p, 0.5%p의 전망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2022년 3/4분기 중 반도체

14) 실질GDP 실적치(잠정치, 2023.3.)와 NABO전망치(2023년 중기 경제전망, 2022.10.)와의 차이

등 주요수출품목의 가격과 물량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으며, 이에 따라 수입물량도 함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표 Ⅱ-1 | 2022년 전망과 실적치의 부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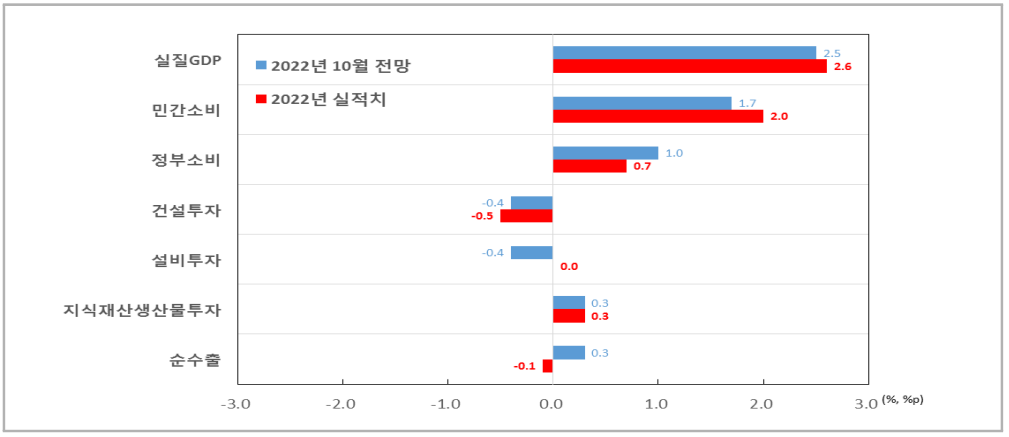
(단위: %, %p)

	중기전망 ('22.10월)	실적치	차이	전망차이의 부문별 기여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2.5	2.6	-0.1	-
민간소비	3.7	4.3	-0.6	-0.3
정부소비	5.3	4.1	1.2	0.3
건설투자	-2.9	-3.5	0.6	0.1
설비투자	-4.9	-0.5	-4.4	-0.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3	4.7	-0.4	0.0
총수출	4.6	3.2	1.4	0.6
총수입	4.2	3.7	0.5	0.2

주: 차이는 중기전망('22.10월)치에서 실적(잠정)치를 뺀 값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실질GDP 성장률 차이(-0.1%p)를 부분별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망치가 실적치를 하회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서는 기여도가 마이너스(각각 -0.3%p, -0.4%p)로, 전망치가 실적치를 상회한 정부소비, 건설투자, 순수출(총수출-총수입)에서는 기여도가 플러스(각각 0.3%p, 0.1%p, 0.4%p)로 나타났다.

| 그림 Ⅱ-1 | 2022년 전망과 실적치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제2절 2023년 수정 전망 요인

2023년 실질GDP 수정 전망(1.5%)은 중기 전망[15](2.1%) 대비 0.6%p 하향 조정되었다.

민간소비는 지난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다.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것은 소비의 상방 요인이나, 물가 안정화가 지연되는 것을 반영하였다. 정부소비의 경우 통합재정 경상지출과 국민계정 상 정부지출의 관계가 코로나19 이전 행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새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를 반영하여 중기 전망(4.0%) 대비 0.7%p 하향조정되었다. 건설투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둔화와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반영하여 중기 전망(0.4%) 대비 1.4%p 하향조정하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경기둔화 가능성,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중기 전망(1.2%) 대비 2.5%p 하향조정되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 전망 하방요인이 지난 예상보다 커진 점 등을 반영하여 중기 전망(4.4%) 대비 0.4%p 하향 조정하였다. 총수출과 총수입은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와 교역량 감소, 주요수출품목의 하강 속도를 고려하여 각각 중기 전망(4.1%, 6.1%) 대비 1.4%p, 1.9%p 하향 조정되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과 주요 공공요금 인상 계획 등을 반영하여 중기 전망(3.3%) 대비 0.2%p 상향 조정하였다.

수정전망과 지난 10월 중기전망의 실질GDP 성장률 차이(-0.6%p)를 부분별 성장기여도로 살펴보면 정부소비 -0.1%p, 건설투자 -0.3%p, 설비투자-0.2%p 하향 조정되었고, 순수출은 0.2%p 상향 조정되었다.

15) 2023년 중기 경제전망(2022.10월 발간) 기준

| 표 Ⅱ-2 | 2023년 전망의 부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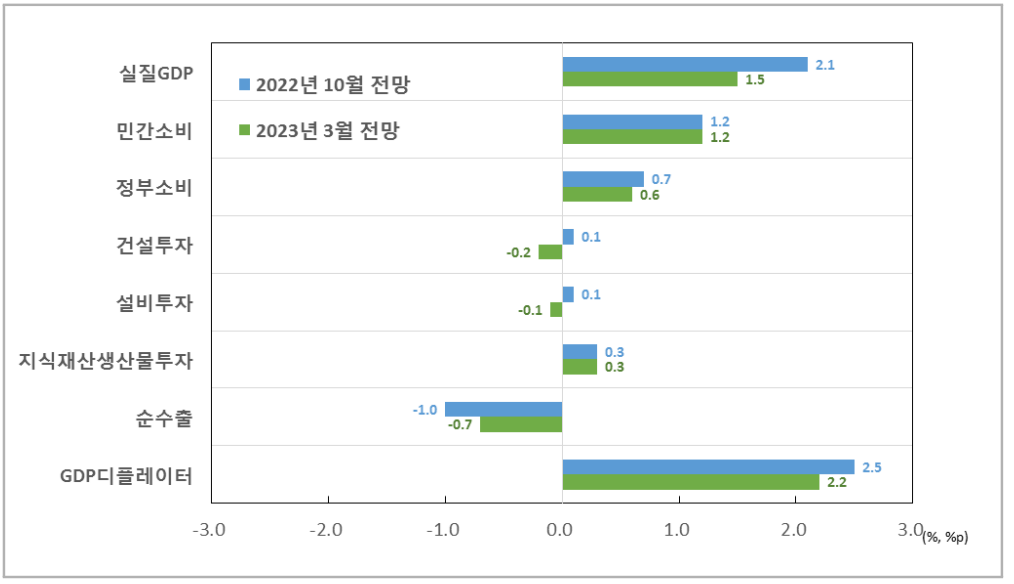
(단위: %, %p)

	중기전망 (22.10월)	수정전망 (23.3월)	차이	전망수정의 부문별 내역 (기여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2.1	1.5	-0.6	-
민간소비	2.4	2.4	0.0	-0.0
정부소비	4.0	3.3	-0.7	-0.1
건설투자	0.4	-1.0	-1.4	-0.3
설비투자	1.2	-1.3	-2.5	-0.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0	-0.4	0.0
총수출	4.1	2.7	-1.4	-0.7
총수입	6.1	4.2	-1.9	-1.0

주: 차이는 수정전망('23. 3월)치에서 중기전망('22.10월)치를 뺀 값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수정전망과 지난 10월 중기전망의 실질GDP 성장률 차이(-0.6%p)를 부분별 성장기여도로 살펴보면 정부소비 -0.1%p, 건설투자 -0.3%p, 설비투자-0.2%p 하향 조정되었고, 순수출은 0.3%p 상향 조정되었다.

| 그림 Ⅱ-2 | 2023년 전망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비교



제2장 경제성장률

● **2023년 경제성장률은 1.5%**로 전년보다 1.1%p 낮아질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f]	하반기[f]	연간[f]
4.1	3.0	2.2	2.6	1.2	1.8	1.5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중국의 경제 재개와 성장세 회복	•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및 통화 긴축 기조 유지
• 인플레이션 위험 해소 및 통화 긴축 종료	• 미 달러화 가치상승과 신흥국 물가 및 금융 불안 심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 격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우리 경제는 2023년 1.5% 성장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통화긴축과 세계경제 성장둔화의 영향으로 성장이 정체되겠으나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재개방 및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살아나면서 성장률도 반등할 전망이다. 반기별 성장률은 상반 1.2%, 하반 1.8%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023년 2.4% 증가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부터의 본격적인 일상회복이 기대되나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따른 실질소득 정체 등이 소비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소비는 2023년 3.3% 증가할 전망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낮아지겠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건전화 기조가 강조되면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2023년 전년대비 1.0% 감소할 전망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 미분양 주택 누증 등의 성장 제약요인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나 3기 신도시 착공 등이 예정된 하반기에는 부진이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설비투자는 2023년 1.3% 감소할 전망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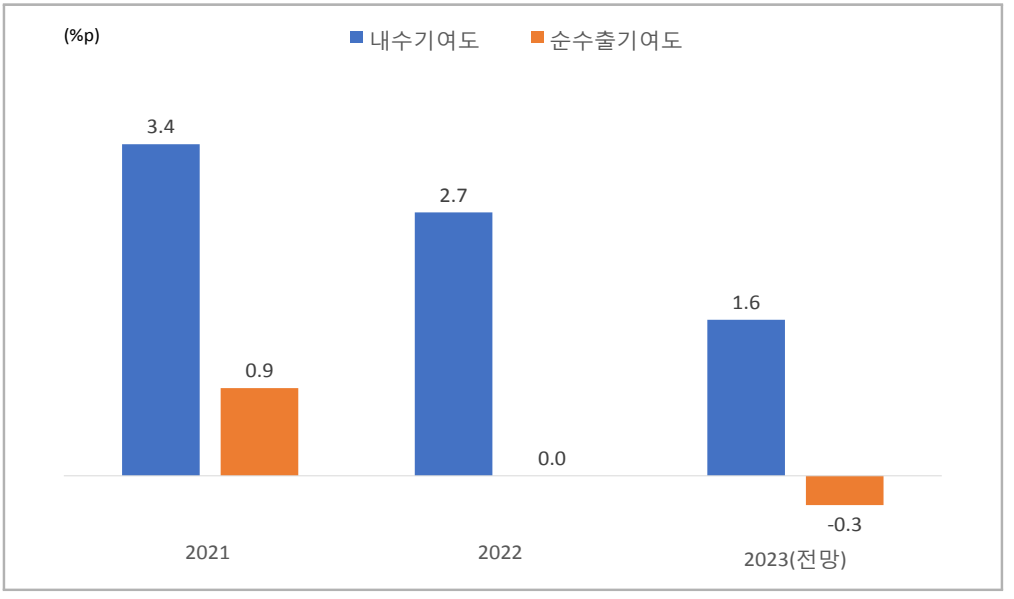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설비투자가 증가하겠으나,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투자여건 악화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감소로 전환될 예상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023년 4.0% 증가할 전망이다. 연구개발 등 수행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전망대비 소폭 하향 조정하였다.

총수출은 2023년중 2.7% 증가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세계수입수요 둔화와 주요 수출품목 부진의 영향이 크겠으나 하반기 중에는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총수입은 2023년 4.2% 증가할 예상이다. 하반기에는 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입 증가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2023년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6%p로 전년에 비해 1.1%p 낮아지겠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23년 -0.3%p로 2022년의 0.0%p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3년 3.7%로 전망하였다. 2023년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하락하겠으나('22년 2.6% → '23년 1.5%)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대비 상승하여('22년 1.2% → '23년 2.2%) 명목성장률은 2022년 3.8%와 비슷한 수준이 될 예상이다.

| 그림 Ⅱ-3 |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표 Ⅱ-3 | 2023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상반	하반
국내총생산	4.1	2.6	1.5	1.2	1.8
민간소비	3.7	4.3	2.4	3.1	1.8
정부소비	5.6	4.1	3.3	3.6	3.0
건설투자	-1.6	-3.5	-1.0	-2.4	0.3
설비투자	9.0	-0.5	-1.3	0.7	-3.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7	4.0	3.9	4.0
총수출	10.8	3.2	2.7	-0.5	5.7
총수입	10.1	3.7	4.2	3.2	5.0
경상수지(억달러)	883	298	200	-38	237
상품수출(통관)	25.7	6.1	-4.8	-10.2	1.0
상품수입(통관)	31.5	18.9	-6.0	-6.8	-5.2
소비자물가	2.5	5.1	3.5	4.1	3.0
GDP디플레이터	2.5	1.2	2.2	2.4	1.9
명목국내총생산	6.7	3.8	3.7	3.7	3.7

주: 1)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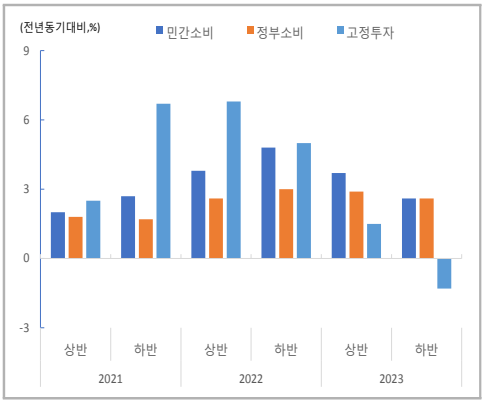
| 표 Ⅱ-4 | 명목GDP 성장률 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상반	하반
명목국내총생산	6.7	3.8	3.7	3.7	3.7
실질국내총생산	4.1	2.6	1.5	1.2	1.8
GDP디플레이터	2.5	1.2	2.2	2.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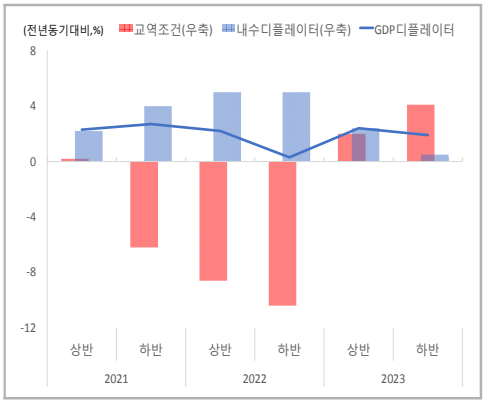
주: 1)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음영부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그림 Ⅱ-4 | 내수디플레이터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그림 Ⅱ-5 |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3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2022년에 비해 높아지는 것은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 경제 성장경로의 상방 요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가능성, 중국경제 재개방 효과, 인플레이션 위험 해소 및 추가긴축 우려 완화 등을 들 수 있으며, 하방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및 통화긴축 지속, 미 달러화 가치상승과 신흥국 물가불안 심화,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상방 요인보다는 하방 요인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제3장 민간소비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민간소비**는 전년(4.3%)보다 1.9%p 낮은 2.4%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f]	하반기[f]	연간[f]
3.7	4.1	4.5	4.3	3.1	1.8	2.4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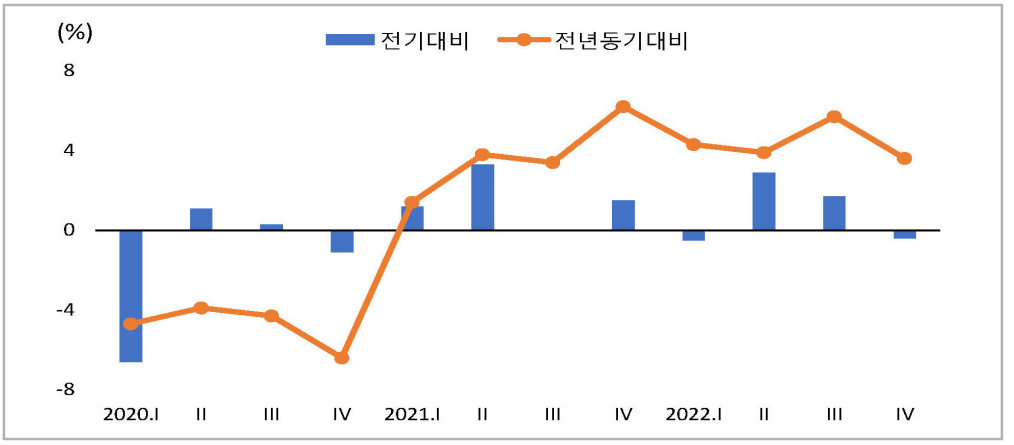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본격적인 일상회복	• 실질소득 제한적 증가
• 물가 상승세 둔화	• 가계 신용위험 확대
	• 소비심리 위축

2022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16]는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였다. 민간소비는 견조한 고용여건, 방역완화, 코로나19 확산기에 누적된 저축을 재원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을 지속하였다. 2022년 연간으로도 민간소비 증가율(4.3%)은 전년(3.7%)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성장률(2.6%)을 크게 상회하며 2022년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며, 2022년 연간 성장률 2.6% 가운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2.0%p에 달하였다.

이진희 경제분석관(jinhee@assembly.go.kr, 6788-4656)

16) 민간소비는 크게 가계소비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로 구분된다. 가계소비는 다시 국내소비, 거주자 국외소비, 공제항목인 비거주자 국내소비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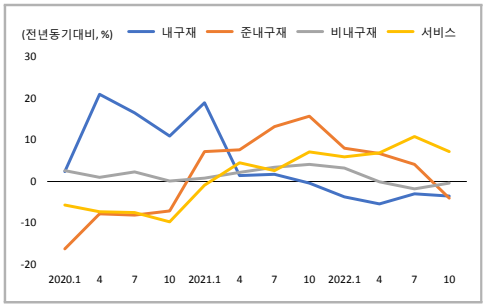
| 그림 Ⅱ-6 |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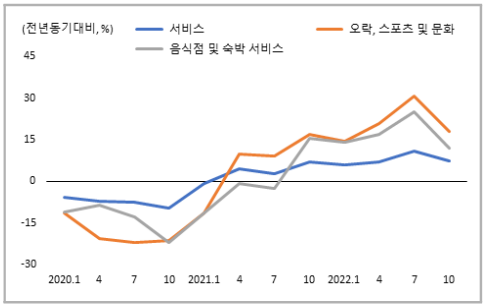
국내소비는 서비스와 준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서비스 소비는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특히 3/4분기에는 오락·스포츠·문화와 음식·숙박 서비스 소비가 각각 30.9%, 25.1% 증가했다. 준내구재 소비는 연초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4/4분기에 감소로 전환되었다. 2021년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2년 들어 기저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내구재 소비는 가정식을 위한 음식료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2022년 2/4분기 이후 감소로 전환되었다. 내구재 소비는 2022년 연중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2020~2021년 중 재택근무, 주택거래 및 이사 등 영향으로 가전 등 내구재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이사가 감소하였다. 또한, 내구재 소비 감소는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 위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그림 Ⅱ-7 | 재화형태별 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Ⅱ-8 | 서비스 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외소비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2022년 4/4분기 거주자 국외소비는 전년동기대비 74.0%, 비거주자 국내소비는 73.0% 증가하였다. 일본의 무비자 관광 재개(2022년 10월 11일) 등 해외 출입국 방역이 완화되며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였고, 국내에서도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와 PCR 검사의무가 해제되며 외국인의 국내 관광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4/4분기 거주자 국외소비와 비거주자 국내소비는 2019년도 대비 5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2023년에도 큰 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표 Ⅱ-5 | 최근 국외소비 동향

(단위: 십억원, %)

	2019년	2022년				B/A (%)
	4분기(A)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B)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8,824.8	2,772.9	3,016.5	3,702.9	4,429.7	50.2
	(-4.9)	(3.2)	(15.5)	(31.9)	(74.0)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	5,091.2	1,544	1,831.3	2,163.6	2,716.2	53.4
	(17.3)	(11.6)	(21.6)	(37.7)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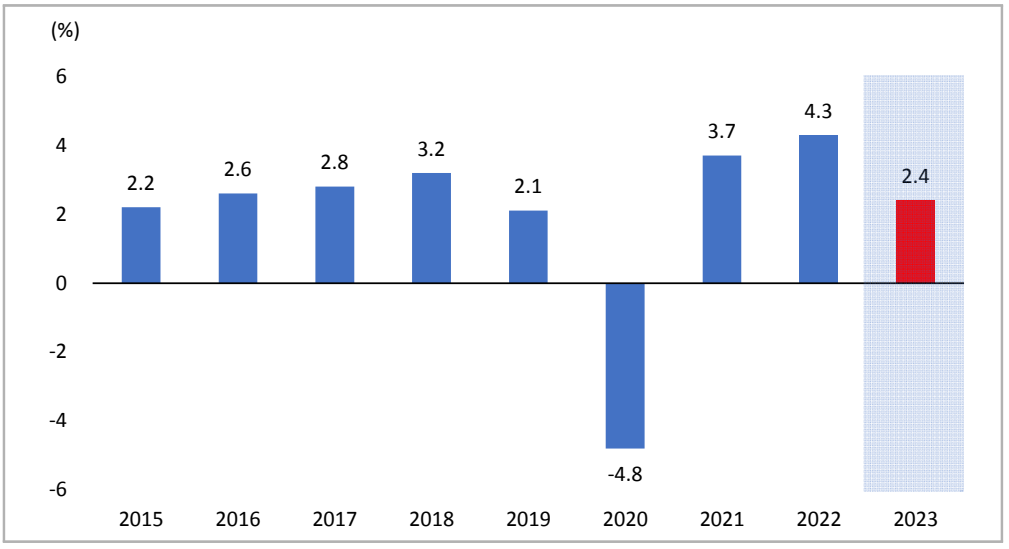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다만 최근에는 소비의 회복 흐름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2022년 4/4분기 민간소비는 3.4%(전년동기대비) 증가하여 3/4분기(5.7%)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더욱이 전분기대비로는 0.6% 감소로 전환되었다.

2023년 민간소비는 2022년(4.3%)에 비해 1.9%p 낮은 2.4% 증가가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누적된 저축이 소비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해외여행 수요[17]가

지속되고 코로나19로부터의 본격적인 일상회복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2022년의 회복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높은 물가수준이 가계소비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질 예상이다.

| 그림 Ⅱ-9 | 민간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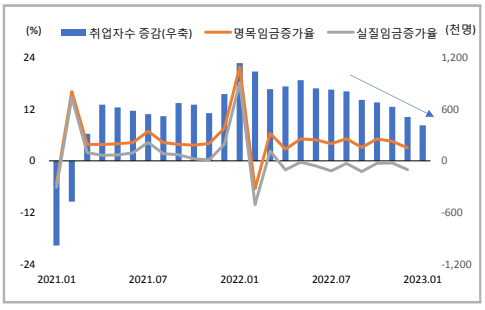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의 소비여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실질소득의 제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먼저 2023년에는 임금상승률과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소득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임금상승률과 취업자 수 증감이 4.9%와 81.6만 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3.5%와 14.7만 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국회예산정책처 전망[18])되기 때문이다. 2022년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22년 2/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2023년 중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도 실질소득 증가를 제한하겠다.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버스·지하철·택시 등 교통 요금이 지역별로 이미 인상되었거나 인상을 검토[19]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4/4분기 이자 비용 지출

17)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거주자의 국외소비로 집계되며, 민간소비의 증가항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정책처(2022)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의 BOX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2023 경제전망 Ⅳ: 소득 부문」 참조
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8장 소비자물가에 설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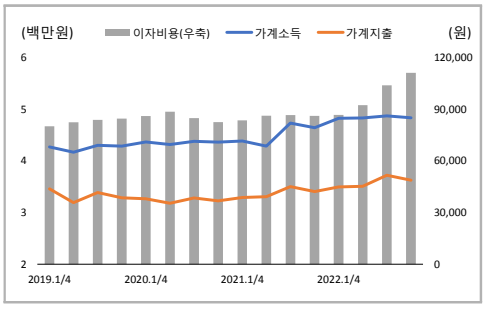
은 2006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였다. 2023년에는 누적된 금리 상승의 효과[20]가 나타나며 가계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 그림 Ⅱ-10 | 취업자 수 증감 및 임금상승률



주: 1) 임금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실질임금증가율 = 명목임금증가율 −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그림 Ⅱ-11 | 가계소득·지출 및 이자 비용



주: 전국 1인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는 가계신용위험 확대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있다. 먼저 금융기관들은 가계의 대출 부실을 우려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 저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동성 제약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BOX 3] 참고). 또한, 2022년 6월 이후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소비심리는 민간소비를 보통 1~2분기 선행한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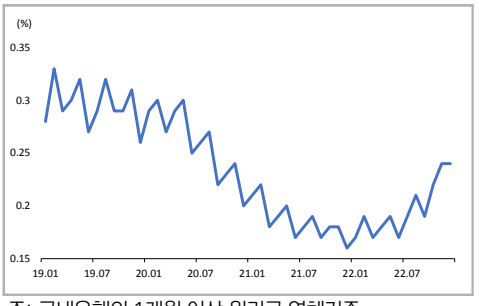
반면, 본격적인 일상회복과 물가 오름폭 둔화는 민간소비의 상방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며 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2년 1월에 1.25%였으나 2023년 1월 기준 2.25%p 인상되어 3.5%까지 상승하였다.
21) 보다 자세한 사항은 「NABO 경제 동향」 제 32호의 "최근 경제심리지표 동향과 특징"에 설명되어 있다.

[BOX 3] 최근 가계의 신용위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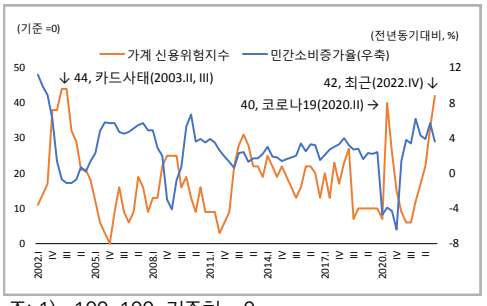
지속적인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12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16%이었으나 2022년 12월에는 0.24%까지 상승하였다.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차주의 이자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며 상환 능력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4분기에는 7이었으나 2022년 4/4분기에 42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불안감이 고조되었던 2020년 2/4분기(40)보다도 높으며, 2003년 2, 3/4분기 신용카드사태(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민간소비와 가계신용위험지수 간의 상관계수는 -0.33[22]이며, 이는 가계의 신용위험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계대출 연체율



주: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가계 신용위험지수



주: 1) -100~100, 기준치 = 0
2) (+)부호는 신용위험 증가, (-)부호는 그 반대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대출행태서베이」

22) 2002년 1/4분기부터 2022년 4/4분기까지 기준

제2절 민간소비 관련 정책변수 검토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과표 조정과 유류 및 소비세 인하는 세금부담을 낮추어 2023년 민간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연봉이 3,000만 원(과세표준 1,400만 원)인 직장인의 소득세액은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7.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3년 2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개인지방소득세의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도 소득금액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세율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2022년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2023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되었다. 다만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되었다.[23] 또한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 기간이 6개월(1월 1일~6월 30일) 연장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23)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와 LPG부탄의 유류세는 37% 인하를 유지

제4장 정부소비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정부소비**는 전년(4.1%)보다 0.8%p 낮은 3.3%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f]	하반기[f]	연간[f]
5.6	5.2	3.0	4.1	3.6	3.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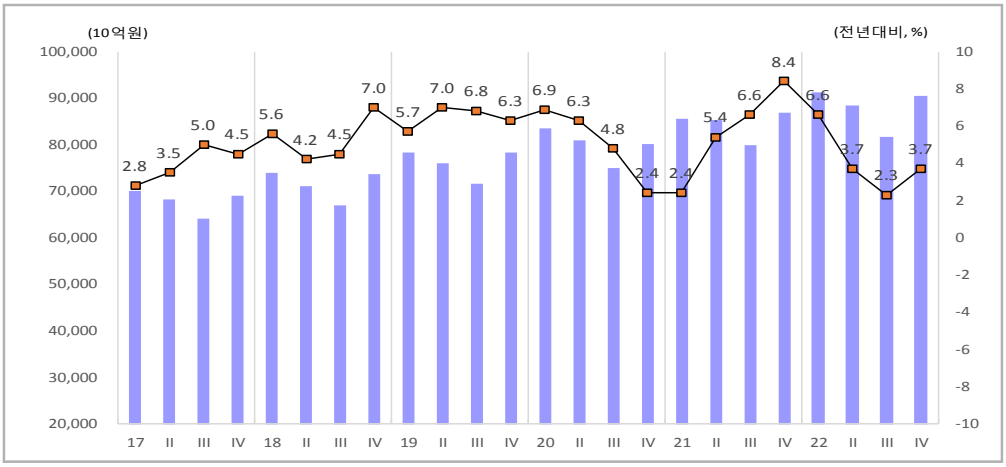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경기대응적 재정지출 증가 가능성	•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 강화
• 건강보험 급여비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증가 추세 회복 가속화	•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오름세 확대

2022년 하반기 중 실질정부소비는 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와 4/4분기 각각 2.3%, 3.7%로 3/4분기 중 두드러진 둔화세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2022년 중 실질정부소비는 전년대비 4.1%(상반기 5.2%, 하반기 3.0%) 증가하여, 2021년 5.6%에 비해 증가율이 1.5%p 하락하였다.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 그림 Ⅱ-12 | 실질정부소비의 분기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23년 실질정부소비(351.6조 원)는 전년(4.1%)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어 3.3%(상반기 3.6%, 하반기 3.0%) 증가할 전망이다. 실질정부소비가 전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요인은 정부의 재정지출,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정부소비 지출 항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023년 정부의 재정지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줄어 정부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2023년 중앙정부 예산안 기준 639.0조 원으로 본예산 기준 전년(607.7조 원) 대비 5.2%(31.4조 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의 재정지출 증가율 8.9%에 비해 3.7%p 하락한 것이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679.5조 원 대비로는 6.0%(40.5조 원) 줄었다.

| 표 Ⅱ-6 |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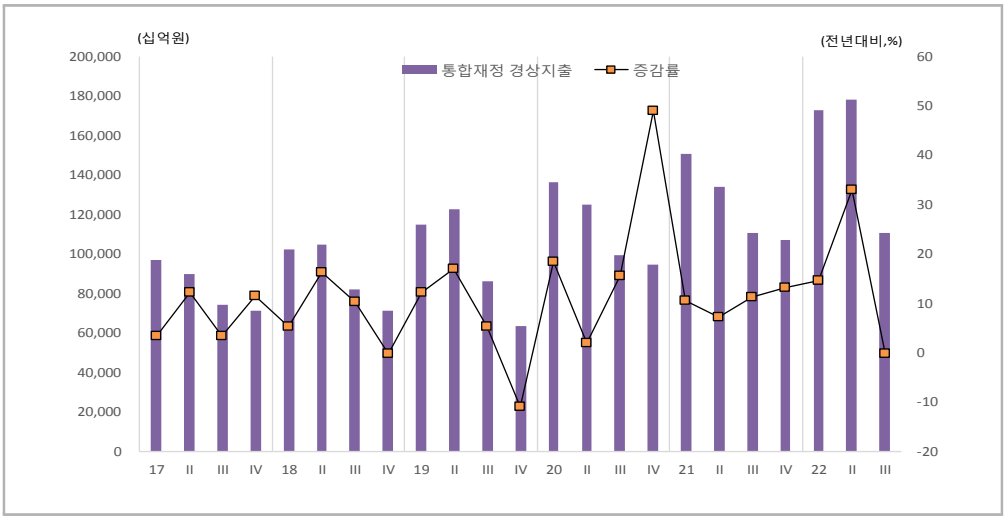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 예산(C)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본예산(A)	추경(B)		C-A	(C-A)/A	C-B	(C-B)/B
총지출	607.7	679.5	639.0	31.4	5.2	-40.5	-6.0
- 회계(세출)	413.0	449.8	441.3	28.3	6.9	-8.5	-1.9
일반회계	350.2	388.2	378.5	28.3	8.1	-9.7	-2.5
특별회계	62.8	61.6	62.8	-0.1	-0.0	1.2	1.9
- 기금(지출)	194.6	229.7	197.7	3.1	1.6	-32.0	-13.9

주.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심의결과」 4페이지

국민계정 상 일반정부의 정부소비지출 항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정지출은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상의 경상지출이다[24]. 통합재정 경상지출 중 재화 및 용역비가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그림 Ⅱ-13 | 통합재정(중앙정부) 경상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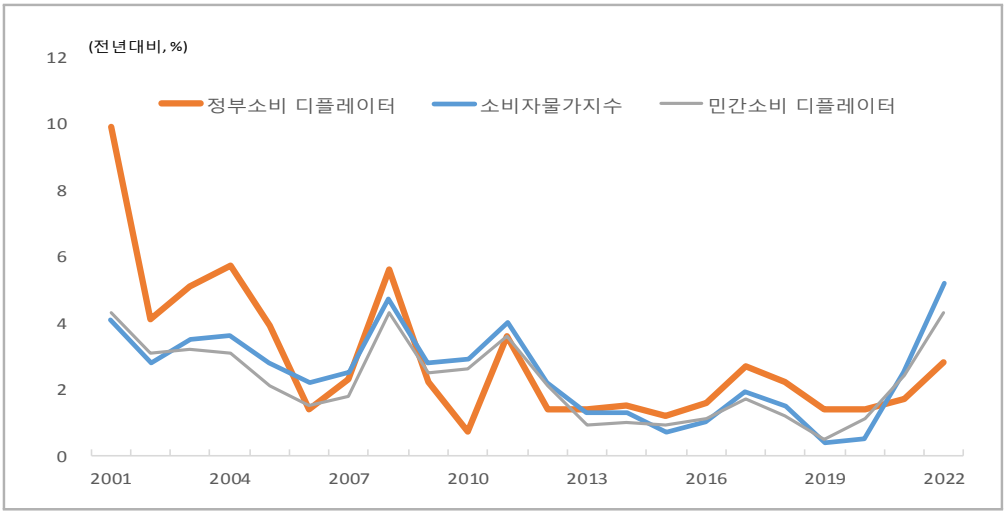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정부소비디플레이터는 2022년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겠지만 코로나19 이전 추세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며 실질정부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2023년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7%로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 재정지출의 재화 및 용역 항목의 가격이 2023년에도 2022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5] 2022년 정부소비디플레이터는 전년대비 2.8%(상반기 2.7%, 하반기 3.1%) 상승하여 2013~2021년 중 연평균 1.7%보다 높았다.

24) 그러나 국민계정 정부소비와 통합재정 중앙정부 경상지출은 포괄범위와 부문별 지출 항목의 상이함으로 인해 분기별로 안정적인 관계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된 논의는 박명호·오종현(2017),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22), "2023년 및 중기경제전망 I" 등을 참조.

25)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은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지속, 공무원 보수 인상률 상승(2022년 1.4%→2023년 1.7%~2.9% 예상) 등이다.

| 그림 Ⅱ-14 |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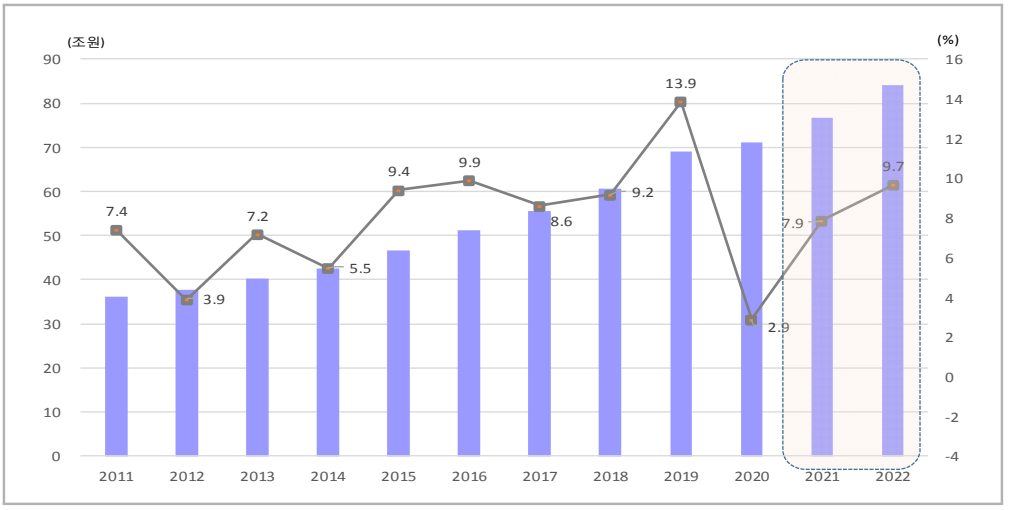
정부소비를 지출부문별로 보면 사회보장현물수혜 중 가장 주요한 지출항목인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2023년 정부소비 변동을 결정하는 주요 항목이 될 전망이다.[26]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던 건강보험급여비 지출[27]은 사회활동 정상화, 방역완화 등으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7.9%, 9.7% 증가하였다. 이러한 회복 추세는 2023년에도 지속되어 정부소비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정부소비 = 총산출(부가가치+중간소비) − 상품·비상품 판매수입 + 사회보장현물수혜

26)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지출은 일반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최종소비지출로 총산출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계산된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이며, 그 중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사회보장현물수혜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은 각각 102.2조 원과 76.6조 원으로 전체 명목정부소비 350.1조 원의 30.8%, 20.4%를 차지하였다.

27) 2020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계의 호흡기·소화기계 관련 질환자가 감소한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5년(2015~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 10.2%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 그림 Ⅱ-15 |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추이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연도 예산안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현황」

2023년 실질정부소비의 주요 상방요인으로는 경기대응적 재정지출 증가 가능성과 코로나19 기간 둔화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회복 가속화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경기안정화 대책으로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를 통해 경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민간소비 등 내수지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주요 하방요인으로는 정부의 재정건전 기조 강화와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오름세 확대 등이다. 정부소비디플레이터 항목 중 공공서비스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주요 서비스가격은 소비자물가의 서비스가격과 연동되어 2023년에도 견실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표 Ⅱ-7 | 정부소비 전망

(전년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f]	하반기[f]	연간[f]
실질정부소비	5.6	5.2	3.0	4.1	3.6	3.0	3.3
명목정부소비	7.5	8.0	6.2	7.1	6.5	5.6	6.0
디플레이터	1.7	2.7	3.1	2.8	2.9	2.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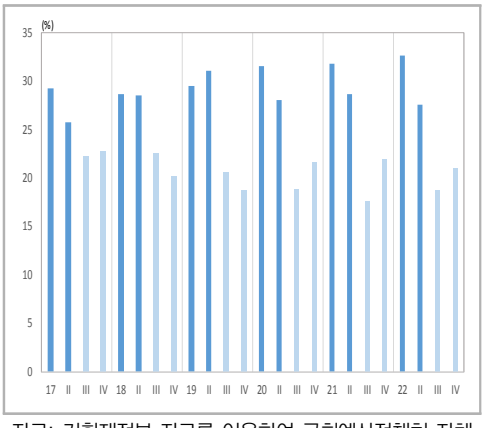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제2절 정부소비 관련 정책변수 검토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현 경기 여건을 고려하여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3년 중앙정부의 총지출 조기 집행 목표는 65%로 2022년 63%에 비해 소폭 상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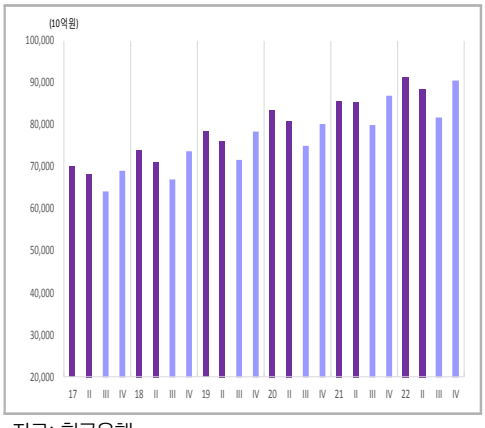
지난 2017년 1/4분기부터 2022년 3/4분기까지 재정지출 진도율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집행 패턴을 살펴보았다. 분기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중 예외 없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시행하는 재정지출의 상고하저(上高下低)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요 조기 집행 항목 중 정부소비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건강보험급여 조기 지급, 정부가 공공행정, 국방, 공중보건 등의 집합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예산,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등의 조기 집행일 것이다. 정부소비의 분기별 추이를 보면 정부소비디플레이터의 변동을 감안한 실질정부소비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고하저(上高下低) 패턴을 볼 수 있었다.

| 그림 Ⅱ-16 | 재정지출 진도율 분기별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 그림 Ⅱ-17 | 실질정부소비 분기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23년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28]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는 정부소비 둔화를 완화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의무지출 중 정부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의 증가는 정부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3

28) 정부지출은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과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로 나눌 수 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한다.

년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본예산 기준 2022년 49.9%에서 2023년 53.5%로 증가하는 반면,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비중은 2022년 50.1%에서 2023년 46.5%로 줄어들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 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크게 구분된다.[29] 의무지출 중 정부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복지 분야의 영유아보육료, 자녀양육비, 지방이전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이다.

| 표 Ⅱ-8 | 2023년 총지출과 의무지출 전망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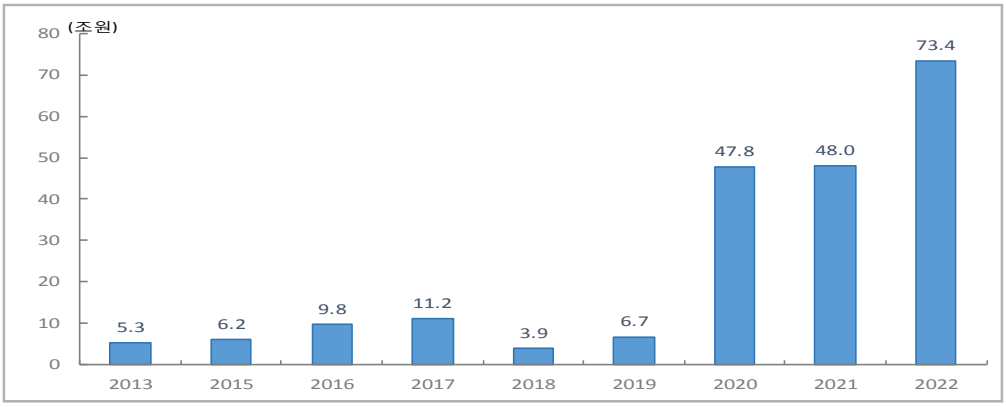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본예산	추경예산	
총지출	607.7	679.5	639.0
(증가율)	(8.9)	(21.8)	(5.2)
- 의무지출	303.2	329.7	341.8
(비중)	(49.9)	(48.5)	(53.5)
- 재량지출	304.5	349.8	297.3
(비중)	(50.1)	(51.5)	(46.5)

주: 2023년 증가율은 2022년 본예산 대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9.

마지막으로 경기대응적 재정지출 증가 가능성이다. 새정부는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2007~2022년 기간 중 2008~2009년, 2013년, 그리고 2015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추경을 편성해왔다.

29) 「2022년~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의 추정에 따르면 2023년 의무지출 339.3조 원으로 GDP대비 53.3%이고, 그 중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153.7조 원, 지방이전재원은 156.9조 원, 이자지출은 21.4조 원, 기타 의무지출은 7.3조 원이다.

| 그림 Ⅱ-18 | 2013~2022년 추경안의 세출 규모



주: 2016년, 2021년, 2022년은 각각 국채상환지출 1.2조 원, 2.0조 원, 9.0조 원이 제외된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8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제5장 건설투자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건설투자**는 전년(-3.5%)보다 2.5%p 높은 1.0% 감소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f	하반기f	연간f
-1.6	-4.5	-2.6	-3.5	-2.4	0.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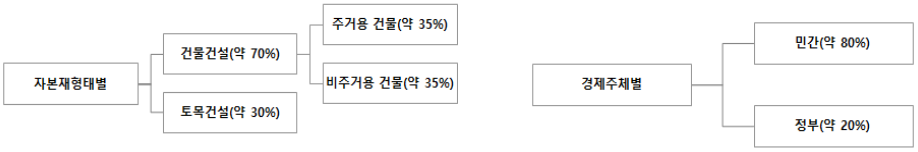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3기 신도시 개발	• 자금조달 여건 악화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미분양 확대
• 부동산 거래활성화 정책	• 공공부문 투자 감소
• 자재 가격 안정화	

2022년 하반기 중 건설투자[30]는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하였다. 건설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둔화, 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불안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연간으로도 3.5% 감소하였다. 2021(-1.6%)년에 비해 감소 폭이 확대되었으며, 건설경기가 침체하였던 2018년(-4.6%) 이후 가장 큰 하락을 보였다. 더욱이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하반기로 갈수록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4/4분기 건설수주(경상)는 전기대비와 전년동기대비로 42.9%와 15.8%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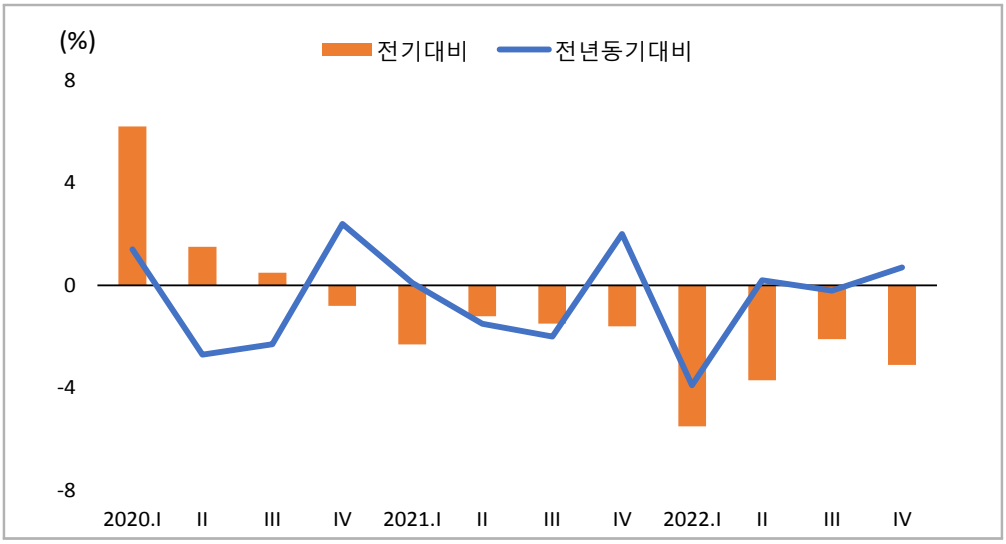
이진희 경제분석관(jinhee@assembly.go.kr, 6788-4656)

30) 건설투자는 자본재 형태와 주체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 )안은 건설투자에서의 비중을 나타낸다.

| 그림 Ⅱ-19 |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 표 Ⅱ-9 | 2022년 건설투자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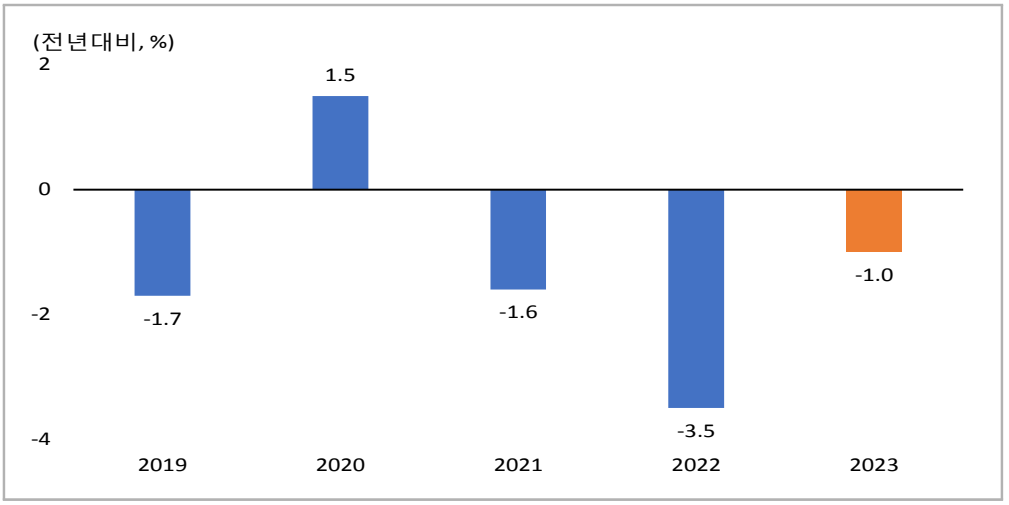
(전년대비, %)

구분		동행지표		선행지표
		건설투자[1]	건설기성[2]	건설수주(경상)
발주자별	민간	-2.5	-	13.0
	정부(공공)	-7.4	-	6.2
형태(공종)별	건물(건축)	-1.7	4.1	8.3
	토목	-8.3	-1.9	24.3
전체		-3.5	2.5	11.7

주: 1) 한국은행의 건설투자(= 산출액 + 부대비용 - 재고증감)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하여 전수추계
2) 통계청의 건설기성(= 산출액 + 매출VAT)은 상위 50%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023년 건설투자는 1.0% 감소가 전망된다. 2021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투자 부진은 상반기까지 지속되다 하반기가 되어서야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자금조달 어려움과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부터 주택 착공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주거용 건물투자의 감소가 우려된다. 하반기에는 경기둔화로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부진하겠지만 3기 신도시 착공으로 주거용 건물투자가 증가로 전환되며 건설투자 부진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 그림 Ⅱ-20 | 건설투자 증감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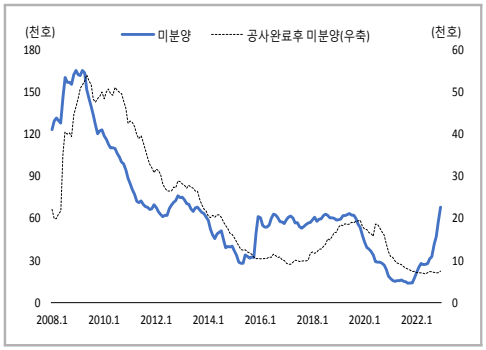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건설투자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시장 긴축이 이어지고 건설투자 선행지표가 위축되고 있으며, 경기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 공공부문 투자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먼저 금융 측면에서 건설업계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건설사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이 불안해지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미분양에 따른 사업성 우려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PF 금리가 급등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투자 계획의 철회나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용 건물투자는 미분양과 착공물량 등 선행지표의 둔화 흐름이 뚜렷하다.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31] 주택 수가 증가하고 신규 분양이 지연되거나 도급 계약 후 착공을 보류하는 현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준공에 비해 착공물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주거용 건물투자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주거용 건물투자가 감소했던 2018년에도 초과준공 물량이 유지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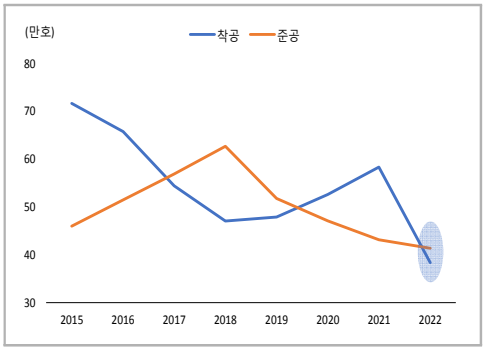
31) 미분양은 주택 재고로 인식되어 건설투자의 차감항목이다.

| 그림 Ⅱ-21 | 미분양 주택 추이



주: 공사완료후 미분양은 사용검사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 정의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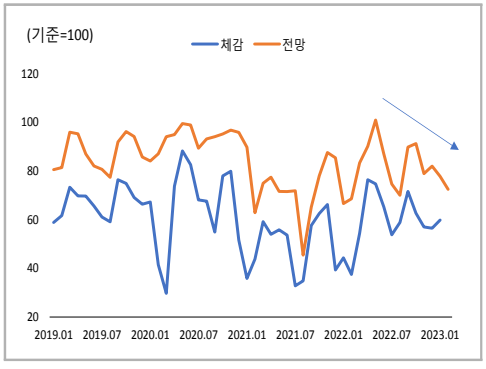
| 그림 Ⅱ-22 | 주택 착공 및 준공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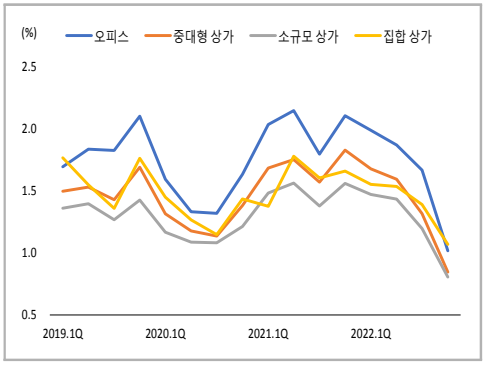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최근의 내수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소상공인BSI)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악화되고 있다. 또한 상업용부동산의 투자수익률[32] 하락은 상업용 건물투자 부진으로, 설비투자 감소는 공업용 건물투자 감소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예컨대 최근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서[33] 반도체 공장 신설 및 증설 계획이 지연되거나 보류되고 있다. 공업용 건물투자는 반도체 등 IT 업종의 공장과 물류시설 증설 계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그림 Ⅱ-23 | 소상공인 부문별 실적 및 전망



주: 100이상은 경기호전, 100미만은 경기악화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그림 Ⅱ-24 |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32) 여기서 투자수익률은 부동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 등 소득수익률과 부동산가격 증감에 의한 자본수익률을 합한 개념이다.
33) 「2023 경제전망 III: 생산 부문」 참조

토목투자는 건전재정 기조로 2023년 SOC 예산 축소와 공공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며 둔화될 전망이다. 2023년 SOC 예산은 25.1조 원으로 2022년 대비 약 3조 원 감액되었으며 도로, 철도, 지역 및 도시 등에서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에서도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계획이 축소될 전망이다.

| 표 Ⅱ-10 | SOC 분야 재정규모

(단위: 조원,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SOC 분야	19.7	23.2	26.5	28	25.1
- 도로	5.9	7.1	7.8	8.5	7.8
- 철도	5.5	6.9	8.1	8.6	7.8
- 해운·항만	1.7	1.9	2.1	2.0	1.9
- 수자원	1.7	1.3	1.6	1.6	1.7
- 항공·공항	0.2	0.3	0.4	0.4	3.9
- 물류 등 기타	2.4	2.9	3.1	3.3	
- 산업단지	0.3	0.3	0.4	0.5	
- 지역·도시	2.0	2.4	3.1	3.0	2.3
정부 총지출	475.4	512.3	558.0	607.7	638.7
총지출 대비 SOC 비중	4.1	4.5	4.7	4.6	3.9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다만 정부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착공, 자재 가격 안정화는 건설투자의 상방요인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및 대출 규제와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완화하고 있다. 1.3 부동산 대책에서는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고 주택담보대출 조건도 점차 완화[34]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LTV 상한도 30% 이내로 허용되어 차주의 대출한도가 증가하였다. 주택건설에서는 3기 신도시와 정비사업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3분기까지 대지조성 착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 들어 자재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도 건설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멘트, 레미콘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형강, 철근, 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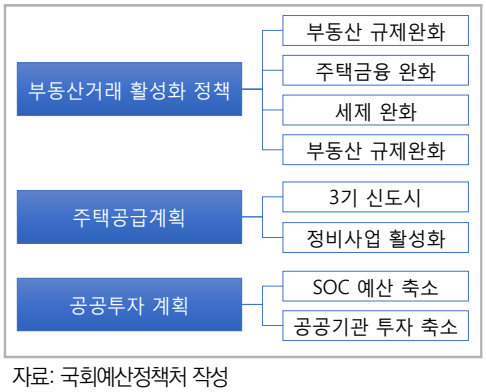
34) 2022년 말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였으며, 2023년 2월 2일에는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를 폐지하였다. 3월 2일부터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었다.

콘 가격은 내림세를 보였다. 건설용중간재 국내공급물가증가율도 2021년 10월(30.2%)을 정점으로 15개월 연속 하락해 2023년 1월에 5.9%까지 하락하였다.

제2절 건설투자 관련 정책변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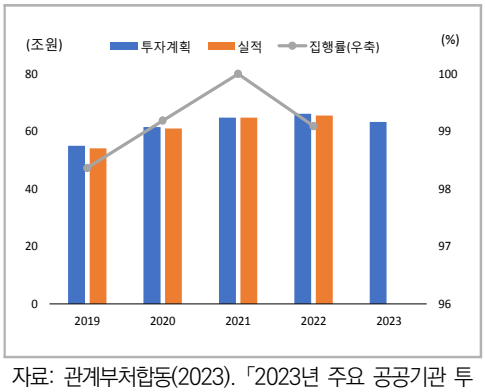
2023년 건설투자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정책, 주택공급계획, 공공투자 계획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부동산거래 회복을 위해 기존의 규제 및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세제 개선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거래회복을 위한 주택금융 완화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가 논의[35]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정책과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주택공급계획은 주택투자의 위축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투자 축소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토목건설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 그림 Ⅱ-25 | 건설투자 관련 정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림 Ⅱ-26 | 공공기관 투자계획 목표 및 실적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35) 정부는 2022년 말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3월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6장 설비투자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설비투자**는 전년(-0.5%)보다 0.8%p 낮은 1.3% 감소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f]	하반기[f]	연간[f]
9.0	-6.4	5.6	-0.5	0.7	-3.2	-1.3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차세대 기술 관련 선제적 투자 수요	• 국내 경기둔화
• 반도체부문 설비투자 세제지원 혜택	• 반도체 업황 부진
	• 투자비용 상승

2022년 설비투자는 상반기에 크게 감소(-6.4%)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증가(5.6%) 전환하며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하였다. 2022년 상반기 설비투자의 감소 요인으로는 2021년 상반기(14.1%) 기저효과를 들 수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설비투자가 증가 전환된 것은 2021년 3/4분기~4/4분기 기간 중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 지연되었던 투자가 시차를 두고 집행된 영향으로 보인다.([그림 Ⅱ-27] 참조)

| 표 Ⅱ-11 | 설비투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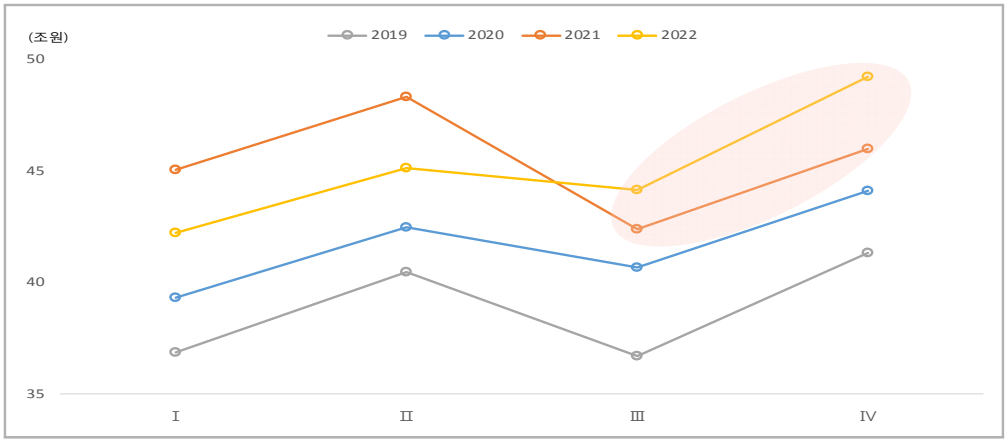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1/4	2/4	3/4	4/4	연간
설비투자	9.0	-6.2	-6.6	4.1	7.0	-0.5
운송장비	-1.5	-12.7	-15.3	1.4	-8.1	-9.3
기계류	12.8	-4.3	-3.6	4.8	12.3	2.2

자료: 한국은행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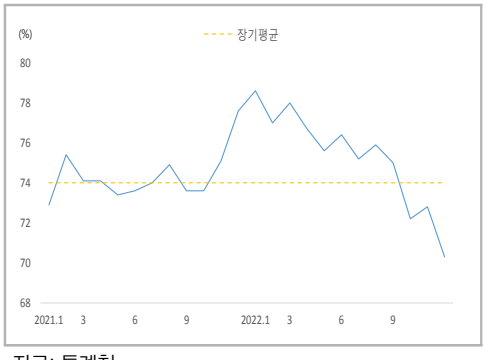
| 그림 Ⅱ-27 | 설비투자 규모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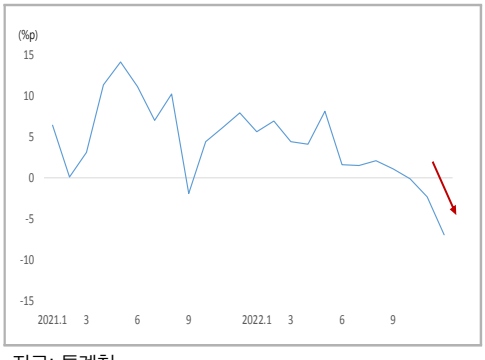
설비투자의 향후 수요를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은 2022년 하반기 들어 점차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 설비투자 BSI는 2022년 2월(101) 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23년 2월에는 89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22년 3월 78.0%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12월에는 70.3%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36] 역시 2022년 5월 8.1%p에서 2022년 12월에는 -6.9%p까지 떨어지면서 설비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림 Ⅱ-28 | 제조업 평균가동률



자료: 통계청

| 그림 Ⅱ-29 |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자료: 통계청

36) 생산지수 증가율에서 생산능력지수 증가율을 뺀 값으로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향후 설비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냄

2023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전년도의 기저효과(-6.4%)로 전년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이와 같은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내수 위축,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위축되며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2023년 설비투자는 상반기 소폭 증가(0.7%), 하반기 감소(-3.2%) 전환하며 연간으로는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설비투자의 주요 하방요인으로는 국내 경기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투자비용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경기국면을 나타내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37]는 2022년 10월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3년 1월에는 기준선(100) 아래인 99.4을 기록하면서 최근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경기둔화는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신규 설비투자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은행이 발표한 「설비투자계획조사」(2022.12.)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한 경기 전망"으로 조사되었다.

| 표 Ⅱ-12 | 2023년 설비투자 계획 전망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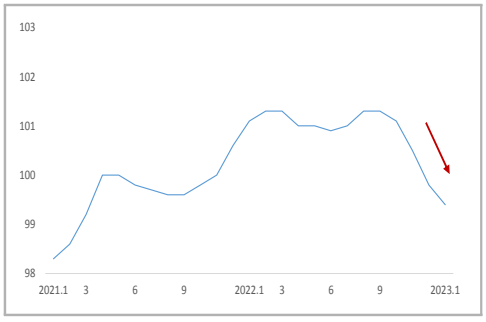
	2022[p]	2023[f]
전체	3.7	-2.6
제조업	10.2	-8.6
비제조업	-4.5	6.2

주: p는 실적 잠정치, f는 계획 전망치
자료: KDB산업은행(2022.12.)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반도체 시장(-4.1%)과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17.0%)은 모두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T부문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D램 고정가격은 2022년 연간으로 18.9% 감소하였다(DRAMeXchange). 이와 같은 반도체 업황 부진은 국내 설비투자의 약 30%(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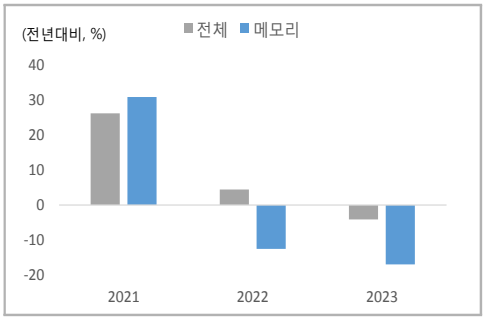
37) 경기동행지수에서 추세변동분을 제거한 것으로 현재 경기 국면 및 전환점의 단기 예측에 이용

| 그림 Ⅱ-30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Ⅱ-31 |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 WSTS(2022.11.)

기업들의 투자비용 상승도 2023년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3.50%까지 인상되었다. 또한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에 따라 2023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높은 기준금리와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기업들의 투자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신규 투자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3년 설비투자의 주요 상방요인으로는 차세대 기술 관련 선제적 투자 수요, 반도체부문 설비투자 세제지원 혜택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친환경·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 부문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해당 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2023.1.3.)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023년 한시), ②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③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2023년 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세액공제 지원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촉진시켜 설비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다.

| 표 Ⅱ-13 |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구분	당기분(①+②)			③ 2023년 경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증가분
일반	①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②	8 → 15	8 → 15	16 → 25	4 → 10

자료: 기획재정부(2023.1.3.)

제2절 설비투자 관련 정책변수 검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12.21.)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기업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 금융 인센티브, 규제혁신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투자분에 한정하여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며(2022.12.21.),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였다(2023.1.3.)[38].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에 이어 첨단 디스플레이 업종이 포함되면서 세액공제 대상 또한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산은·기은),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보증 프로그램(신보·기보)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23년에는 국내경기 둔화,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국내 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와 같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국내 설비투자의 하락세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표 Ⅱ-14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방향

구분	내용
세제지원	•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 상향(2023년 한정)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최대 25%)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검토
금융 인센티브	•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지원
민자사업 활성화	• 신규사업 발굴·발주 확대, 민간참여 제고, 신유형 민자도입 등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규제 혁신	•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
경영활동 지원	• 기업투자·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M&A 신고면제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12.21.), 기획재정부(2023.1.3.)

38)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적용됨

제7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4.7%)보다 0.7%p 낮은 4.0%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f	하반기f	연간f
4.4	4.6	4.9	4.7	3.9	4.0	4.0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전략·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 기업실적 둔화
• 문화·예술산업 업황 호조	

2022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4.7%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연구개발투자에서 2.6%,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서 9.8% 증가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높은 증가세는 반도체·전기차 등 신성장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IT 관련 소프트웨어투자 그리고 오락·문화 작품 등 콘텐츠 산업 관련 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 표 Ⅱ-15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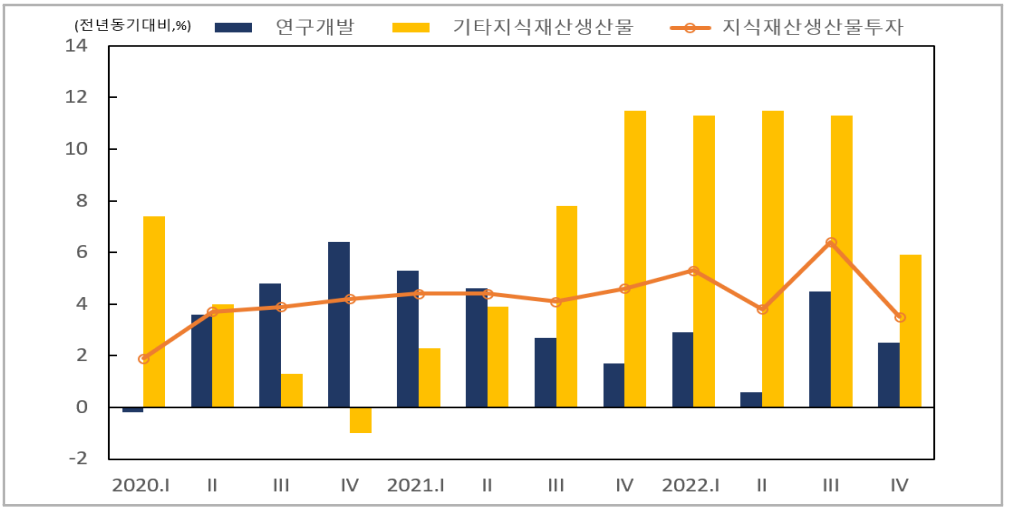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202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4	4.4	5.3	3.8	6.4	3.5	4.7
- 연구개발투자	3.7	3.5	2.9	0.6	4.5	2.5	2.6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	2.7	6.6	11.3	11.5	11.3	5.9	9.8

자료: 한국은행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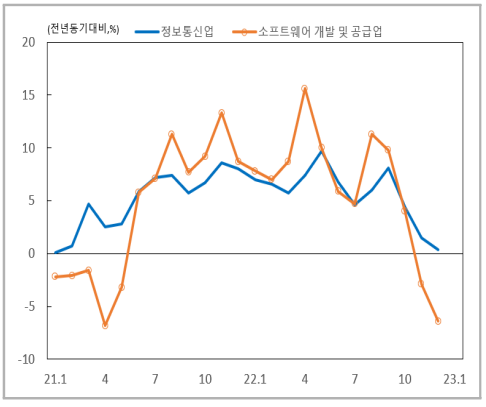
| 그림 Ⅱ-32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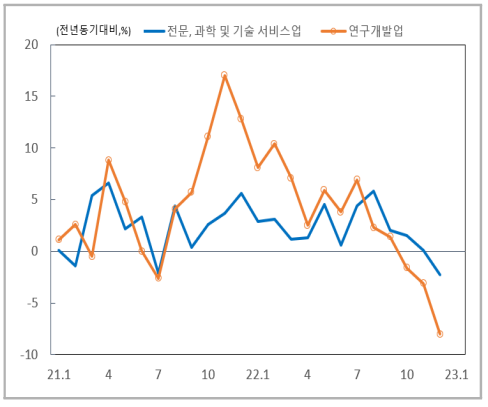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관련된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생산지표 동향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생산활동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3/4분기까지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높은 성장세는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 확대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2022년 4/4분기 이후에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관련 생산지표들의 성장률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 그림 Ⅱ-33 | 정보통신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 통계청

| 그림 Ⅱ-34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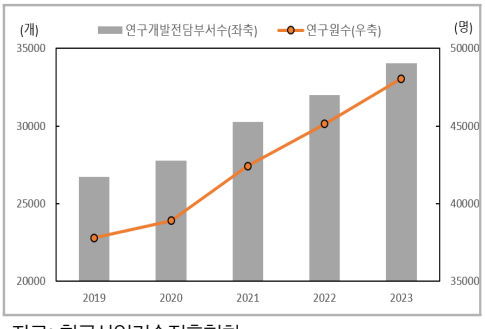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연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산업과 신성장부문에 대한 투자는 견조할 예상이나,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 전망(4.4%)보다 0.4%p 하향 조정하였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에 3.9%, 하반기에 4.0%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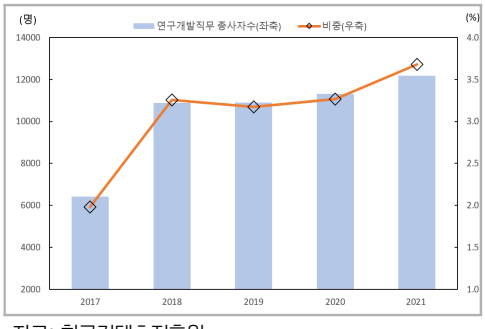
2023년에도 미래전략산업과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확대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 1월 연구개발전담부서 수는 34,027개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하였으며, 연구원 수는 48,054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며 전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당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수요가 2023년에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수요도 지속될 전망이다.

| 그림 Ⅱ-35 | 연구개발 전담부서 추이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그림 Ⅱ-36 | 컨텐츠 산업 연구개발인력 추이



자료: 한국컨텐츠진흥원

콘텐츠 부문 투자도 지속성장할 전망이다. 최근 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 직무 종사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연구개발인력이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중 예정된 주요 OTT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계획은 기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표 Ⅱ-16 | 국내 주요 OTT기업의 콘텐츠 투자 계획

기업	내용
웨이브	2025년까지 자체 콘텐츠 제작에 1조 원 투자 계획
티빙	2023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4,000억 원 투자 계획
CJ ENM	2025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5조 원 투자 계획
KT스튜디오지니	2024년까지 콘텐츠 제작 및 방영에 5,000억 원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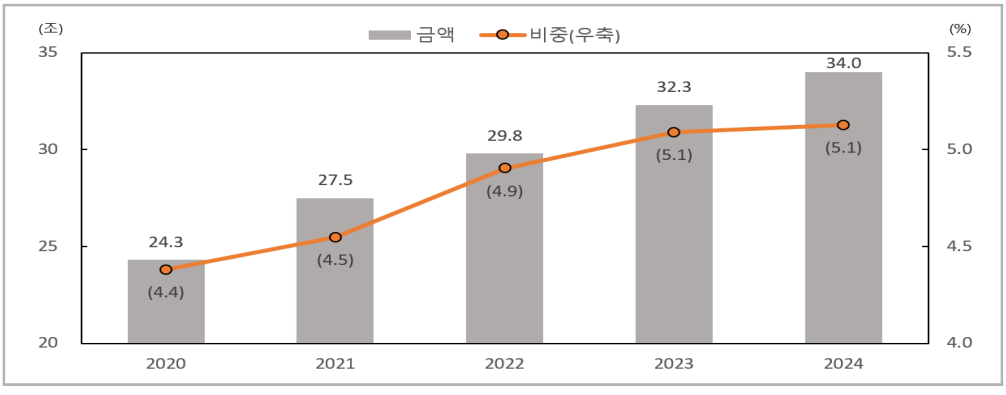
자료: 언론기사 종합

한편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 확대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주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39]할 때, 제조업의 업황 둔화에 따른 실적악화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증가세를 둔화시킬 전망이다.

제2절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관련 정책변수 검토

정부의 R&D 예산 및 세제지원은 연구개발(R&D)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편성된 R&D 예산은 32.3조 원이며, 이는 전체예산대비 5.1% 수준이다. 그리고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2023년 2월)을 통해 기업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하여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그림 Ⅱ-37 | 정부 R&D 예산 규모 및 비중 추이



주1: 본예산 확정안 명목기준이며, ′24년은 계획기준
주2: 비중은 전체예산 대비 R&D 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39) KISTEP(2022)에서는 2021년 기준 총연구개발비(102조 원)에서 기업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9.1%이며, 기업투자에서 제조업 차지하는 비중은 86.1%인 것으로 조사

| 표 Ⅱ-17 |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관련 세제지원 정책

①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분야 및 기술	3개 분야 36개 기술	4개 분야 + 2개 분야* 43개 기술
내용 (추가 및 확대)	3개 분야: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신규 추가 분야 :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신규 추가 기술 : 7개 - 반도체(2개), 디스플레이(5개) 범위 확대 기술 : 반도체(5개)
②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분야 및 기술	13개 분야 260개 기술	13개 분야 272개 기술
내용 (추가 및 확대)	13개 분야: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첨단 ⑫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신규 추가 기술 : 12개 - 지능정보(1개), 에너지·환경(2개), 융복합소재(1개), 탄소중립(8개) 범위 확대 기술 : 4개 - 에너지환경(2개) 탄소중립(2개)

자료: 기획재정부

제8장 대외거래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총수출(국민계정)**은 전년(3.2%)보다 0.5%p 낮은 2.7%, **총수입(국민계정)**은 전년(3.7%)보다 0.5%p 높은 4.2% 증가할 전망
- **2023년 통관기준 상품수출 및 수입**은 각각 4.8%, 6.0% 감소 예상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f]	하반기[f]	연간[f]
총수출	10.8	6.0	0.6	3.2	-0.5	5.7	2.7
총수입	10.1	3.4	4.0	3.7	3.2	5.0	4.2
상품수출(통관)	25.7	15.6	-2.4	6.1	-10.2	1.0	-4.8
상품수입(통관)	31.5	26.4	12.4	18.9	-6.8	-5.2	-6.0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IT경기 회복	• 글로벌 경기 및 교역 둔화
•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 개선	•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 가격 하락
	• 국제유가 등 원자재 불안 지속

2022년 총수출(국민계정, 실질)은 3.2% 증가했으며, 총수입(국민계정, 실질)은 3.7% 증가했다. 통관기준으로 살펴보면 상품수출은 6.1% 증가했으며, 상품수입은 18.9% 증가했다. 총수출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시현했지만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수입은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서 상반기에 3.4%, 하반기에 4.0% 증가했다.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 표 Ⅱ-18 |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감률 전망(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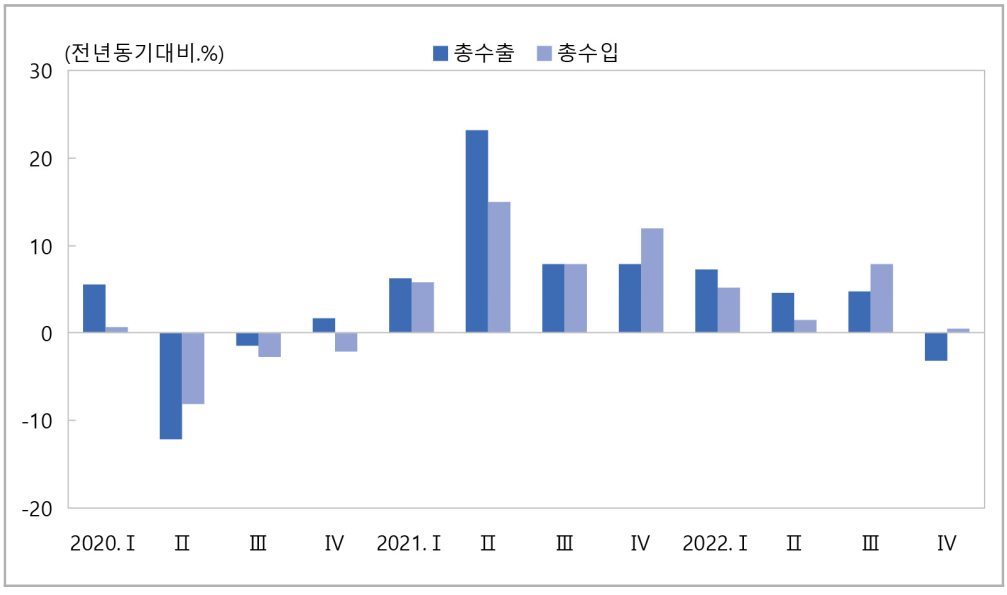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f	하반기f	연간f
총수출	10.8	6.0	0.6	3.2	-0.5	5.7	2.7
총수입	10.1	3.4	4.0	3.7	3.2	5.0	4.2
상품수출(통관)	25.7	15.6	-2.4	6.1	-10.2	1.0	-4.8
상품수입(통관)	31.5	26.4	12.4	18.9	-6.8	-5.2	-6.0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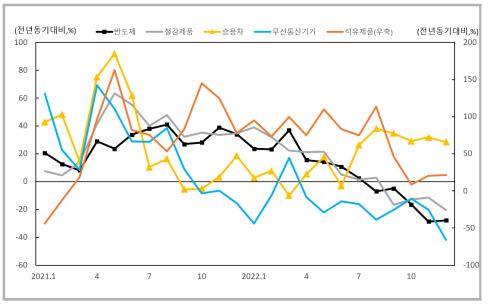
총수출은 2023년에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지난 전망(4.1%)보다 1.4%p 낮은 수준으로, 세계수입수요 둔화와 주요수출품목의 하강속도를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였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에는 -0.5%, 하반기에 5.7% 성장하면서 상저하고 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 그림 Ⅱ-38 | 총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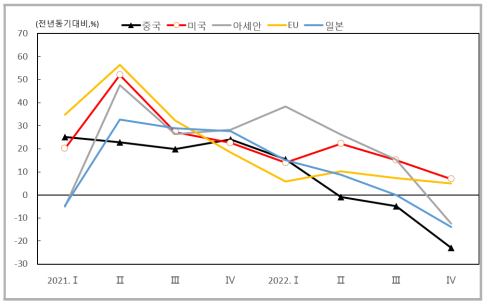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그림 Ⅱ-39 | 주요품목 통관수출 증가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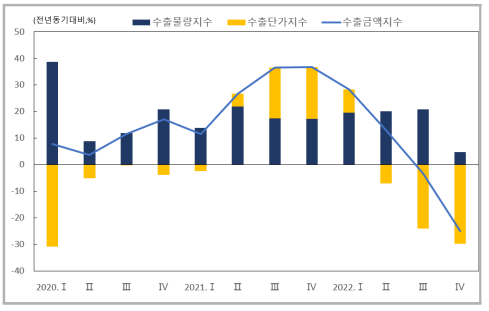
| 그림 Ⅱ-40 | 주요 수출지역별 통관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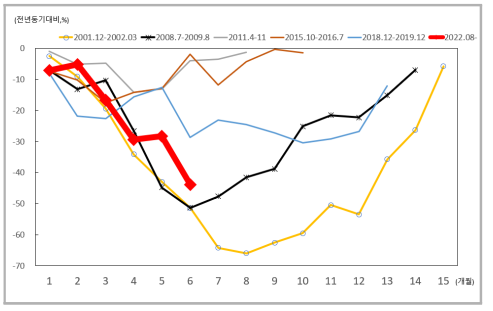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면서 당분간 우리 수출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요 국제기구[40]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3%로 2022년 3.1%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며, 세계교역량도 2023년 2.0%로 전년 4.7%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그림 Ⅱ-41 | 반도체 수출 금액, 물량, 단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Ⅱ-42 | 반도체 수출 하강속도 비교



주: 5개월 이상 하락한 시기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등 IT관련 주요 수출산업의 둔화흐름은 2023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41]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IT경기도 일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규 서버용 CPU 출시와 D램 세대교체(DDR4→DDR5, double data rate)에 따른 데이터센터 서버교체 수요는 메모리반도체 수요회복과 가격안정에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42]

40) IMF('23년 1월, 2.9%), 세계은행('23년 1월, 1.7%), OECD('22년 11월, 2.2%)
41) D램 고정가격(8GB(1Gx8) 2666 기준)은 '22년 1월 3.77달러에서 12월에 2.00달러로 하락하였으며, 23년 2월에는 1.80달러까지 내렸다.

중국의 경제 재개방도 하반기에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중국의 성장세 약화 등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국 수출입비중이 높은 우리 무역구조를 고려할 때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과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관련 조치강화는 2023년도 수출회복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43)]

총수입은 2023년에 4.2%로 전년(3.7%)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여, 2022년 하반기(4.0%)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품목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원유 등 원자재가격도 하락하면서 관련 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본다. 하반기에는 수출경기가 개선되면서 수입수요도 함께 늘어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표 II-19 | 원유수입 추이

(억달러, %, 백만배럴, 달러/배럴)

	2021				202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입금액	128	164	176	202	235	271	310	244
(증가율)	(-22.8)	(128.9)	(69.0)	(96.9)	(83.4)	(65.5)	(75.6)	(20.8)
배럴	220	241	236	248	254	236	275	248
도입단가	58	68	75	81	93	115	113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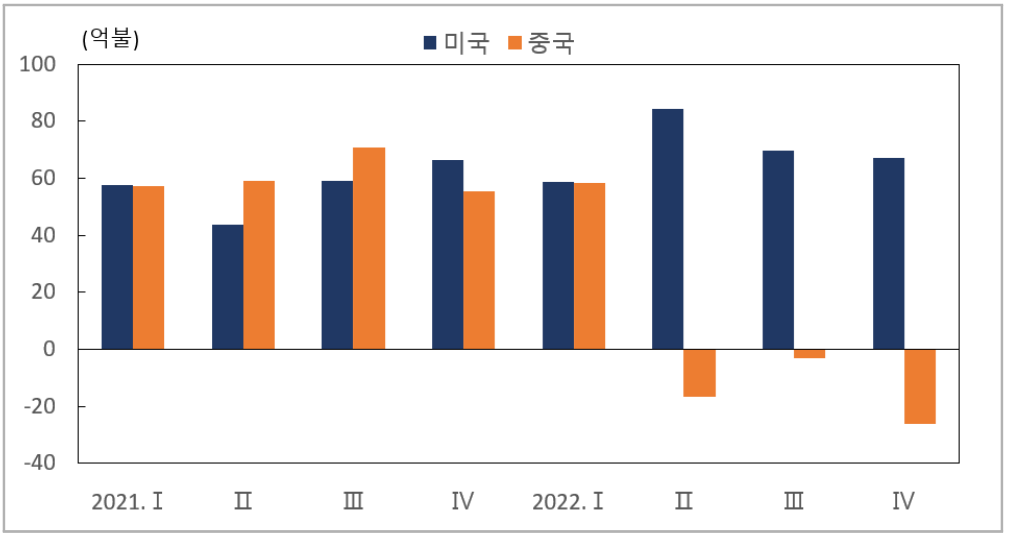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통관기준 수출 및 수입금액 증가율은 각각 -4.8%, -6.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IT 제품 단가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수입에서는 원유 등 원자재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추이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42) 반도체(HS 8542) 수출에서 비메모리반도체(HS 854231) 비중(관세청) :
[2019] 44.0% → [2020] 46.2% → [2021] 45.1% → [2022] 47.2%
반도체(HS 8542) 수출에서 메모리반도체(HS 854232) 비중(관세청) :
[2019] 41.9% → [2020] 38.8% → [2021] 37.4% → [2022] 33.7%

43) [BOX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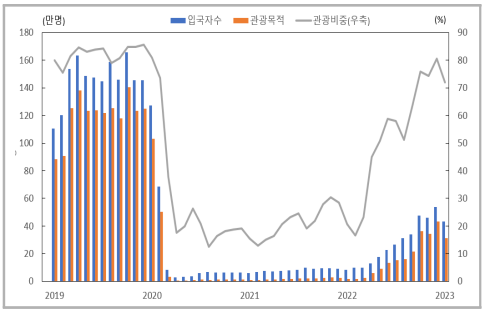
| 그림 Ⅱ-43 | 대미·중국 무역수지 추이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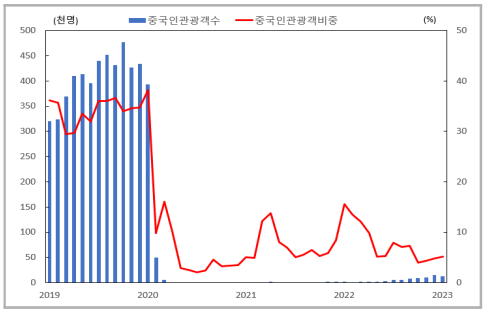
2023년 경상수지는 200억 달러 흑자로 전년(298억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수출둔화로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운송수지는 전년도 흑자규모를 이어가겠으나, 외국인 관광객 수보다 해외관광객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는 확대될 예상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배당·이자수익이 늘면서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GDP대비 경상수지흑자비율은 0.7%로 2022년(1.8%)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 그림 Ⅱ-44 | 관광목적 입국자 수 및 비중



자료: 한국관광공사

| 그림 Ⅱ-45 |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



주: 전체 관광객 수 대비 중국인 관광객 수
자료: 한국관광공사

[BOX 4]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관련 주요이슈

2022년 8월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약 6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위해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공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반도체 촉진법(FABS act)도 함께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3년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일정과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심사기준은 ①경제·국가안보 ②상업적 타당성 ③재무상태 ④투자이행 역량 ⑤인력개발 ⑥그 외 파급효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 반도체 양적 생산능력을 일정수준 이상 확장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달았다. 세부 지침이 공개된 이후에도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나, 핵심기술 및 영업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쟁점	관련 내용
국가안보 지원	미 국방부에 실험 및 생산시설 접근권 제공
공급과잉 해소 협력	생산제품의 수요/공급 전망 등 제출
가드레일(안전장치)	중국 등 우려국에 10년간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금지 (첨단반도체 5% 이상, 범용반도체 10% 이상) 및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초과이익환수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환수
인력양성	공장 직원 및 건설 노동자 보육서비스 제공 및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먼저 경제·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은 기술유출 위험을 높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생산장비 대수, 배치 등 제조시설의 설비 자체도 핵심기술인만큼, 반도체 공정 노하우, 기술력 등 관련 기밀유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제품생산계획, R&D 및 투자비 현황, 수익성 지표 등 민감한 경영정보 제출의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중국 투자와 수출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기업경영과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첨단반도체의 생산능력은 5% 이상, 범용반도체는 10% 이상 확장이 불가하며 다른 국가에 보조금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생산능력뿐만 아니라 기술적 업그레이드 등의

투자를 전면 금지한다는 기존안보다는 완화됐지만, 반도체 생산의 대중 의존도가 높고 기투자액이 많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피해가 여전히 우려된다. 또한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대중 반도체 장비수출 통제는 중국 공장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비용이 높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까지 있어 보조금 수령의 혜택은 낮아질 전망이다.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수익전망치를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또한 미국산 철강 및 건설자재 사용계획, 보육 등 인력양성 계획 제출의무는 건설비, 인건비를 더욱 높여 투자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부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불합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례없는 규모의 국가 보조금 지원은 뿌리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TSMC 등 주요 경쟁기업은 미국 보조금 정책을 수용하고 있어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가격 경쟁력 하락과 추가 보복조치 등의 불이익도 예상된다.

제9장 소비자물가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소비자물가**는 전년(5.1%)보다 1.6%p 하락한 3.5% 상승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f	하반기f	연간f
2.5	4.6	5.6	5.1	4.1	3.0	3.5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 국내 경기둔화
•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 국제원자재가격 안정화
• 공공요금 인상	•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절

2022년 소비자물가는 상반기(4.6%)와 하반기(5.6%)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1%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상품물가가 연간 6.7%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의 높은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상품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가공식품(7.8%), 전기·가스·수도(12.6%)[44], 석유류(22.2%) 등의 품목에서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서비스물가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재료비·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등으로 개인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연간 3.7% 상승하였다.

2022년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원자재가격 상승의 2차 파급효과[45], 개인서비스물가의 높은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연간 3.6%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44) 2022년 2/4분기부터 전기료(4·7·10월), 도시가스(4·5·7·10월) 등 주요 공공요금이 순차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기·수도·가스 요금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10%p(2022.1월)에서 2.14%p(2022.12월)까지 상승.

45) 원재료 비용인상→제품값 전가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효과

| 표 Ⅱ-20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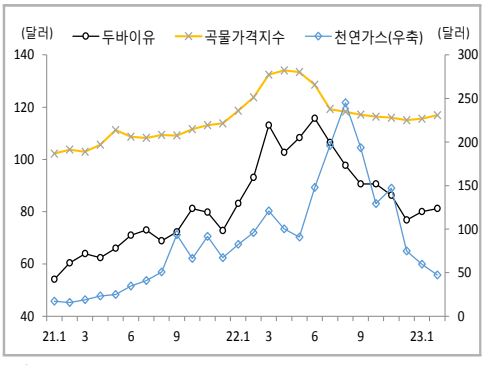
	2021	2022				
		1/4	2/4	3/4	4/4	연간
소비자물가	2.5	3.8	5.4	5.9	5.3	5.1
상품	3.1	4.7	7.6	7.9	6.5	6.7
서비스	2.0	3.0	3.5	4.1	4.1	3.7
근원물가	1.4	2.8	3.5	4.0	4.2	3.6

자료: 통계청

다만 상품물가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원자재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오름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2022년 12월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국제곡물가격지수는 2022년 12월 들어 연간 최저치(115.0)를 기록하였다. 유럽천연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가스 선물가격은 러시아 제재 이후 한때 장중 최고치까지 치솟았으나 예년보다 따듯한 겨울 날씨 등으로 2023년 들어 50달러/MWh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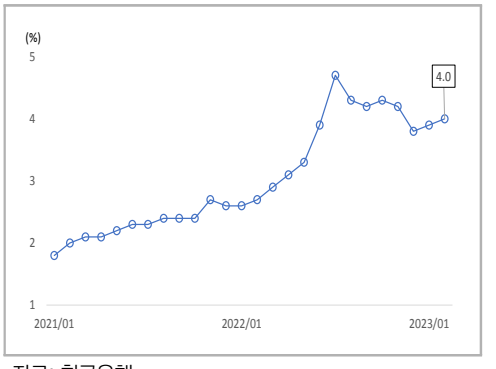
서비스물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주거비(집세)를 중심으로 상승률이 둔화[46] 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경우 2022년 7월(4.7%)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공공요금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47]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 그림 Ⅱ-46 |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World Bank

| 그림 Ⅱ-47 |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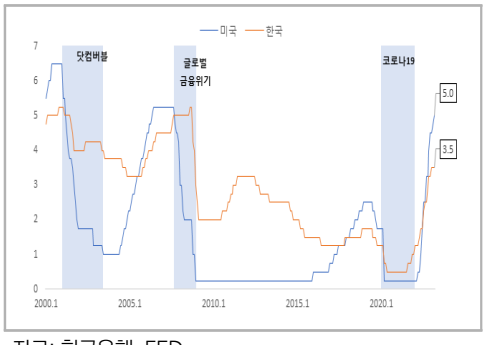
46) 전세가격지수(전월대비,%): (2022.11월) -1.6 → (12월) -2.4 → (2023.1월) -2.3
월세가격지수(전월대비,%): (2022.11월) -0.1 → (12월) -0.3 → (2023.1월) -0.3

47) 원/달러 환율 추이: (2022.12.30.)1,267.30원/달러 → (2023.1.31.)1,228.70원/달러 → (2023.2.28.)1,317.40원/달러

2023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폭 축소(37%→25%), 누적된 비용인상압력의 시차효과[48]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국제원자재가격 안정화, 전년도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면서 전년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종합하면 2023년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4.1%, 하반기 3.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연간으로는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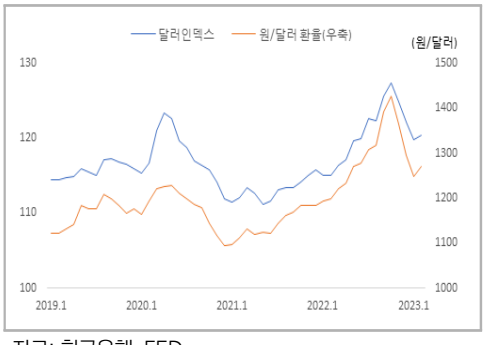
2023년 소비자물가의 주요 상방요인으로는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주요 공공요금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2023년 3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1.50%p까지 벌어졌으며, 이와 함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주요 6개국[49]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2023년 2월부터 상승하고 있어 1%p를 넘어서는 한·미 금리차가 지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평가절하)은 수입물가를 통해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그림 Ⅱ-48 | 한·미 금리차 추이



자료: 한국은행, FED

| 그림 Ⅱ-49 |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FED

48) 2010년 이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간 시차상관계수는 생산자물가(-2기)와 소비자물가(0기), 생산자물가(-1기)와 소비자물가(0기)가 약 0.8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생산자물가가 1~2기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함. 최근 2개월간 생산자물가의 평균상승률은 약 5.6%로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생산자물가의 시차효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2023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산자물가상승률(%): (2022.11월) 8.1 → (2022.12월) 6.3 → (2023.1월) 4.8

49)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원자재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2023년 소비자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부터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중국 수요 비중이 높은 국제원자재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다. 또한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원유 감산 조치에 나서면서[50] 공급 차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간 누적되어 온 비용부담을 반영하여 2023년 중 주요 공공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는 점 또한 소비자물가의 추가적인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택시요금은 2023년 2월부터 기본요금과 운행비가 인상되었으며, 전기·가스 요금 또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 표 Ⅱ-21 | 2023년 공공요금 인상계획

	현재	인상안	인상시기
지하철(서울)	1250원	1550~1650원	하반기
버스(서울)	1200원	1550~1600원	하반기
택시요금	3800원	4800원	2월
전기요금	2022년 말 대비 13.1원/kWh 인상		1분기
가스요금	1MJ 당 8.4~10.4원 인상		미정
유류세 인하폭 축소	37% → 25%		1월 1일

자료: 보도자료 종합(2023.2)

2023년 소비자물가의 하방요인으로는 국내 경기둔화, 국제원자재가격 안정화,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절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국내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51] 수요측 물가 압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원자재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최근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 공공요금[52]을 상반기 중 동결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이연·분산할 것을 요청하였다(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2.15.). 이에 따라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시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연기되었다. 주요 공공요금 인상 시기가 예정보다 늦춰질 경우 국내물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0) 러시아는 OPEC+와의 협의 없이 3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씩 자체적으로 감산한다고 발표(2023.3.1.)
51)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2020=100): (2022.11월) 100.5 → (2022.12월) 99.8 →(2023.1월) 99.4
52) 고속도로·철도(도로공사, 코레일, SR), 우편(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

제2절 소비자물가 관련 정책변수 검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12.21.)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에너지 부문 세제지원 조치,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 공공요금 가격안정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는 올해 4월까지 연장되었으나 일부 품목(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물가의 둔화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급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경우 농축수산물 부문 할당관세 조치 연장, 농산물 수급조절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주요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상 시기를 상·하반기로 분산하는 방안 또한 추진되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도 기저효과, 국제원자재가격 안정화 등의 요인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안정화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II-22 |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위한 경제정책방향

구분	내용
에너지 가격	•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37%→25%) • 경유·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2023.4.) •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감면조치 연장(~2023년 상반기)
농축수산물 가격	•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 •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23%까지 확대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할인지원 규모 확대(590억 원→1,690억 원) • 무기질 비료 차액지원 및 사료구매자금 저리지원(1.8%) 추진
농산물 수급조절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출범 등 유동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유동구조 고도화 • 농산물 긴급반입시 수입절차 간소화, 주요 농축산물 국영무역 수입선 사전 발굴·확보 등으로 수급불안 적시 대응
공공요금 안정화	• 상방압력이 높은 공공요금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추진 •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물가안정 활동 유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12.21.)

2023 경제전망 Ⅰ

지출부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II

지출부문별 주요국 동향 및 전망

제1장 경제성장률

제2장 소비

제3장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제4장 대외거래

제5장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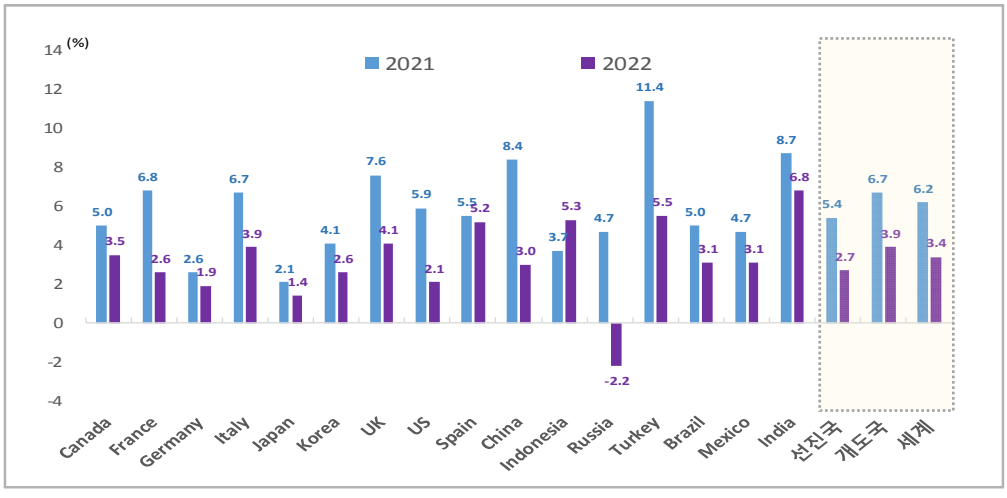
제1장 경제성장률

2022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하반기 이후 빠르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은 2021년 6.2%에서 2022년 3.4%로 2.8%p 하락하였다.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유사한 하락폭(선진국 5.4%→2.7%, 개도국 6.7%→3.9%)을 나타냈다.

2022년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은 미국(5.9%→2.1%), 영국(7.6%→4.1%), 프랑스(6.8%→2.6%) 등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반면 독일(2.6%→1.9%), 일본(2.1%→1.4%), 한국(4.1%→2.6%), 스페인(5.5%→5.2%) 등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폭을 보였다.

2022년 주요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중국(8.4%→3.0%), 러시아(4.7%→-2.2%), 튀르키예(11.4%→5.5%) 등에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브라질(5.0%→3.1%), 인도(8.7%→6.8%), 멕시코(4.7%→3.1%) 등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폭을 기록하였고, 인도네시아(3.7%→5.3%)는 성장세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 그림 Ⅲ-1 | 2022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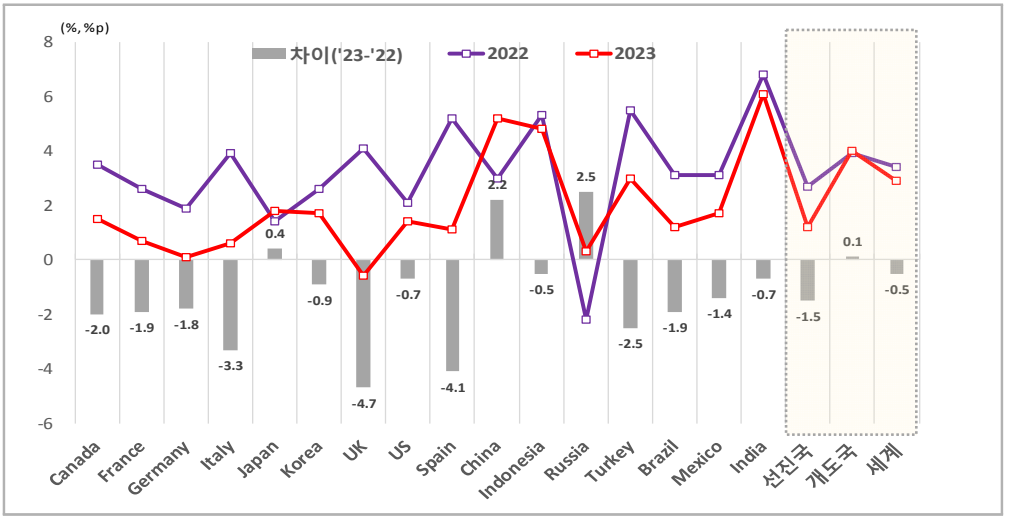


자료: IMF, IFS database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2023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2023년 1월 IMF 전망 기준)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제외하곤 2022년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경제성장률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2년 3.4%에서 2023년 2.9%로 0.5%p 하락할 전망이다. 선진국은 2022년 2.7%에서 2023년 1.2%로 1.5%p 하락하는 반면 신흥개도국은 동기간 3.9%에서 4.0%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그림 Ⅲ-2 | 2023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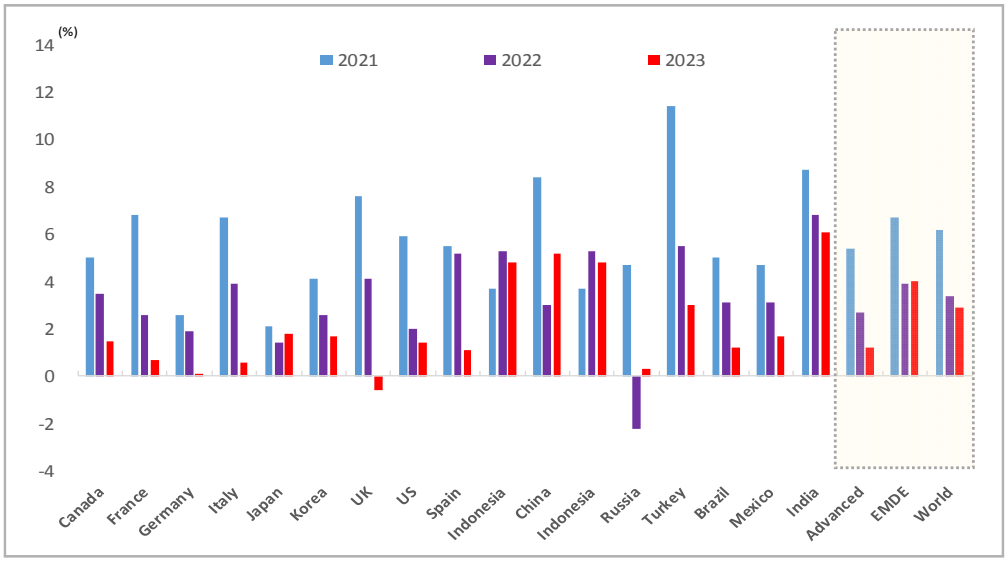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3. 1월)

2023년 선진국의 성장률 하락세는 영국(4.1%→－0.6%), 스페인(5.2%→1.1%), 이탈리아(3.9%→0.6%) 등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영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긴축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 기조 강화, 에너지가격 지속 등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난 2022년 10월에 비해 0.9%p 하향 조정하였다. 캐나다(3.5%→1.5%), 프랑스(2.6%→0.7%), 독일(1.9%→0.1%) 등에서도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 둔화세(1.5%p)보다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미국(2.1%→1.4%)과 한국(2.6%→1.7%)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되고, 일본(1.4%→1.8%)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의 2023년 성장률은 완화적인 경제정책 기조 유지와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증가 등으로 기업투자가 늘며 전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2023년 주요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러시아(−2.2%→0.3%)와 중국(3.0%→5.2%)에서 202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2022년 중국의 성장률은 3.0%를 기록하며 지난 4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돌았으나, 2023년에는 재개방의 영향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늘며 5.2% 성장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2023년 성장률은 비교적 견조한 유가와 비러시아제재국가 등에 대한 수출회복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5.3%→4.8%)의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하락하고, 브라질(3.1%→1.2%), 멕시코(3.1%→1.7%), 인도(6.8%→6.1%) 등에서는 2022년에 이어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그림 Ⅲ-3 | 2021~2023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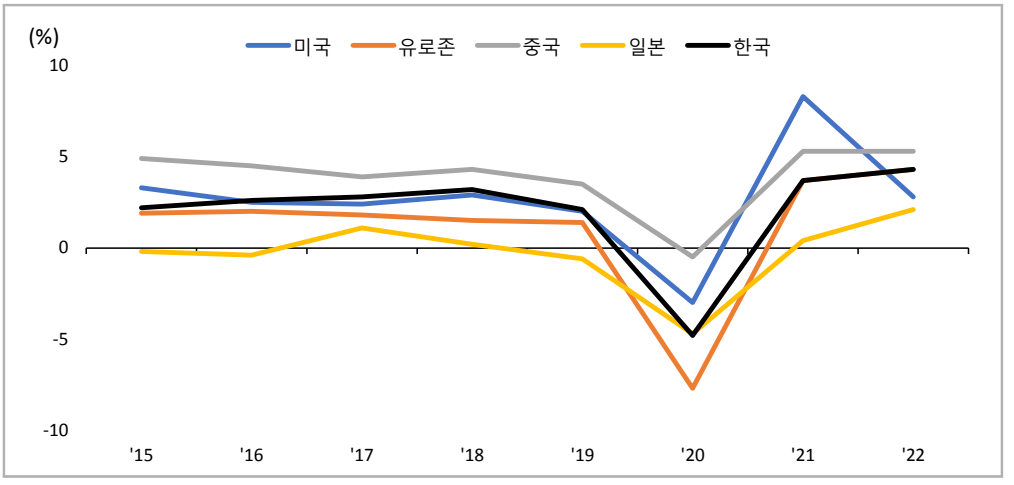


주: 2023년은 IMF(2023. 1월) 전망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3. 1월)

제2장 소비

2022년 주요국 민간소비는 견조한 회복흐름을 나타냈다. 2022년 주요국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3.8%로 코로나19 이전(2015년~2019년)의 2.2%에 비해 높았다. 미국은 2021년(8.3%)보다는 낮았으나 2.8%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유로존, 일본, 한국은 각각 4.3%, 2.1%, 4.3% 증가하여 2021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 그림 Ⅲ-4 | 주요국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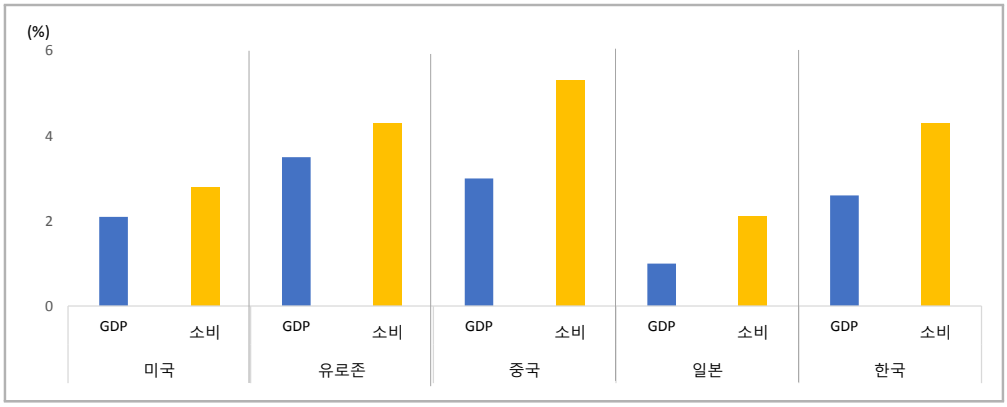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2022년에 주요국 민간소비는 두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GDP를 0.7%p~2.3%p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이다. 민간소비는 2020년에 감염확산과 도시봉쇄 조치 등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며 GDP보다 빠른 회복 양상을 나타냈다. 둘째, 서비스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감염병 확산기에는 내구재 등 소비가 회복을 이끌었으나 대면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며 서비스 소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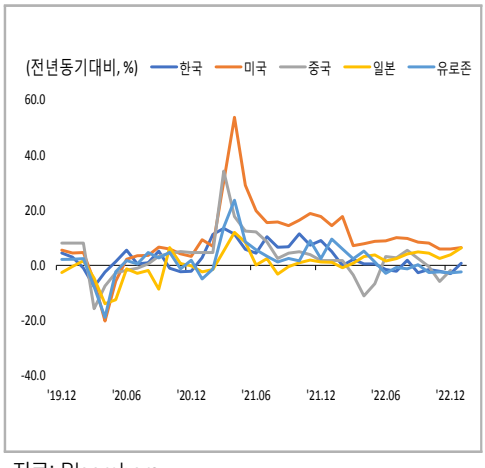
이진희 경제분석관(jinhee@assembly.go.kr, 6788-4656)

| 그림 Ⅲ-5 | 2022년 주요국 민간소비 및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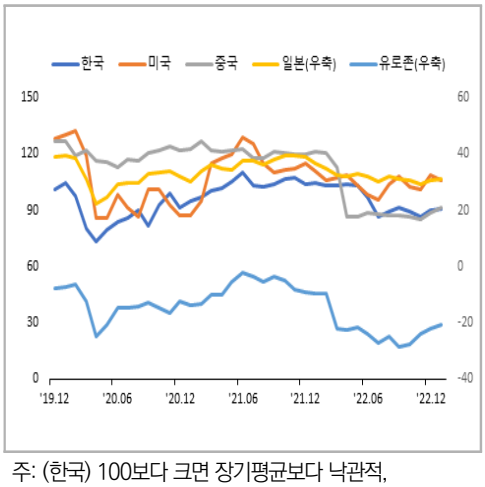
2023년 주요국 민간소비는 2022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높은 물가가 지속되며 구매력이 제약되고 취업자 수 증가세와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며 고용여건도 약화되고 있다. 민간소비의 둔화 조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주요 소비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3/4분기 이후 소매판매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 그림 Ⅲ-6 | 주요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Ⅲ-7 | 주요국 소비자심리 지수



주: (한국)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미국) 컨퍼런스보드(1985=100) 기준,
(중국) 1997 = 100,
(일본) 50 초과시 낙관적,
(유로존) 장기평균(-11)보다 높으면 낙관적
자료: Bloomberg

제3장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주요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2021년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주요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55]

신흥개도국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 중 신흥개도국으로의 직접투자(FDI)가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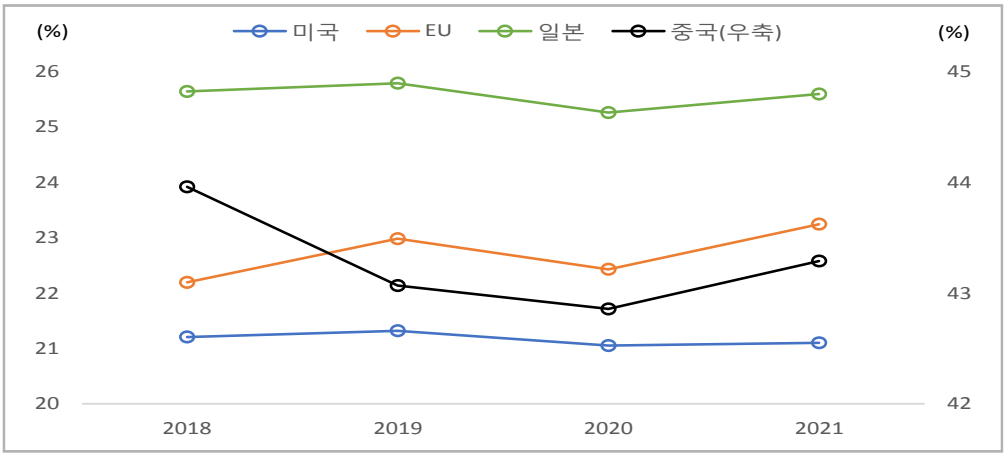
| 표 Ⅲ-1 |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추이

(%)

	2018	2019	2020	2021
세계	26.5	26.5	26.5	27.1
선진국	22.4	22.7	22.3	22.7
신흥개도국	32.7	32.3	32.6	33.3

자료: IMF WEO(2022.10.)

| 그림 Ⅲ-8 | 국가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추이



자료: CEIC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53) FDI 규모(2019년→2020년, 10억 달러): 세계(1,489→859), 선진국(730→229), 신흥개도국(702→616

2023년 주요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평균 21~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45%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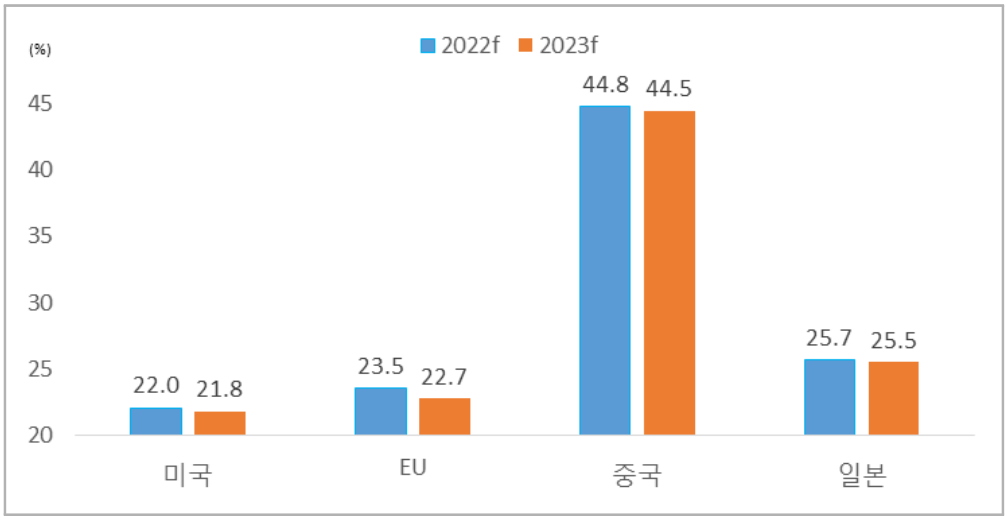
| 표 Ⅲ-2 |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전망

(%)

	2022	2023
세계	28.0	27.9
선진국	23.0	22.6
신흥개도국	34.3	34.2

자료: IMF WEO(2022.10.)

| 그림 Ⅲ-9 | 국가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전망



자료: IMF WEO(202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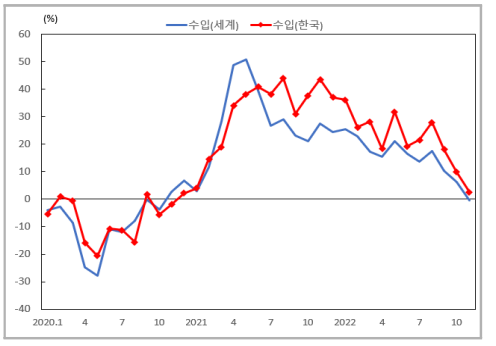
세계의 수출입(통관)증가율은 2022년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수출은 2022년에(11월 누적 기준) 14.1% 성장하였는데, 상반기 18.8%, 하반기 9.0% 증가하였다. 수입은 같은 기간 중 14.7% 성장하였는데, 상반기 19.6%, 하반기 9.3% 증가하였다.[54]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세계 수출입과 밀접한 움직임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세계 수출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하강하고 있으며, 수입증가율은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세계 수입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그림 Ⅲ-10 | 세계 및 우리나라 수출

자료: 관세청, DOTS

| 그림 Ⅲ-11 | 세계 및 우리나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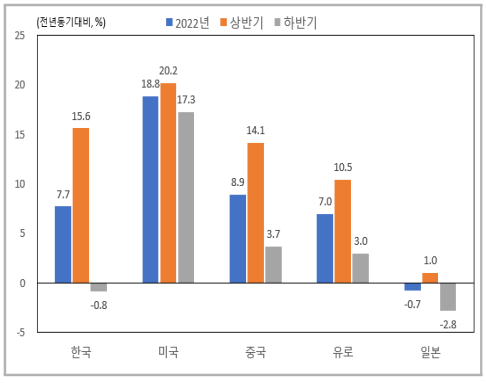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DOTS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상반기 20.2%, 하반기 17.3%로 상하반기 모두 높은 수출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하반기에 들어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중국(14.1%→3.7%)과 유로지역(10.5%→3.0%)은 하반기 중 수출증가율이 큰 폭 하락하였으며, 일본(3.0%→-2.8%)은 하반기 중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미국의 수입은 2022년 상반기 21.6%, 하반기 10.6%, 연중으로는 16.3% 증가하였다. 유로(20.5%→10.1%), 중국(6.4%→-2.2%)에서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상반기 21.4%, 하반기 14.7%로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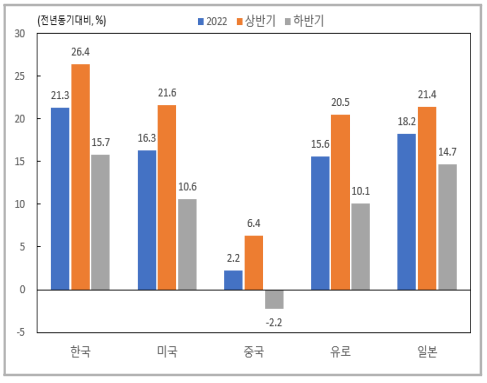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 그림 Ⅲ-12 | 주요국 통관수출증가율



주: 2022년 11월 기준
자료: 관세청, DOTS

| 그림 Ⅲ-13 | 주요국 통관수입증가율



주: 2022년 11월 기준
자료: 관세청, DOTS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2021년 6,226억 달러 적자에서 2022년에는 7,417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독일은 2021년 2,396억 달러에서 1,022억 달러로 흑자폭이 감소하였으며, 일본(1,655억 달러→778억 달러)도 흑자폭이 감소하였다. 프랑스(-51억 달러→-492억 달러)와 이탈리아(579→-184억 달러)는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2021년 1,989억 달러 흑자에서 2022년 3,107억 달러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 표 Ⅲ-3 | 주요국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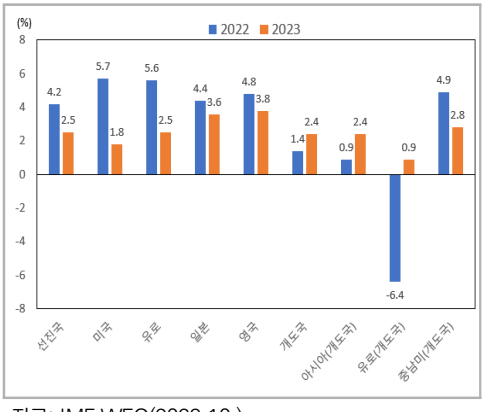
	2022			2021	2022
	1분기	2분기	3분기	1-3분기	1-3분기
한국	154	94	-7	674	241
미국	-2,470	-2,449	-2,498	-6,226	-7,417
중국	889	775	1,443	1,989	3,107
독일	587	244	191	2,396	1,022
프랑스	-142	-146	-205	-51	-492
이탈리아	-65	-27	-92	579	-184
일본	423	183	172	1,655	778

자료: 한국은행, IMF

IMF에 따르면[54], 2023년 선진국의 수출은 2.5%, 수입은 2.0% 증가하여 수출·수입 모두 증가세가 2022년(수출 4.2%, 수입 6.0%)에 비해 약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2023년 수출 증가율은 1.8%로 전년(5.7%)에 비해 낮아지겠으며 수입도 2022년 9.0%에서 -1.2%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유로지역은 수출(5.6%→2.5%)과 수입(6.0→3.0%) 모두 둔화될 예상이다. 일본의 수출은 4.4%→3.6%, 수입은 4.9%→2.0%로 둔화될 전망이다. 영국도 수출이 4.8%→3.8%, 수입은 8.4%→3.4%로 둔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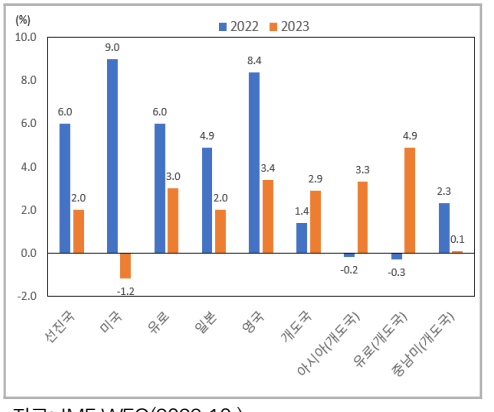
2023년 신흥개도국의 수출은 2.4%, 수입은 2.9% 늘어나 2022년(수출 1.4%, 수입 1.4%)보다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시아지역 신흥개도국 수출은 0.9%→2.4%로, 수입은 -0.2%→3.3%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며, 유로지역 신흥개도국은 수출이 -6.4%→0.9%, 수입이 -0.3%→4.9%로 높아질 예상이다. 반면에 중남미 신흥개도국에서는 수출 4.9%→2.8%, 수입 2.3%→0.1%로 둔화될 전망이다.

| 그림 Ⅲ-14 | 2023년 주요국 수출전망



자료: IMF WEO(2022.10.)

| 그림 Ⅲ-15 | 2023년 주요국 수입전망



자료: IMF WEO(2022.10.)

54) IMF WEO(2022.10.)

제5장 물가

주요국의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집행된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21~2022년 기간 동안 크게 상승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유로 지역에서는 2021년부터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미국 8.0%, 유로지역 9.2% 등 매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중국의 경우 소비자물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로[55] 2021년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며, 일본은 장기간 이어진 디플레이션과 낮은 경제성장률[56]로 인해 2021년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중국(2.0%)과 일본(2.5%) 역시 2022년에는 2.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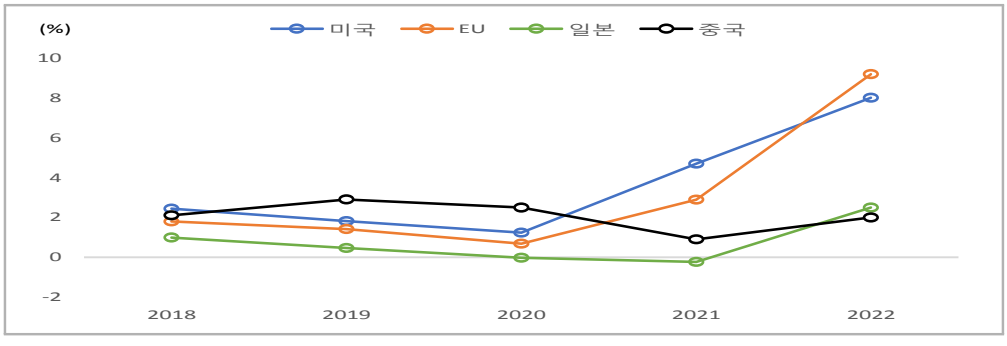
| 표 Ⅲ-4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전년대비, %)

	2018	2019	2020	2021	2022
세계	3.6	3.5	3.2	4.7	8.8
선진국	2.0	1.4	0.7	3.1	7.2
신흥개도국	5.0	5.1	5.1	5.9	9.9

자료: IMF WEO(2022.10.)

| 그림 Ⅲ-16 | 국가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CEIC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55) 2018년~2020년 기간 중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돼지고기 생산량이 안정화되면서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

56) 일본 경제성장률(전년대비, %, World Bank): (2019년) -0.2 → (2020년) -4.5 → (2021년) 1.7

2023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대비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신흥개도국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 물가상승률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신흥개도국 통화가치 하락)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에서는 2023년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경우에는 2022년(2.0%)보다 2023년(2.2% 전망)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의 재개방(2022.12월)으로 2023년 중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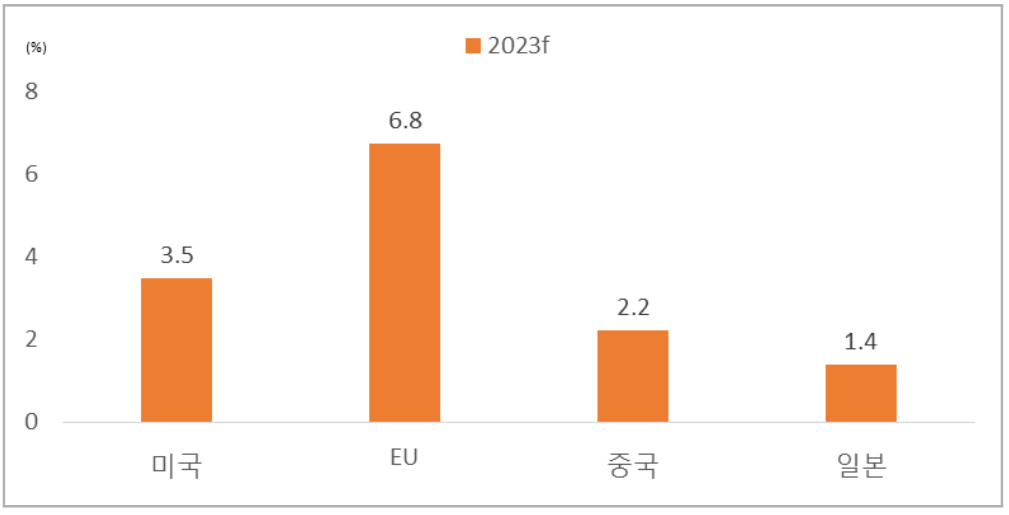
| 표 Ⅲ-5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전년대비, %)

	2023
세계	6.5
선진국	4.4
신흥개도국	8.1

자료: IMF WEO(2022.10.)

| 그림 Ⅲ-17 | 국가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자료: IMF WEO(2022.10.)

2023 경제전망 Ⅰ
- 지출 부문 -
(2023 Economic Outlook Ⅰ)

발 간 일 2023년 3월 31일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디자인·인쇄 (주)명문기획 (tel 02 · 2079 · 9200)

ISBN 979-11-6799-115-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6-001627-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